5.18민주화운동 40주년 학술심포지움

# 5.18민주화운동과 기독교

Ⅲ 주　　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호남신학대학교 • 전남대5.18연구소

Ⅲ 일　　시 : 2020년 9월 5일(토) 13:00-16:30

Ⅲ 후　　원 : 5.18기념재단 • 문용동전도사기념사업회

Ⅲ 온라인 진행 및 생중계(https://youtu.be/pLKV5oJEqC8)

#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학술심포지엄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40th Anniversary Symposium

## 5.18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2020 9.5(토)**
**오후1시~4시30분**

사회: 홍승표(한국기독교역사학회 연구이사)

| 순서 | | 발표 | 토론 |
|---|---|---|---|
| 1섹션 | 제1발표 | 5.18민주화 운동과 개신교<br>최상도(호신대 교수) | 박진우(5.18기념재단 연구실장) |
| | 제2발표 | 1980년 5월 광주와 김대중 구명운동, 그리고 자유·공조문제 북미주 개신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br>고지수(이화여대 박사후연구원) | 한운석(고려대 교수) |
| | 제3발표 |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우리는 무엇을 보았고 보지 못했나: '세기의 재판'을 통해 살펴보는 정의와 화해의 과제<br>김상덕(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 | 권혁률(성공회대 연구교수) |
| 2섹션 | 제4발표 | 5.18민주화운동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br>손승호(명지대 객원교수) | 박현정(문체부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
| | 제5발표 | 실천자원으로써 5.18 : 5.18전후 광주YMCA/YWCA의 변화<br>유경남(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 한규무(광주대 교수) |
| | 제6발표 | 「5·18과 한국기독교연구」를 위한 試論 – 사회변동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한 역사해석학<br>이치만(장신대 교수) | 박태식(성공회대 교수) |
| 3섹션 | | 종합토론 / 좌장 :박용수 (전남대5.18연구소 전임연구원, 한신대 초빙교수) | |

※ 본 심포지엄은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생중계됩니다.
https://youtu.be/pLKV5oJEqC8

·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호남신학대학교, 전남대5.18연구소
· 후원 : 5.18기념재단, 故문용동전도사순교기념사업회

심포지엄 생중계

# 목 차


| 일정표 | | |
|---|---|---|
| 제1발표 | 5.18민주화운동과 한국교회:<br>광주지역 교회의 활동, 연구동향,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 1 |
| 제1토론 | | 21 |
| 제2발표 | 1980년 5월 광주와 김대중 구명운동, 그리고 자유공조<br>-북미주 개신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 23 |
| 제2토론 | | 44 |
| 제3발표 |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우리는 무엇을 보았고 보지 못했나:<br>'세기의 재판'을 통해 살펴보는 정의와 화해의 과제 | 46 |
| 제3토론 | | 60 |
| 제4발표 | 5.18민주화운동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64 |
| 제4토론 | | 76 |
| 제5발표 | 실천자원으로써의 5·18<br>: 5·18전후 광주YWCA/YMCA의 변화 | 80 |
| 제5토론 | | 94 |
| 제6발표 |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한국기독교 연구」를 위한 試論<br>사회변동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한 역사해석학 | 95 |
| 제6토론 | | 111 |
| 종합토론 | | 113 |

# 일 정 표

| 시 간 | 내 용 | |
|---|---|---|
| 사회: 홍승표(한국기독교역사학회 연구이사) | | |
| 13:00-13:05 | 인 사 | |
| 13:05-13:20 | 제1발표: 5.18민주화운동과 한국교회 - 최상도(호남신대 교수) | |
| 13:20-13:25 | 제1토론: 박진우(5.18기념재단 연구실장) | |
| 13:25-13:40 | 제2발표: 1980년 5월 광주와 김대중 구명운동, 그리고 자유공조<br>- 고지수(이화여대 박사후 연구원) | |
| 13:40-13:45 | 제2토론: 한운석(튀빙겐한국학센터장) | |
| 13:45-14:00 | 제3발표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우리는 무엇을 보았고 보지 못했나<br>- 김상덕(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 | |
| 14:00-14:05 | 제3토론: 권혁률(성공회대 연구교수) | |
| 14:05-14:20 | 휴식 | |
| 14:20-14:35 | 제4발표5.18민주화운동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손승호(명지대 객원교수) | |
| 14:35-14:40 | 제4토론: 박현정(문체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 |
| 14:40-14:55 | 제5발표: 실천자원으로써의 5·18 - 유경남(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 |
| 14:55-15;00 | 제5토론: 한규무(광주대 교수) | |
| 15:00-15:15 | 제6발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한국기독교 연구」를 위한 試論 - 이치만(장신대 교수) | |
| 15:15-15:20 | 제6토론: 박태식(성공회대 교수) | |
| 15:20-15:35 | 휴식 | |
| 15:35-16:05 | 종합토론: 좌장 박용수<br>(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한신대 초빙교수) | 논찬에 대한 답변 (각5분씩) |
| 16:05-16:30 | | 질의 응답 |

❒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학술심포지움 '5.18민주화운동과 기독교' 제1발제 (2020. 9. 5)

# 5.18민주화운동과 한국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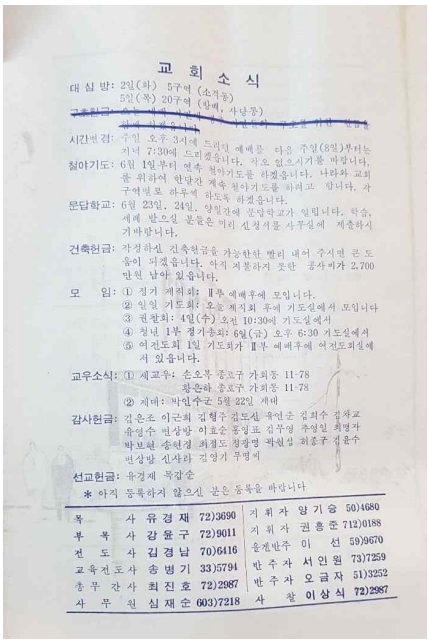
## 광주지역 교회의 활동, 연구동향,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최상도**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1. 서론
2.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개신교계의 연구동향: 기억과 망각사이
3. 항쟁기간 광주 지역 교회의 활동
3.1. 자료조사
3.2. 항쟁기간 광주지역 교회의 활동
3.2.1. 항쟁 참여
3.2.2. 구호/수습과 피해
3.2.3. 정보전달
4.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한국교회 역할에 대한 연구과제
5. 결론

## 1. 서론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연구자가 5.18과 한국개신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예장통합교단 교회의 3.1운동 참여 전수조사를 하던 중 서울안동교회의 1980년 6월 1일자 주보의 발견했기 때문이다. 안동교회 주보의 '교회소식'란 두 번째 광고가 "구호헌금: 오는 예배 시간에 광주 시민들의 구호를 위한 헌금을 함께 하겠습니다"이었고, 그 문구들이 검열 받았던 탓인지 푸른색 펜으로 삭제의 표시로 줄 그어져 있었다.[1] 같은 날 다른 주보는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도록 완전 삭제되었으나, 어떤 주보에는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줄로만 삭제 표시되어 있었다. 주보의 광고 내용은 한 개인이 임의로 결정하여 게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최소한 교역자회 혹은 더 중요한 사안일 경우 당회의 결의까지 거쳐야 실을 수 있다. 이는 교회의 조직이 공적으로 관여했다는 의미이다. 광주 밖에서 1980년 6월 1일 일요일 교회의 조직이 움직였다면, 광주 시내에 있는 교회는 더 구체적으로 5.18민주화운동에 참



교 회 소 식

대 심 방: 2일(화) 5구역 (소기홍)
5일(목) 20구역 (함배, 차남풍)

시간변경: 주일 오후 3시에 드리던 예배를 다음 주일(8일)부터는 저녁 7:30에 드리겠읍니다. 직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야기도: 6월 1일부터 연속 철야기도를 하겠읍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한달간 계속 철야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사구역별로 하루씩 하도록 하겠읍니다.

문답학교: 6월 23일, 24일, 양일간에 문답학교가 있읍니다. 학습, 세례 받으실 분들은 먼저 신청서를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헌금: 가정하신 건축헌금을 가능한한 빨리 내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읍니다. 아직 저불하지 못한 공사비가 2,700만원 남아 있읍니다.

모 임: ① 청기 예배회: Ⅱ부 예배후에 모입니다.
② 일일 기도회: 오늘 예배회 후에 기도실에서 모입니다
③ 권찰회: 4일(수) 오전 10:30에 기도실에서
④ 청년 1부 경기총회: 6일(금) 오후 6:30 기도실에서
⑤ 여전도회 1일 기도회가 Ⅱ부 예배후에 여전도회실에서 있읍니다.

교우소식: ① 새교우: 손소복 중보구 가회동 11-78
창순하 중보구 가회동 11-78
② 세례: 박인수군 5월 22일 세례

감사헌금: 김은조 이근희 김형주 김도삼 홍인순 김희수 김차교 유영수 변상방 이효순 홍정표 김무영 주영일 최명자 박보현 송혁경 최정도 장명명 백원심 최종구 김윤수 변상방 신사라 김정기 무명의

선교헌금: 유경재 목갑순
*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은 등록을 바랍니다

| | | | |
|---|---|---|---|
| 목 사 | 유경재 72)3690 | 거 취 자 | 양기승 50)4680 |
| 부 목 사 | 강윤구 72)9011 | 거 취 자 | 권흥준 712)0188 |
| 전 도 사 | 김경남 70)6416 | 울겐반주 | 이 선 59)9670 |
| 교육전도사 | 송병기 33)5794 | 반 주 자 | 서인원 73)7259 |
| 총무 간사 | 최진호 72)2987 | 반 주 자 | 오금자 51)3252 |
| 사 무 원 | 심재순 603)7218 | 사 찰 | 이삼식 72)2987 |

서울안동교회 1980.6.1. 주보

1) "교회소식", 서울안동교회 1980.6.1.주보. 본문그림참고.

여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한편, 1980년 5월 25일 일요일, “18일부터...군부독재에 맞서서 투쟁”하던 광주시민들은 “전국 종교인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모든 종교인들이 [광주]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시고 전국적으로 궐기해 주시기를” 요청했다.[2] 계엄군에 맞서 18일부터 한 주간 투쟁하던 광주시민들은 국민을 호도하고 광주를 고립시키는 군부세력의 폭력과 살해에 대해서 “국민의 신망과 기대”를 모아온 종교 지도자에게 궐기를 호소하며 사태수습의 기대를 표시한 것이다. 광주시민의 기대에 종교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5.18민주화운동 기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일요일 두 번(18일, 25일)과 석가탄신일(21일)이 있다. 기독교에게는 항쟁기간 중 두 번째 일요일은 교회력 중 ‘성령강림절’이며, 불교계는 ‘석가탄신일’이라는 중요한 종교적 절기를 보내는 기간이기도 했다. 이 기간 중 한국민중불교연합회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천만 불교인으로 하여금, 유구한 민족사에 민중과 고락을 함께해 온 민족종교로서의 전통회복을 기하는 한걸음으로, 이 시대 민중을 전제와 독선과 외세와 거짓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자는 민주화 대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11가지의 불교계의 다짐을 내놓았다.[3] 민주화운동 기간 중 두 번째 일요일(성령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천주교도 5월 24일 토요일, 광주대교구장 윤공희 대주교 명의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승리” 제하의 목회서신을 통해 수많은 사망자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어린 기도를 주님께” 바치며 “보다 더 많은 수의 부상자들이 하루 속히 쾌유되도록 기도와 아울러 그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실천”방안을 각 본당과 기관 또는 단체들이 신속히 강구하고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했다.[4] 개신교에서는 가장먼저 예장통합교단이 총회장 조원곤 목사(광주양림교회) 명의로 3개항의 ‘호소문’을 민주화운동 이틀째인 5월 19일에 전국교회에 보냈다.[5] 연합조직으로는 5월 25일 목포NCC가 ‘목포시 기독교연합회 비상구국기도회’를 열어 “목포 교회는 교파적인 이해를 떠나 오직 앞서 가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단합된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 자유시민들과 전국 형제교우들과 세계자유우방을 향하여” 9개항의 “광주 시민혁명에 대한 목포지역 교회의 신앙고백적 선언문”을 발표했다.[6] 이는 비록 목포지역교회의 선언문이지만 개신교 연합의 선언문으로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처음 발표된 것이다. 이로 보건대, 항쟁 기간 중 불교, 천주교, 개신교는 5.18민주화운동 기간(18-27)동안 통일된 목소리는 아니나 각각의 입장과 행동을 선언 혹은 고백하므로 광주시민들의 종교인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간 중 종교계의 역할과 활동들을 세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지면상 이 논문에서는 개신교에 관해서 살펴보고 다른 종교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1980년 5월 18-27일 10일간의 5.18민주화운동기간 동안 광주지역 개신교회의 주요 활동에 대한 역사기록 과정과 학계 연구에서의 개신교의 동향을 살피고, 선행연구와 새롭게 수집되고 발견된 자료를 통해 교회의 활동을 실증한 후, 마지막으로 향후 개신교의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구과제와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광주지역 개신교회 활동에 대한 개신교계 연구동향을 통해 현 개신교계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과 연구위치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이 작업은, 40주년을 맞이하는 5.18민주화운동에

---

2)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엮음,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이하 『자료총서』) 2권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1997), 65.
3) 『자료총서』 2권, 26.
4) 『자료총서』 2권, 59.
5) 『대한예수교장로회 제65회 총회회의록』(1980.9.25.-30, 서울영락교회당), 234.
6) 『자료총서』 2권, 69.

대한 개신교계의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인식을 읽어내는 일과 관계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교회의 활동을 실증하는 작업은 2012년에 발표된 한규무의 연구[7]를 토대로 한 후속작업으로 연구의 연속성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규무는 연구의 결론에 "역사적 해석보다는 지역별로 사건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아직 [개신교계]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이 분야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연구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또한 "개별 교회 및 교파 노회의 주보, 당회록, 노회록 등에도 관련자료가 적지 않게 실려 있을 것"을 예견하며 이후 연구에서 이들 자료가 활용되기를 기대했다.[8]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한규무 연구에 사용되지 않은 교회의 공적 자료들을 사용하여 그의 연구를 보강한다. 항쟁기간 개신교회의 활동에 대한 실증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하므로 이 논문은 다시 향후 연구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해 5.18과 한국교회 관계에 대한 연구의 축척을 기대해 본다. 한편, 5.18민주화운동기간 교회의 조직적 참여를 실증하는 것과 교인이 개별로 항쟁에 참여하는 것과의 상관성도 분석해 본다. 즉 항쟁기간 시민정체성과 교인으로서의 종교정체성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공적책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향후 개신교가 이어가야 할 5.18민주화운동과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므로 40주년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논문은 하나의 완성된 연구의 결과라기보다는 향후 개신교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를 위한 새로운 토대 혹은 기초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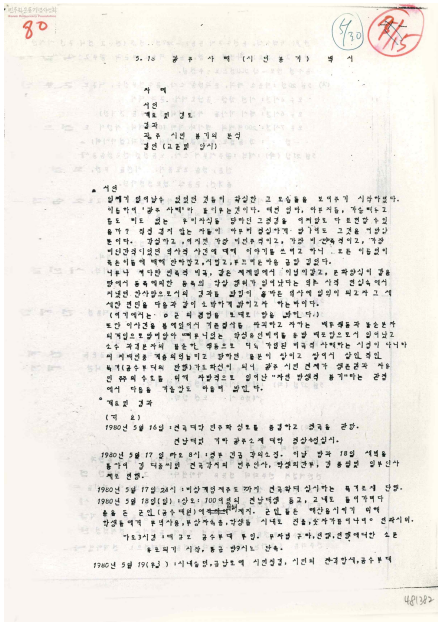
## 2.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개신교계의 연구동향: 기억과 망각사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는 지난 40년간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우선 5.18민주화운동 10일간의 사건이 날짜별로 구성되어 최초로 전국으로 배포된 것은 "광주백서"로 알려진 팸플릿 형태의 기록물이다. 이 기록은 1980년 겨울에서 1981년 5월에 광주에서 초고 집필이 완성되었고 인천 구월동 아파트에서 공동작업을 통해 1982년 초에 제작, 배포되었다.[9] 이 기록물을 바탕으로 대중적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통사로, '고전'으로 꼽히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가 1985년 5월에 출판되었고,[10] 이는 다시 32년 만에 그간의 축척된 연구를 바탕으로 2017년 5월에 전면개정판으로 출간되었다.[11] 또한 1990년에 발간된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은[12] 수많은 사람들의 실명 증언이 집대성된 것으로 "5.18의 전체적인 모습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에 입각하여 논쟁이 가능"[13]하도록 한 중요한 자료이다.

---

7) 한규무, "5.18 민중항쟁과 광주·전남지역 개신교계", 「한국기독교와 역사」37 (2012.9), 181-212.
8) 한규무, "5.18 민중항쟁과 광주·전남지역 개신교계", 209.
9) 소준섭 대표기록, 『광주백서: 1980년 광주에서 기록된 최초의 항쟁백서』(어젠다, 2018). 이 기록의 역사를 위해서는 142-152, 181-199;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기록,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엮음,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광주 5월 민중항쟁의 기록』(창비, 2017(전면개정판)), 572-4를 참고. 또한 이와 동시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5.18 광주사태(시민봉기) 백서"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481382 (접속:2020.05.29.)도 참고. 이 문서는 타자기로 제작된 24쪽 문서이다. 소준섭 대표기록의 『광주백서』와 이 문서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 황석영 기록,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풀빛, 1985).
11)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기록,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엮음,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광주 5월 민중항쟁의 기록』(창비, 2017(전면개정판)).
12)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엮음,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풀빛, 1990).
13)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사회과학자의 시선으로 새롭게 재구성한 5월 광주의 삶과 진실』(오월의 봄, 2012), 345.

1997년 4월 18일 대법원의 판결로 5.18에 대한 법적 처리가 일단락되어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된 이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들은 꾸준히 모아져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로 1997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61권까지 발행되었다.[14] 그리고 5.18에 대한 자료는 현재에도 계속 생산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한 연구들도 계속 진행 중이다.



5.18 광주사태(시민봉기) 백서

지난 40년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와 연구가 계속 축척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점은 개신교의 자료가 지금까지 집대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재의에 따르면 5.18직후 "살얼음판 같은 상황" 속에서 5.18에 대한 자료 수집이 "1980년 11월부터 1981년 7월초까지 약7개월간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광주시내 "교회나 성당의 목사, 신부는 물론 신도, 그리고 구속자 가족을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교계, 의료계, 가톨릭 쪽 자료, 학생 관련 자료 등을 모았다고 한다. 특히 교계 자료 수집을 위해 "강신석(목사), 정등룡(목사), 나상기(기독교농민운동), 최철(기독청년회) 등이 도왔다"고 한다.[15] 심지어 초기 비밀리에 자료를 수집하던 때에 교계(개신교) 인사들이 직접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에 대한 자료들이 당시에 모아지지 않은 점은 특이하다.

현재까지 발간된 개신교계의 국내 자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위원회의 '광주사태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하고 수집한 일지, 언론보도, 각계 성명서 등을 취합하여 1987년에 발간한 자료집 『1980년대 민주화 운동 VI-VIII』가 대표적이다.[16] 이 자료는 사료적 가치가 높지만 개신교계의 활동을 집중하여 취합 했다기보다 5.18민주화운동 전반에 대한 자료로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와 교차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개신교계가 내놓은 최초의 자료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NCCK는 이어 1994년에 인권위원회 편으로 『한국교회 인권선교 20년사』를 발간[17]하여 기록을 이어갔다. 하지만 20년사에서의 5.18에 관한 기록은 약술되어 있으며, 10년 후 다시 NCCK는 『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를 출판하여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NCCK의 대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했다.[18]

한편 개신교인 개인의 목격담이 1990년 영문으로 출간되었는데,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침례교선교사로 있었던 아놀드 A. 피터슨 선교사가 출판한 증언집이다. 이 글은 1995년 정동섭의 번역으로 한국어로 출간되었다.[19] 이후 호남선교화보사가 1993년 5월에 창간한 「湖南宣敎」에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을 게재하기 시작해 1995년 11월까지 13회 연재하여 "13년 만에 처음"으로 항쟁 당시와 그 후 교회의 활동을 공개했다.[20] 「湖南宣敎」에

14)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엮음,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1-61권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1997-2013). http://www.518archives.go.kr/books/index.html(인터넷 접속: 2020.5.29.)
15)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광주 5월 민중항쟁의 기록』, 571.
1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0년대 민주화운동 VI-Ⅷ』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
17) KNCC 인권위원회 편, 『한국교회 인권선교 20년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94).
18) KNCC 인권위원회 편, 조이제 집필, 『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05), 155-185.
19) Arnold A. Peterson, *The 5.18 Kwangju Incident*(n.p.,1990), 정동섭 역, 『5.18 광주사태』(풀빛, 1995).

연재된 이 글들이 현재까지의 문헌조사에서 항쟁기간동안의 개신교 활동을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기록 자료로 보인다.

5.18기념재단에서는 2006년부터 "5.18을 경험한 분들의 기억이 기억 저편의 망각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이를 붙잡아 다시금 기억되고 살아있는 역사로 만드는" 중요한 작업을 시행해『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시리즈를 발간하기 시작했고, 2015년에 마침내 22명의 개신교 항쟁 가담자들의 증언을 담아 시리즈의 제7권으로 펴냈다.[21] 아쉬운 점은 22명의 개신교 인물들의 항쟁관련 활동들이 교회 및 개신교 조직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언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증언을 통해 항쟁당시 개신교인 종교 정체성과 그들의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연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재단은 2019년 12월에 개신교 연구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개신교 여성들의 5.18참여와 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광주전남 최초의 민주 여성 조직"인 송백회원들 18명의 증언을 묶은 책을 발간했다.[22]

언급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의 5.18민주화운동에로의 직접적 참여에 대한 '연구' 논문은 지극히 제한적이며 그나마도 주로 수습위원회의 활동 안에서 개신교계 인사들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23] 1996년 김흥수의 논문이 개신교의 5.18참여에 대한 선구적 연구이나 개신교의 구체적 참여에 대한 기술보다는 신앙고백적, 신학적 해석의 관점에서의 연구이다.[24] 상술한 2012년 한규무의 논문이 그나마 구체적으로 수습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개신교 인사들을 주로 다루며, '광주 및 전남 개신교회의 역할·동향 및 피해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25] 이와 같이 간간이 개신교관련 연구들이 나오고 있지만 5.18민주화운동과정에서 개신교의 역할을 전체적으로 조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왜 개신교는 5.18과 관련된 교계자료들을 집대성하여 역사화하지 못했을까? 5.18민주화운동이 40년이 지나도록 개신교 주체의 연구 결핍의 원인은 무엇일까? 과연 5.18민주화운동이 진행될 당시, 교회, 신도들의 역할은 미미했을까? 아니면 성서의 가르침대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빛도 이름도 없이 헌신했기 때문에 기록이 없고 역사화 작업도 하지 않은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5.18특별법 제정으로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되고, 1997년 대법원의 판결로 12.12를 '군사반란'으로, 신군부의 진압을 '내란'으로 판정되기 이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5.18을 '폭동', '불순분자, 적색분자들의 난동'로 해석하려는 5.18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따라 개신교계가 의도적으로 침묵한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민주화운동기간 광주 지역교회의 활동들을 살펴보자.

---

20)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1)-(13)",「湖南宣敎」1-13 (1993.5-1995.11).

21) 5.18기념재단 편,『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7: 개신교편』(도서출판 심미안, 2015). 인용은 4. 구술자: "강신석, 김경천, 김병균, 김상집, 박광웅, 박상규, 방철호, 성수남, 안성례, 양현숙, 윤용상, 이기홍, 이인국, 이철우, 장헌권, 정종득, 정권모, 최인규, 한상렬, 안철, 윤영규, 조아라"
재단은 2013년에는 천주교편, 2016년에 불교·원불교편을 발간했다.

22) 5.18기념재단 편,『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9: 송백회편』(도서출판 심미안, 2019). 구술자: "홍희윤, 김영심, 김은경, 김종희, 노영숙, 김서운, 정금자, 이경란, 박경희, 박인숙, 선소녀, 윤경자, 이윤정, 임영희, 전삼순, 정유아, 정현애, 황수진"

23) 한규무, "5.18 민중항쟁과 광주·전남지역 개신교계",「한국기독교와 역사」37 (2012.9), 181-212; 김명배,『해방후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1960-1987』(북코리아, 2009), 209-219.

24) 김흥수, "5월항쟁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반응",「한국기독교와 역사」5 (1996.9), 155-183.

25) 한규무, "5.18 민중항쟁과 광주·전남지역 개신교계", 196-208.

## 3. 항쟁기간 광주 지역 교회의 활동

1980년 당시 5.18민주화운동에로의 참여는 크게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항쟁 10일 동안 당시 현장에서 '항쟁에 직접 참여'한 경우다. 여기에는 가두시위, 행진, 시민궐기대회, 무장투쟁, 치안유지 등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항쟁 개입과 계엄군 공수부대에 쫓기는 시민들을 피신시키거나, 헌혈하거나, 주먹밥 등 식사 및 식음료 제공 등으로 항쟁하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둘째, '수습과 구호'의 경우다. 주로 재야 원로, 종교계, 사회 지도층, 학생 지도부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의 활동과 종교계 특히 개신교계의 구호금 모금과 배부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립된 광주의 상황에 대한 '정보의 외부 전달/전파' 활동이다. 군부에 의해 철저히 고립된 광주의 소식을 전국 각지로, 해외로 전하는 것은 군에 의해 왜곡된 광주의 진실을 광주 밖으로 알려 군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이렇듯 항쟁 참여, 수습 및 구호, 정보전달의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실증하는 것은 사건을 구성하는 역사적 과제이기도 하다.

### 3.1. 자료조사

앞서 언급했듯이 한규무의 2012년 논문에[26] 기대어 연구자는 1980년 5.18 당시 광주시내 교회의 참여를 주보, 당회록, 교회일지, 노회록, 총회록 등 교회의 공적 자료를 통해 실증하기 위해 2019년 기준 광주소재 1,642개 교회[27]를 전수조사 했다.[28] 조사는 유무선 전화로 3회 이상 접촉시도 후, 주보, 당회록, 일지 등 1980년 당시 교회의 공적 기록물이 있다는 응답 시 서면으로 자료요청하고 직접 방문 후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이 조사는 현재도 계속 중이나 2020년 1월 28일 현재 기준, 1642개 교회 중 1980년 당시 교회 113개를 확인했다. 확인결과 1980년도 주보와 당회록 모두를 확보하고 있는 교회가 10개, 주보만 있는 교회가 6개, 당회록만 있는 교회 7개, 1980년도 자료가 없는 교회가 64개, 조사 및 자료 열람이 불가하다고 응답한 교회 22개, 자료 유무를 확인 중인 교회가 8개로 조사되었다. 1980년도 교회의 공적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23개교회도 주보나 당회록 내용에 5.18과 관련된 직접언급이 있는 자료는 소수였다. 또한 예장(통합)교단 전남노회 소속 77교회[29] 중 당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는 교회는 6교회에 그치고 있다. 이렇듯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교회의 공적 기록 자료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것은 제한적이며 그 양도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교회의 공적 자료 수집과 더불어 5.18민주묘지 묘역현장조사를 실행했다. 2016년에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에서 조사한 묘역의 '종교별 안장목록'에 따르면, 종교 표시 안장 193묘 중 개신교가 129기를 차지한다.[30]

---

26) 한규무, "5.18 민중항쟁과 광주·전남지역 개신교계", 209.

27) 2019년 광주시내 교회목록은 국제선교협력협의회 편, 『2019 한국교회연합주소록』(국제선교협력협의회, 2019), 302-18에 수록된 '광주광역시' 부분을 참고하였다.

28) 이 논문은 'NCCK 기독교사회운동 100주년 기념 기독교사회운동사 정리 보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5.18민주화운동과 광주지역 개신교의 역할'에 대한 연구로 2019.4.1.-2019.12.31.까지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 연구 조사는 올해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자료조사를 위해 호남신학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역사연구모임 'WeStory' 회원(강정은, 김서민, 김의환, 김현도, 신다슬, 양대성, 원요셉, 정영희, 정윤교, 지찬영, 조의환)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함을 전한다.

29) 교회 목록 선정 기준에 대한 교차 검증을 위해 1979년, 1981년 봄·가을 노회록과 1979년 64회, 1981년 66회 총회록 전남노회 소속 미조직 교회를 제외한 조직 교회 수 비교했다.

30) 종교표시 194묘 중 원불교 3, 불교 23, 천주교 37, 기독교 130, 운형국화모양 1묘역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에서 '기독교'는 천주교와 구분한 것으로 미루어 개신교를 의미한다. 본문의 표에서는 종

| | 계 | 원불교 | 불교 | 천주교 | 개신교 |
|---|---|---|---|---|---|
| 1묘역 | 12 | 1 | 0 | 3 | 8 |
| 2묘역 | 15 | 0 | 2 | 1 | 12 |
| 3묘역 | 22 | 1 | 3 | 4 | 14 |
| 4묘역 | 38 | 1 | 10 | 5 | 22 |
| 5묘역 | 20 | 0 | 2 | 9 | 9 |
| 6묘역 | 40 | 0 | 5 | 3 | 32 |
| 7묘역 | 14 | 0 | 1 | 3 | 10 |
| 8묘역 | 18 | 0 | 0 | 7 | 11 |
| 9묘역 | 7 | 0 | 0 | 2 | 5 |
| 10묘역 | 7 | 0 | 0 | 1 | 6 |
| 계 | 193 | 3 | 23 | 38 | 129 |

5.18민주묘지 종교별 안장목록 (2016.1.15.현재)

이 가운데 5월 18-27일 10일간의 항쟁기간 동안에 사망한 종교별 안장목록[31]을 살펴보면, 원불교1, 불교1, 천주교3, 개신교가 11기이며, 10묘역의 행방불명자 6명을 포함하면 개신교로 확인할 수 있는 묘는 17기이다. 2016년에 5.18민주묘지 관리소에서 조사한 종교별 안장목록을 확인하는 작업을 3차에 걸쳐 실시했다. 이를 통해 10일간의 항쟁기간에 사망 혹은 행방불명인 묘역 중 종교표기는 없으나 비문을 통해 개신교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묘역 5기를 더 발견했다.[32] 결국 현재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항쟁기간 동안 사망 혹은 행방불명 묘역 중 종교 확인 가능 묘역은 34기이며 이중 개신교가 22기다.

교가 명확하지 않은 '원형국화모양'을 제외했으며, 2-52 홍순권은 실제 천주교인데 개신교로 잘못 표기한 것을 수정한 표이다.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제1묘역 종교별 안장목록" 2016.01.15.현재(미간행 조사자료).

31) 항쟁기간 사망자는 1, 2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2묘역 53번 이후는 1980년 5월 27일 이후 사망한 묘이다.

32) 묘역 현장 조사는 2019년 7월 2일, 11일 2회에 걸쳐 조사했으며, 2020년 7월 11일 3차 조사로 묘역의 묘비를 촬영하여 종합하고 있다. 발견한 5기는 '1-07 김중식, 2-10 전재서, 2-14 강정배, 2-45 류동운, 10-35 정종대'이다. 3차에 걸친 묘역 전수조사를 통해 밝히고 있지만, 비문록은 국가보훈처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 『당신이 잠든 곳에 우리 마음 함께 있네: 국립5.18민주묘지 비문록』((주)테코디자인그룹, 2018)을 참고. 항쟁기간 사망한 민주열사의 가족 증언은 정춘식,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5.18민중항쟁 증언록 1, 2』((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2014)을 참고.

| 묘역 | 성명 | 생몰일 | 비문 |
|---|---|---|---|
| 1-01 | 김경철 | 1952.8.11.-1980.5.19. | 엄마와 못 다한 정에 울고 있을 나의 아들아! 한보다 더 짙게 새겨진 그리움을 뉘게 말할 소냐! 내 생이 끝나는 그날, 자랑스러운 네 모습 볼 수 있을 날 기다린다.-에미가- 아빠! 늘 어디서든 저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은 있지만 가슴 저미게 뵙고 싶을 때가 많아요. 단 한번이라도 아빠 얼굴보고 아빠를 불러보고 싶은 이 소망 아실는지.-딸 혜정이가- |
| 1-07 | 김중식 | 1938.1.20.-1980.5.20. | 하나님 품안에 고이 잠드소서! 가슴에 맺힌 한을 말로는 다 못하겠습니다. |
| 1-18 | 김완봉 | 1966.7.24.-1980.5.21. | 열다섯 살 너의 죽음이 조국의 자유와 민주를 위한 값진 것이었음을 우리 모두 기쁘게 생각한다. |
| 1-23 | 김형관 | 1959.7.14.-1980.5.21. | 오늘! 민주주의를 위하였던 고인의 지고지순함에 머리 숙여 애도합니다. 부디 편안히 잠드소서! |
| 1-27 | 박민환 | 1955.7.19.-1980.5.21. | 신학교를 졸업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라의 정의를 위해 살려고 했던 너 유난히 정이 많던 아들아! 편히 쉬거라. |
| 1-39 | 윤성호 | 1953.1.21.-1980.5.21. |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26절. |
| 1-58 | 진정태 | 1954.6.3.-1980.5.21. |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
| 1-63 | 홍성규 | 1947.10.10.-1980.5.23. | 광주 양동에 태어나 조선대 수료 예정에 건장한 탄력몸매로 은윤윤업 |
| 1-84 | 이매실 | 1912.4.4.-1980.5.22. | [없음] |
| 2-10 | 전재서 | 1954.3.12.-1980.5.23. | “하나님 주신 생명! 처절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다간 짧은 생에 네 영혼은 자유와 민주의 참 불꽃으로 하나님이 소중이 가져가다” |
| 2-14 | 강정배 | 1960.11.27.-1980.5.27. | “하나님 주신 생명! 처절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다간 짧은 생에 네 영혼은 자유와 민주의 참 불꽃으로 하나님이 소중이 가져가다” |
| 2-33 | 문용동 | 1952.9.6.-1980.5.27. | 군의 투입 공수부대 개입. 드디어 터질 것이 터져버렸다. 반 기절한 시민을 업어다 병원에서 치료했다. 누가 이 시민에게 돌을 각목을 총기를 들게 했는가. 이 엄청난 시민들의 분노는 어떻게 배상해 줄 것인가. 대열의 최전방에서 외초고 막고 자제시키던 내가 적색분자란 말인가...뭔가를 진정한 민주주의 승리를 보여 줘야한다. 역사의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리라.-문용동의 일기장 중에서- |
| 2-41 | 안종필 | 1964.5.23.-1980.5.27. | 종필아 살아남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갈게. 너의 숭고한 정신 이 땅의 민주화에 길이 빛나리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너를 죽도록 사랑하는 형과 누나가. |
| 2-45 | 류동운 | 1960.11.27.-1980.5.27. | 나는 이 병든 역사를 위해 갑니다-동운의 마지막 일기 중에서- |
| 4-11 | 이세종 | 1959.7.16.-1980.5.18 | 어머니 그날! 새날이 올 때까지 두 손에 횃불을 들고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복판에서 우리 불꽃으로 활활 타오릅니다. |
| 10-01 | 고재덕 | 1966.4.5.-1980.5.20 | 너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영원한 역사의 증명이 될 것으로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할 것이다. |
| 10-08 | 김병군 | 1943.7.14.-1980.5.19. | 병군아. 나라위해 정의롭게 싸우다 간 너의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품안에서 기쁨으로 살고 있으리라 믿는다. |
| 10-25 | 이기환 | 1965.2.23.-1980.5.25. | 활짝 피기도 전에 무참히 꺾여버린 한 송이 꽃이여! 이 제 한줄기 빛이 되어 네 비참과 소외를 만천이 알도록 하얀 나래를 펴다오. |
| 10-35 | 정종대 | 1956.11.8.-1980.5.21.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5-27절” |
| 10-42 | 박규현 | 1974.7.7.-1980.5.19. |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길 바라며 잠드소서. |
| 10-48 | 송환철 | 1958.5.15.-1980.5.18. | 너! 한창 피어나던 꽃이여...한 송이의 희생으로 이 땅에 민주화의 열매를 맺었단다. 기뻐하라 그리고 만족하여라. |
| 10-57 | 임소례 | 1923.5.25.-1980.5.20. | 보고파도 볼 수 없는 임들이여 골수에 사무치는 한을 안고 천국으로 가는 임들이여. 그 크신 사랑으로 오월의 그 날을 용서하옵소서. |

5.18-27일 항쟁기간 사망·행방불명 개신교인 22인

묘역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5.18관련 개신교인 희생자가 다른 종교에 비해 눈에 띄게 많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개신교인들이 5.18민주화운동 현장에 적극적으로 등장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교회의 공적 자료의 빈약함과 5.18민주화운동 현장에서의 많은 교인들의 등장과 활동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간극이 항쟁기간동안 실제로 ‘교회 조직의 소극적 참여’와 ‘교인의 적극적 참여’인지, 아니면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간극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통해 교회의 항쟁 참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2. 항쟁기간 광주지역 교회의 활동

자료조사를 통해 수집된 교회의 주보, 당회록, 일지 등 공적자료는 극히 제한적이지만, 이 자료를 통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교회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이미 연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고 새롭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활동을 재구성해 본다.

### 3.2.1. 항쟁 참여

우선 교회는 민주화운동 10일간의 기간 중 18일과 25일 두 번의 주일예배를 드리게 된다. 18일 일요일은 계엄령이 0시를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대된 날이다. 7공수여단 33대대, 35대대 장병들이 새벽 1시를 갓 넘어 광주에 투입되어[33] 이날부터 시민들에게 잔혹한 폭력을 가했다. 하지만 교회는 이날 주일 낮 예배모임을 통해서는 어떤 행동도 도출해 낼 수 없었다. 일부 교회에서는 18일 오전 예배가 막 시작될 때 청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급박한 소식"을 전했고,[34] 교회는 "계엄군에게 쫓긴 시민과 학생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교회 문을 열어두고 은신처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했다.[35] 그럼에도 이전부터 민주화운동과 지속적인 관여를 한 강신석 목사는 자신이 시무하는 광주무진교회 5월 18일 일요일 예배 때 누가복음19:28-40을 본문으로"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말씀을 선포하므로 시국에 대한 인식을 교인들에게 전했다.[36] 다만 아쉬운 점은 무진교회의 5월 25일 주일 주보가 제작되지 못해 자료로 남아있지 못한 점이다.

한주가 지난 후 항쟁기간 중 두 번째 일요일인 25일에는 광주지역 교회들의 예배 때 설교가 5.18과 관련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방림교회 나윤원 목사의 에스더4:12-17을 본문으로 한 "난국을 극복한 위대한 힘"이라는 제목의 설교,[37] 동광교회 남정규 목사의 창세기 34:18-31을 본문으로 한 "5.18의 진상과 신앙적 교훈"의 선포,[38] 광주벧엘교회 손성현 목사의 고린도전서7:29-31을 본문으로 한 "때가 촉박하다"는 제하의 말씀 선포가 있다. 또한 광주벧엘교회(손성현 목사)는 "6월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연합금식기간으로 공포합니다. 별지 시간표에 이름을 기재하여 내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설명은 따로 드립니다)"라는 내용을 주보를 통해 교인들에게 <교회소식>으로 전했다.[39] 이 광고는 6월 1일 일요일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다.[40] "자세한 설명"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항쟁에 대한 설명을 완곡히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6월 15일 일요일 주보의 <교회소식>란에 "나라와 교회 및 여러 문제를 위한 공동금식 기도에 54명이 참여하여 수고하신 교우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온도의 차이가 있으나 항쟁의 현장에서 교회는 두 번째 일요

---

33) "7공수여단 33대대, 35대대 688명(장교 84명, 사병 604명)이 광주에 도착한 시각은 자정이 막 지난 '18일 01:10'이다. 7공수여단 31대대는 전북대, 32대대는 충남대를 각각 점거했다."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기록,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엮음,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광주 5월 민중항쟁의 기록』, 56-57.

34) 광주계림교회 50년사 편찬위원회 편, 『광주계림교회 50년사』(새론문화사, 1997), 319.

35) 이금남 외 7인 편집, 『남광교회 45년사』(쿰란출판사, 2006), 249, 김수진, 『광주제일교회 100년사』(쿰란출판사, 2006), 371.

36) 광주무진교회 주보, 1980.5.18.

37) 나윤원 목사는 "오늘 이 광주시에 이처럼 엄청난 비극이 초래됐는데, 내 아들 내 딸이 내 부모 형제들이 죽고 부상을 당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우리는 억울하게 나라 위해 이 광주 시민을 위해 피 흘리고 싸워준 순수한 학생들과 시민을 위해서는 보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한 에스더처럼 금식을 선포하고 죽음의 신을 물리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고 선포했다. 설교전문은, 강성열, 『방림교회 50년사』(한들출판사, 2015), 222-23을 참고.

38) 남정규 목사는 "광주사건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본 바요 들은 바요 친히 당한 일"이므로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지만 "역사에 남는 설교가 되기 때문에" 18-22일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우리 고장 광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디나사건"을 통해서, 광주 5.18사건에서 자제력을 배우고, 사랑과 자비로움을 배우고 또한 정직을 배웁시다."고 결론을 짓는다. 설교전문은, 서병호, 『광주동광교회 30년사』(도서출판 글로리아, 1991), 203-210을 참고.

39) 광주벧엘교회 주보, 1980.5.25.

40) 광주벧엘교회 주보, 1980.6.1.

일을 맞아 말씀선포와 광고/교회소식이라는 형식을 통해 현상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교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항쟁에 관여토록 하고 있다. 비록 교회가 집단적으로 어떤 조직을 형성하여 항쟁에 참여한 것은 아니나 개교회의 예배라는 공적 모임을 통해 교인들과 시국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행위를 설정하고 요청하는 것은 국가폭력에 대항한 또 다른 모습의 항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두고 정권모 목사는 "개신교회가 [5.18민주화운동에] 기도하고 설교를 통해서 의사표명을 하면서 꾸준히 개입"한 것으로 증언했다.[41]

한편, '교회'가 아닌 교회 외곽 조직 혹은 교회연합 조직을 통해 항쟁에 직접 개입한 '교인들'은 너무나 많다. 우선 광주사태수습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25명 중 개신교인은 "김천배, 명노근, 윤영규, 이기홍, 이성학, 이애신, 이영생, 조아라 및 '김목사', '장목사'" 등 10명이다.[42] 김상집에 의하면 "재야수습대책위 가운데 기독교[개신교]계 인사가 거의 대부분 광주 YMCA 이사나 회원들로 채워져 있었던 것은 1980년 3월 당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양칭 국민연합)'이라는 조직이 탄생하면서 이 국민연합의 회원들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재야수습대책위원으로 참여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했고, 이 국민연합의 광주전남지부 회장을 이성학 장로(양림교회), 총무로 윤상원이 맡아 이들이 "국민연합 회원들을 정리하면서 많은 기독교 인사들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43] 이들은 교회와 YMCA, YWCA, 국제엠네스티 등 각 사회단체와 연결되어 있고, 특히 광주 YMCA와 YWCA는 1970년대 말부터 광주전남지역의 개신교계 사회운동을 이끌었던 교회 청년회, 각 교단 청년연합회 및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한국기독학생총연맹(KSCF), YWCA, YMCA, 그리고 대학 YMCA, YWCA, KSCF 연합조직인 SCA(Student Christian Association,[44] 기독학생연합)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었다.[45] 따라서 교회 외곽에서는 이 조직들의 회원들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그중 1978년 광주전남 지역 여성들이 결성한 민주화운동 조직인 송백회의 활동이 주목된다. 송백회 회원들은 김천배 목사, 무진교회 강신석 목사, 양림교회 은명기 목사, 동부교회 백영흠 목사, 한빛교회 조아라 장로 등과 깊은 교류를 가지며 활동했다.[46] 1980년 5월 항쟁기간동안 송백회 회원들은 시민궐기대회 참여, 대자보나 성명서 작성 및 시민대표로 낭독, 투사회복 작업, 검은리본 제작, 김밥과 주목밥 나눔, 시민군 치료, 피신자 은신처 제공 등 적극적으로 항쟁에 참여했다.[47] 또한 마지막까지 도청에 남아 계엄군에 맞서 항쟁에 참여한 교인 중 문용

41) 정권모, "5.18에 대해 개신교회는 끊임없는 기도와 설교를 통해 참여했다고 봐요", 5.18기념재단 편,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7: 개신교편』, 608.

42) 한규무, "5.18 민중항쟁과 광주·전남지역 개신교계", 195.

43) 김상집, "5.18민주화운동에서 YMCA 및 기독사회운동의 역할 토론문", 「5.18광주민주하운동과 기독사회운동 조명」, 광주YMCA 제99차 시민논단 자료집, 2020.6.3., 44.

44) 5.18기념재단 편,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7: 개신교편』, 84, 86, 87. 김경천의 구술 내용 중.

45) 김상집, "5.18민주화운동에서 YMCA 및 기독사회운동의 역할 토론문", 45. 연구자와의 인터뷰, 2020.6.3.

46) 김은경은 "70년대는 정말 엄혹하고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계통에 참여했던, 기독교를 많이 비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된 조건 속에서 역할을 한 것은 기독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구심점이 NCC에 속한 목사님들이었어요. 유동운 열사의 아버지, 유연창 목사님도 그랬고요. 청년부의 울타리가 돼주셨어요...잡혀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 은명기 목사님과 조아라 회장님과 몇 분의 어른들이 와서 내놔라 항의하면 풀어줬어요. 그 정도로 광주 쪽에서는 목사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라고 증언한다. 김은경, "송백회는 70년대를 응축하는 핵을 품고 있는 단체였어요", 5.18기념재단 편,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9: 송백회편』, 105-6. 또한 김상집은 "많은 분들이 5.18때 기독교라는 이름, 교회 목사나 장로 이름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서 백영흠 목사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라고 증언하며 백영흠 목사의 영향을 강조했다. 김상집, "최후의 도청항쟁이 한국 민주화의 밑거름", 5.18기념재단 편,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7: 개신교편』, 149.

동, 안종필, 류동운이 있다.[48] 문용동은 호남신학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신학생으로 광주제일교회에 소속해 있으면서 상무대교회 전도사로 시무했고, 류동운은 한신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신학생으로 신광교회에 출석했다. 시민군에 속해 있던 안종필은 당시 광산고 1학년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지산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항쟁참여의 형태에서 교회 조직은 각 교회별 예배라는 공적 모임을 통해 시국 인식을 교인과 공유, 비판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며, 교인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항쟁에 개입하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3.2.2. 구호/수습과 피해[49]

교회가 조직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 분야는 바로 "구호와 수습"이다. 공수부대의 무참한 폭력을 목격한 교회들은 "군과 대치한 학생과 시민들과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계속"되어 "교회가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아[50] 5월 23일 오전 10시 제일장로교회에 62명의 목사 장로가 참석하여 초교파적인 '광주시기독교수습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에 김신근 목사, 부위원장에 문정식 목사 외9명, 총무에 이인국 목사를 선임했다.[51] 이 조직은 26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제일장로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명칭을 '광주시기독교비상구호대책위원회'로 정정하고[52] 지도부도 위원장에 한완석 목사, 총무에 방철호 목사로 개편 교체했다.[53] '수습'에서 '비상구호'로의 명칭 변경은 위원회의 활동 성격도 바뀌게 한 듯 보인다. '수습위원회'로 활동했던 지도부는 24일 오후 3시경 전남북 계엄 분소장을 만나 7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회수된 총기 100정 전달, 34명의 연행자를 석방시켜[54] 귀가하게 하는 등 '광주사태수습대책위원회'와 같이 계엄군과 협상하며 사태 수습에 무게를 두고 구호활동을 동시에 진행했다. 그러나 26일 '비상구호위원회'로 전환 후에는 "성금과 모금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사상, 부상자 등에 대한 구호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또한 '비상구호위원회'는 사망자 검시 확인을 위한 입회, 부상자 조사 입회확인, 사망자 장례 거행 등으로 항쟁을 수습해 나갔다.[55]

한편, '비상구호위원회'는 "27일에는 광주시내 초교파적으로 71명의 목사 장로가 광주제일

---

47) 5.18기념재단 편,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9: 송백회편』, 17.

48) 문용동에 대해서는, 고문용동전도사순교기념사업회 엮음, 『새벽길을 간 이』(한들출판사, 2018 개정증보판)을 참고. 특히 최상도, "문용동 전도사의 삶과 죽음의 신앙사적 의의: 일기와 설교를 중심으로", 244-66을 참고. 안종필에 대해서는, 이정임 증언, "사랑 속에 빛나던 아이", 정춘식,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5.18민중항쟁 증언록2』, 366-73,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5)", 「湖南宣敎」 5(1993.12), 17의 교회피해 상황 중 인명 참고. 류동운에 관해서는,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79회 동기회, 「류동운 추모집」(1985), 도주명,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류동운 열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03회기 인권위원회 포럼 「5.18과 그리스도인들(문용동과 류동운)」, 2019.5.14. 호남신학대학교, 11-23 참고.

49) 이 항에서는 선행연구인 한규무의 연구와 중첩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자료를 통해 수정 보완될 부분을 중심으로 다룬다.

50)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 「湖南宣敎」 1(1993.5), 21.

51)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2)", 「湖南宣敎」 2(1993.5), 17. 광주시내 15개교파 2백여교회에서 1백여명의 목사 장로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한규무가 지적했듯이 이 조직에 대한 「湖南宣敎」 1과 2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모임 날짜, 참석인원, 지도부 구성에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서술을 따랐다.

52)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2)", 18.

53)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 21.

54)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2)", 「湖南宣敎」 2(1993.5), 18.

55)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 「湖南宣敎」 1(1993.5), 21-22.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2)", 「湖南宣敎」 2(1993.5), 18.

교회에 모여 수습에 나서는 한편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조사"하여 교회 피해상황을 "①피해교회 ②피해자 ③피해종목"(인명, 재산)으로 구분하여 발표했다.

> ①피해교회 ②피해자 ③피해종목 무등교회 : 박○준 인명, 임○하 인명, 서광교회 : 황○정 인명, 동명교회 : 유○호, 조○선, 김○용, 김○욱, 정○영 인명, 새료교회 : 정○준 인명, 서문교회 : 이○주 인명, 동광교회 : 백○기 인명, 도동교회 : 박○심 인명, 김강 재산, 중앙교회 : 윤○실 인명, 박○현 인명, 허현 인명, 김○영 인명, 이○운 인명, 고○훈 인명, 고재○ 재산, 최○덕 재산, 김정인 재산, 박○순 재산, 신○태 재산, 중흥교회 : 건물 재산, 중흥교회 : 성○원 인명, 서림교회 : 심○민 인명, 노○국 인명, 노○구 재산, 남광교회 : 김○철 인명, 채○규 재산, 정○주 재산, 광주지원교회 : 건물 문화영문, 유○근 인명, 본촌동 : 김○녀 인명, 계림 : 김○찬 인명, 송○수 인명, 혜성 : 김○길 인명, 박○호 재산, 혜성교회 : 재산, 성광 : 김○명 인명, 광천 : 강○배 인명, 화정동 : 김○택 인명, 박○주 인명, 제일 : 문○동 인명, 진○정태 인명, 이○주 인명, 지산 : 전광 오○림 재산, 일심 : 김○재 재산, 이○신 재산, 덕성 : 양○상 인명, 대광 : 정○진 인명, 덕성 : 김○호 인명, 서림 : 고○자 인명, 김○례 인명, 정○구 인명, 이○순 인명, 남○례 인명, 양림 : 김○봉 인명, 손○석 인명, 지산 : 안○틸 인명, 오○봉 인명, 신광 : 류○운 인명, 세광 : 이○귀 인명, 은광 : 손○옥 인명, 손○례 인명, 손○섭 인명, 박○근 인명, 김○기 인명, 김○기 인명, 장○원 재산, 송○수 재산, 양림 : 손○식 인명, 김○봉 인명, 백○선 인명, 이○영 인명, 김○중 인명, 고○운 인명, 김○우 인명, 문○열 인명, 동신 : 박○용 인명, 임○천 인명, 김○국 인명, 동명 : 장○환 인명, 월광 : 김○한 인명, 화정중앙교회 재산.
> 자동차 피해 : 영업용 차량 고속버스 35대, 시외버스 1백 57대, 시내버스 91대, 개인택시 3대, 전세버스 18대, 일반택시 97대, 화물차량 58대, 자가용 버스 36대, 승용차 82대, 화물차 1백22대, 용달차 22대, 지프 2대, 구급차 2대, 텀프트럭 8대, 이류차 1대 등.[56]

여기에는 37교회 명단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중 동명교회, 중흥교회, 혜성교회, 지산교회, 덕성교회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피해교회 총수는 32교회로 판단된다. 양림교회는 중복되어 있으나 예장통합과 기장교단의 다른 교회로 보인다. 즉 32교회에서 67명의 인명피해, 16명의 개인재산피해, 4교회의 재산피해가 보고되었다. 이 보고는 사망, 부상을 구분하지 않으며, 광주지역 일부교회 피해사례를 기록하는 한계를 가지지만, 교회가 조사한 최초의 교회 피해보고로 의미가 있다.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5월 26일 조직된 '광주시기독교비상구호대책위원회'는 1980년 11월 8일까지 활동하다가 해산했다.[57]

한편 항쟁이 5월 27일 계엄군의 도청진압으로 끝나게 되지만 개별 교회는 6월 1일, 8일 일요일에도 시국인식을 공유하는 설교를 하고 광주시민을 위한 기도와 구호를 교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광주무진교회 강신석 목사는 6월 1일 예배에서 "침묵"(이사야53:1-9)을 선포하고, 광고를 통해 "1. 수난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다시한번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하는 뜨거운 기도를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2. 광주의 수난의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보고 위로하고 위해서 기도합시다"고 교인들에게 요청했다.[58] 강신석 목사는 이후 수배되어 합동수사반에서 조사를 받은 후 8월 3일 주일에서야 다시 교인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59] 광주동광교회 남정규 목사도 6월 1일 주일 낮 예배 때 사도행전27:27-37을 중심으로 "풍랑 후의 바울" 제하에 "우리 광주는 큰 폭우가 휘몰아쳐 지나갔으니, 이제 우리 교회는 비겁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광주 시민에게 용기를 넣어주고 무모하게 살지 않도록 지혜를 선사하며, 정신적인 환자가 되지 않도록 봉사를 해 드립시다"고 설교로

---

56)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5)",「湖南宣敎」5(1993.12), 17. 이 기록의 교파별 분류도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인명을 완전하게 표기하기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별 확인도 조사가 필요하다.

57)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 22.

58) 광주무진교회 주보, 1980.6.1.

59) "광주사태로 본 교회 [강신석] 목사님께서는 합동수사반에서 조사를 받고 무사히 풀려 나왔읍니다만 윤영규 집사를 비롯 아직도 여러 교우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무진교회 주보, 1980.8.3.

교인을 권면했다.[60] 한편 이날 밤예배 때 남정규 목사는 “양의 가죽을 쓴 이리”(민수기23장)라는 시국 비판 설교를 했고, 동광교회 중고등부교회학교는 <광고>를 통해 “이번 어려움에도 우리 학생들 모두 무사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상무제일교회(유장식 목사)도 6월 8일 주보의 ‘알리는 말씀’을 통해 “②광주 사태로 인하여 희생자와 부상자들을 위로하는 뜻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교인들에게 요청했다.[61] 이렇듯 항쟁기간 동안, 그리고 그 후 교회는 ‘광주시비상구호대책위원회’와 개별교회 차원에서 계속해서 구호와 피해 수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 3.2.3. 정보전달

5.18민주화운동 항쟁기간동안 광주는 군부에 의해 철저히 고립되었다. 하지만 교회의 조직과 네트워크를 통해 광주 소식은 광주 밖으로 전해졌다. 주로 광주시민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요청하는 형태이지만 각 교단 및 연합기관의 요청을 통해 광주 소식은 전국교회로 전해졌고 헌금을 통해 광주시민의 아픔에 동참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은 5월 19일 양림교회를 담임하던 총회장 조원곤 목사 명의로 ‘호소문’을 발표하여 광주 항쟁 소식을 전국교회에 알렸다.

> 우리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금번 광주지방에서 일어난 사태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우려를 금할 수 없어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게 하기 위하여 전국 교회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 1. 광주 사태가 평화롭게 해결되기 위하여 오는 25일 주일에 일제히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이 일의 조속한 해결을 얻기 위하여 본 교단 대표자들은 타 교단장과 함께 대통령을 만나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 3. 조속한 시일 안에서 본 교단의 위로 대표단을 현지에 파송하기로 했습니다.[62]

이후 예장통합총회는 사회부를 통해 광주시민돕기헌금 모금을 6월 30일까지 이어갔는데, 전국 190교회서 약 2천1백만원이 모여 광주에 전달했다. 예장통합총회 임원단은 28일 광주 현지를 방문하여 총회장 조원곤 목사(광주양림교회)와 증경총회장 한완석 목사(광주제일교회)를 면담하고 광주 상황을 들었다. 이들은 한완석 목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광주시기독교비상구호대책위원회’와 광주기독병원에 각각 구호금을 전달하고 5월 30일 연동교회에서 서울지역 교역자들에게 광주상황을 보고했다.[63] 이후 예장통합총회는 6월 16일 광주를 재방문하여 ‘비상구호대책위원회’에,[64] 8월 2일에 3차 방문하여 전남노회에 구호금을 전달했다.[65]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의 ‘교회와사회위원회’도 “광주사태를 비롯한 현 시국과 관련하여 6월 8일 주일에 전국교회가 특별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광주시민을 위한 헌금을 실시하여 현지 노회에 보내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국 61개교회에서 광주시민을 위한 약 3백여만원의 헌금이 모아졌다.[66]

“광주시민을 위한 기도회 개최”

---

60) 광주동광교회 주보, 1980.6.1. 서병호, 『광주동광교회 30년사』, 203.
61) 상무제일교회 주보, 1980.6.8.
62) 『대한예수교장로회 제65회 총회회의록』(1980.9.25.-30, 서울영락교회당), 234
63) “民族의 來日을 위해 기도하자: 총회任員들 現地에 救護金전달, 6月1日 光州위한 기도일로”, 「한국기독공보」 1980.6.7., 1.
64) “구호금 2千여만원 社會部 光州現地에 전달”, 「한국기독공보」, 1980.7.5., 1.
65) “光州市民돕기 獻金 총회사회부서 傳達”, 「한국기독공보」, 1980.8.9., 1. “총회사회부가 전달한 헌금 총액은 2천만원이 됐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65회 총회회의록』, 198도 참고.
66) “광주시민을 위한 헌금(1980.7.25. 현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회보」(1980.8.), 16.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작금의 국내 정세는 매우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으며 특히 광주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 준 바 있습니다.
이에 본 교단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광주 시민과 나라를 위하여 본 교단 산하 모든 교회가 6월 8일 주일을 맞아 한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고 헌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보내실 곳: 1. 전남 광주시 사동 49-2. 전남노회 교육원 내 고민영 목사 앞(기장 전남노회 대책본부). 2.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사무처(전체구좌번호 500470번)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이국선[6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5월 22일 긴급임원회를 소집하여 "광주일원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25일 성령강림주일을 "나라를 위해 특히 광주사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전국교회가 기도하기로 결의"했다.[68] 5월 25일에는 예장통합, 기감, 기장, 구세군, 기성, 루터, 예장합동 7개교단 22명이 모여 가칭 '한국기독교시국수습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에 조향록 목사(기장)가 임명되었다. 이 위원회는 6월 1일, 8일 주일에 전국교회에 광주시민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도록 요청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했다.[69] 또한 5월 30일 영화교회에서 개최된 한국예수교협의회(KCCC) 제16차 총회에서, 6월 2일 7개교단에서 모인 재경 호남교역자들[70] 85명도 서울 은광교회에서, 6월 4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회장 공덕귀)의 6개교단 산하 교회들이, 6월 5일 대전기독실업인회가 6월 월례회를 통해 광주시민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모아 광주로 전달했다.[71] 이로보건데, 교회들은 고립된 광주의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기도와 헌금을 통해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다고 본다. 하지만 신군부의 광주에 대한 허위보다와 거짓, 왜곡을 통한 호도는 계속 이어졌고, 급기야 기독청년들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다.

1980년 5월 30일, 감리교 형제교회 청년이자 기독교청년연합회(EYC) 농촌선교분과위원장인 김의기 학생(서강대)이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남기고 투신 자결했다.[72] 김의기는 왜곡, 거짓, 악의, 허위선전으로 광주를 호도하는 "유신잔당"들에 대항해 "역사를 정방향에 서게" 분연히 "일어나라"고 요청하며 광주의 실상을 죽음으로 알렸다.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참한 살육으로 수많은 선량한 민주시민들의 뜨거운 피를 오월의 하늘 아래 뿌리게 한 남도의 공기가 유신잔당들의 악랄한 언론탄압으로 왜곡과 거짓과 악의에 찬 허위선전으로 분칠해지고 있는 것을 보는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73]

김의기의 투신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6월 9일, 기장 성남교회 청년으로 EYC 회원이었던 김종태가 '광주시민 학생들의 넋을 위로하며'라는 글을 남기고, 이화여대 앞 도로에서 민주화를 호소하는 선언문을 배포하며 분신자결을 시도했다. 그는 경찰에 의해 긴급후송 되었으나 세브란스병원에서 사망하였다.[74] 김종태는 민심교란으로 광주 항쟁을 왜곡하며 진실을 가려

---

67)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제65회 회의록』(1980.9.9.-12, 경남 진주제일교회당), 125.
68) "光州사태위해 기도-NCC서도 요청", 「한국기독공보」 1980.6.7., 6.
69) "時局수습對策委 組織-委員長에 趙香祿목사", 「한국기독공보」 1980.6.7., 6. 여기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다. 김종대, 유호준, 임택진, 배명준, 박치순, 전성천, 김윤식, 양신석, 김창인(이상 예장통합), 김지길, 박설봉(이상 기감), 강원용, 조향록(이상 기장), 김순배, 김석태(이상 구세군), 김희택, 박명원, 정진명, 이봉성, 황대식(이상 기성), 지원상(루터교), 장성칠(합동).
70) '호산나회'로 호남권 출신 목회자들이 시무하는 교회들의 모임이다. 이영성 편찬, 『광주서현교회 90년사』(삼일인쇄사, 1998), 229.
71) 「한국기독공보」 1980.6.7., 6-7.
72)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제6차 정기총회 및 정책협의회」(1981.2.19.-21., 성마카엘신학원), 25, 별지6.
73) 『자료총서』, 2권, 112.
74)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제6차 정기총회 및 정책협의회」(1981.2.19.-21., 성마카엘신학원), 27, 별지6.

“국민의 저력을 우습게 보고 있는” 군부에게 죽음으로서 경고하며 광주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렸다.

> 국민 여러분. 과연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은 것입니까? 하루 삼시 세끼 끼니만 이어가면 사는 것입니까? 도대체 한 나라 안에서 자기 나라 군인들한테 어린 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백수천명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며 죽어 가는데 나만, 우리 식구만 무사하면 된다는 생각들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지금 유신잔당들은 광주 시민 학생들의 의거를 지역 감정으로 몰아쳐 (전라도 것들)이라는 식의 민심교란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내 작은 몸뚱이를 불 사질러 광주 시민, 학생들의 의로운 넋을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75]

한편, 광주의 실상은 에큐메니컬 관계를 통해 해외로도 전해졌다. 1980년 8월 세계교회협의회(WCC) 중앙위원회 및 실행위원회에 당시 5.18민주화운동이 한국문제로 상정되어 예장통합 총회는 교단의 입장을 초안하여 보내도록 했고,[76] 일본연합기독교회(United Church of Christ in Japan, Kyodan)는 7월 21일 기장, 예장통합 총회장, 감리교 감독에게 서신을 보내 광주사태와 기독교 인사들의 군법회의 소환에 대해 위로를 전하며 한국교회와 연대의 뜻을 표했다.[77] 또한 광주제일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던 일본 도쿄의 시나가와 교회에서는 6월 9일 담임목사가 직접 광주제일교회를 방문하여 구호금 80만엔을 전하고 광주의 상황을 살펴보았다.[78] 이상에서 보듯이, 광주는 군부가 철저히 고립시키고 시민들의 항쟁을 악의적으로 거짓과 왜곡으로 허위보도 하며 민심을 교란시키고 있었으나, 광주는 고립되지 않았다. 교회는 전국 조직의 네트워크를 통해, 그리고 기독 청년들은 목숨을 던져 광주의 실상을 광주 밖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또한 교회는 세계교회와의 에큐메니컬 연대를 통해서 광주의 실상을 해외로까지 알렸다.

## 4.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한국교회 역할에 대한 연구과제

5.18민주화운동기간 열흘 동안 실제로 교회는 개별적으로 공적 예배를 통해 항쟁에 참여했다. 설교를 통해 교인들과 공동의 시국인식을 가지며 비판하고, 성서에 근거해 행동 방향을 설정하고 요청했다. 교인들은 교회 외곽 조직과 에큐메니컬 조직을 통해 인적 네크워크를 가동하여 적극적으로 항쟁의 현장에 등장하여 군부에 저항했다. 또한 광주시내 15개교단 200여 교회는 교파를 초월하여 ‘광주기독교비상구호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구호와 수습, 교회의 피해상황을 조사하는데 앞장섰다. 나아가 교회는 교회-노회-총회의 조직과 에큐메니컬 네트워크를 통해 고립된 광주의 실상과 진실을 전국에, 세계에 알렸다. 여기에 더하여 에큐메니컬 기관에 속한 기독 청년들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 광주의 진실을 국민에게 전했다. 이로 보건대, 열흘간의 항쟁기간동안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폭력과 악의 현장에서 침묵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교회는 ‘조용히, 우는 자와 함께 동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국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광주지역 개신교회는 계엄군의 폭력과 부정의에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항쟁에 개입하고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교회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

---

75) 김종태, “광주시민 학생들의 넋을 위로하며”. 「영원한 노동자 김종태」(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1982), 5-6.

76) 『대한예수교장로회 제65회 총회회의록』, 234. WCC의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77) Letter of USHIROKU Toshio, Moderator of UCCJ to Moderator PCK, PROK, Bishop KMC, July 21, 1980.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832895 (접속: 2020.08.12.)

78) 광주제일교회, 「당회록」(1980,6.15.)

및 자료축척 부실 또한 분명하다. 이는 당연히 개신교 신자와 지도자, 그리고 조직 교회의 5.18민주화항쟁에 대한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 연구 성과는 턱없이 부족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회의 공적 자료와 연구의 빈약은 자칫 교회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침묵으로 읽혀질 수 있다. 하지만 항쟁참여에 대한 조직 교회의 공적 기록자료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의 종교별 안장목록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전체 774기 중 129기가 개신교인의 묘소로 약 17%를 차지하며 다른 종교에 비해 눈에 띄게 많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해석이 필요한 대목이 있다. 교인의 참여수는 월등한데 교회의 공적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간극에 대한 해석이다. 이는 교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한 개인이 참여한 것을 교회의 참여로 볼 수 있느냐는 신학적 문제이다. 즉 '교인'의 참여를 '교회'의 참여로 볼 수 있는지? 혹은 교인들의 참여를 단순히 개인의 참여로만 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이중정체성 즉 시민정체성과 종교정체성이 국가폭력의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관하여 작동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교인의 항쟁참여가 교회의 참여라고 직접 말 할 수 없지만, 교회를 통해 형성되는 종교정체성이 항쟁에로의 참여라는 시민정체성으로 나아감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항쟁 참여자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 해 준다. "종교인이 아니었다면 중간에 많은 갈등과 회의를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견딜 수 있죠."(김경천), "부상자들은 어떤 경우라도 수술하고 살려내야 되겠다. 국가는 이들에게 상처와 죽음을 안겼지만 우리는 기독 정신으로 살리자"(안성례),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사회에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18세, 17세부터 그런 운동에 가담을 했고...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권, 헌법이 우리에게 보장을 해 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특정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오"하고 반항을 할 수밖에 없었지."(조아라)[79] 문용동은 전도사가 데모를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말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무슨 소리를 하느냐? 세상이 어렵고 민중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럴 때 목사들이 앞장서서 나가야 한다. 모세를 보라. 고통 받고 있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갔지 않느냐?"고 답했다.[80] 류동운은 도청으로 가려는 자신을 말리는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 설교 말씀에 역사가 병 들었을 때 누군가가 역사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만이 이 역사가 큰 생명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때 아버지 신념이 흔들리지 마시고, 붙잡지 말아 주세요."[81]하고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항쟁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종교인들에게 종교적 신념은 단순히 특별한 내용에 대한 교리적 헌신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 전체를 형성하고 구성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결코 주변적인 문제가 아니다. 종교적 신념은 신념의 중심부에 견고하게 자라잡은 중심축이다."[82] 즉 개인의 종교정체성과 시민/국민 정체성은 분리되지 않고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회를

79) 5.18기념재단 편,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7: 개신교편』, 105(김경천), 375(안성례), 726, 747(조아라).

80) 이우주, "5.18 당시 고 문용동 형과의 짧은 대화...", 고 문용동전도사추모비건립위원회, 『새벽길을 간 이』(푸른인쇄사, 2001), 47-48.

81)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79회 동기회, 「류동운 추모집」, 3, 12-13.

82) Maeve Cooke, "Salvaging and secularizing the sematic contents of religion: the limitations of Habermas's postmetaphysical proposal", *International Journal for Philosophy of Religion* 60.1-3 (2006), 190. 최경환, 『공공신학으로 가는 길: 공공신학과 현대 정치철학의 대화』(도서출판100, 2019), 111에서 재인용.

통해 형성된 종교정체성은 삶을 형성하고 구성하여 불의와 폭력이 난무한 현장에서 시민정체성으로 기폭 되었다고 한다면, 민주화운동기간 동안 교인의 참여 역시 교회의 간접적 참여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듯 개신교회는 실제로 5.18민주화운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했다기 보다는 개신교 주체의 자료축척과 연구 부진이 교회를 그렇게 보이게 한 결과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는 자료의 빈약함 및 연구의 부진과는 달리 교회와 교인의 민주화운동에로의 적극적 참여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첫째, 한국교회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교인과 교회의 활동을 집대성해야 한다.

5.18기념재단에서 구술기록으로 『개신교편』을 내놓고 있지만, 개별적 구술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당시 개별적 참여도 있지만, 교회 청년회, 각 교단 청년연합회 및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를 축으로 하는 인적 네트워크와 조직을 통해 움직여 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 NCCK 인권위원회의 조직도 항쟁에 직접 참여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기독학생총연맹(KSCF), YWCA, YMCA, 그리고 기독학생연합(SCA)의 활동도 살펴보아야 한다. 송백회 회원 임영희의 증언에 따르면 소위 '학습모임'이라는 의식교육은 김천배, 강신석 목사가 만든 YMCA의 '나사렛 성서연구회'에서 이뤄졌는데, KSCF 회원들이 주 멤버였다고 한다.[83] 이 증언으로만 미루어 보아도, 무진교회-YMCA-KSCF-송백회-YWCA-광주사태수습대책위원회가 인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각 교단별 청년회연합회 활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1980년 5월 광주에서 이들의 인적교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집대성해야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교회의 조직적 참여에 대한 실증을 위해서도 교회의 공적 기록을 계속 찾을 필요가 있다.

둘째, 수습 및 구호 활동이 개신교회의 주요한 활동이었지만, 이에 대한 기록과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 더 조사가 필요하다. 우선 광주지역 교회의 5.18민주화운동 참여에 대한 가장 상세한 개신교 자료인「湖南宣教」1과 2의 기록이 다르다(아래 표 참고).

| | 「湖南宣教」1[84] | 「湖南宣教」2[85] |
|---|---|---|
| 날짜 | 5월 22일 | 5월 23일 오전 10시 |
| 참석인원 | 15개교파 2백여교회 1백여명 | 62명 |
| 임원 | 위원장 김신근 목사<br>부위원장 문정식 목사 외9명<br>총무 이인국 목사 | 위원장 한완석 목사 |
| 명칭변경일 | 5월 25일 | 5월 26일 오전9시 30분 |
| 임원개편 | 위원장 한완석<br>총무 방철호 | |

광주시기독교수습대책위원회/구호대책위원회 조직에 관한 서술 비교

또한 '기독교수습대책위원회' 총무 이인국 목사와 '기독교구호대책위원회' 방철호 목사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지 않다. 두 명 모두 총무교체 없이 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을 증언하고 있

83) 임영희, "송백회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나의 의무", 5.18기념재단 편,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9: 송백회편』, 336.
84)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湖南宣教」1(1993.5), 21.
85)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2)",「湖南宣教」1(1993.5), 17-18.

다.[86] 또한 5월 27일에 '기독교구호대책위원회'가 시행한 교회 피해상황을 각 교회별로 인명 피해자를 확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셋째, 정보 전달에서 교회 조직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실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시 전국 조직을 갖고 있는 각 교단 청년회의 움직임 그리고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기독학생총연맹(KSCF), YWCA, YMCA, 그리고 대학 YMCA, YWCA, KSCF 연합조직인 SCA(Student Christian Association)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더불어 세계교회와의 소통이 구체적으로 교회조직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도 과제로 남아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연합기독교회(교단), 일본 시나가와 교회, 세계교회협의회의 국내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관계된 해외교회의 자료도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이러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정리하여 개신교회 및 기관의 5.18민주화운동 참여 나아가 종교인의 5.18참여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차세대 연구자들이 개신교가 나아가 종교가 국가폭력의 상황에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문헌 조사이다. 기존 자료에서 개신교 관련 내용과 광주지역 개신교회와 교회관련 유관기관들이 생산해낸 공적 문서를 수집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의 주보, 당회록과 노회, 총회의 회의록 및 기관의 회의록, 일지를 공적문서로 수집해야 한다. 광주지역을 넘어 전국교회의 교회 공적문서를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당시 한국교회의 5.18민주화운동 참여와 성격 그리고 교회의 역사인식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례 분석과 구술 채록이다.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된 개신교인의 유족을 통해 참여 동기 등의 사례를 분석해야 한다. 묘비의 종교표시는 유족의 종교성향 표시이기도 하다. 십자가 문향을 묘비에 새기므로 항쟁에 참여한 자들의 종교적 동기를 유족이 나타내었다고 보고, 이들의 항쟁의 참여 동기의 신앙사적 의의를 분석해야 한다. 동시에 이들이 어떤 교회 혹은 기독교 기관에 속해 있는지도 확인되어야 한다. 당시 기록 문서를 남긴다는 것은 삼엄한 계엄령 하에서 위험한 일임은 분명하다.[87] 따라서 문서로 조직적 개입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쩌면 국가폭력에 항쟁으로 저항한 민주화운동의 역사는 구술사 연구방법이 적합할 것이다. 특히 EYCK, KSCF, YMCA, YWCA, SCA 등과 관련된 인물들의 구술채록은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 5. 결론

86) 5.18기념재단 편,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7: 개신교편』, 271-91(방철호)와 484-499(이인국) 비교.

87) 김상집의 증언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 준다. 그는 말하기를, "사람들 다 보내고 서점 안에 상황일지부터 시작해갖고 총이니 수류탄이니 온갖 화염병이니 이게 전부 다 쟁여져 있잖아. 그 유인물 같은거, 프랑 같은거. 이거 전부 다 뒷방이 있는데 뒷방에 거기에 불 다 태워븐 거야. 싹 형수가 싹 태워 없앴어." 5.18기념재단 편,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7: 개신교편』, 179. 김상집 구술 내용 중.

서울 안동교회의 주보를 발견하면서 용기를 내어 연구를 시작했지만, 한편으로 연구자는 5.18을 직접 경험하지도 못한 2세대 연구자이며, 광주에 거주하지도 않는 외부자의 시선으로 봐야 하는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배우는 자세로 연구에 임했다.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2세대 연구자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기록이든 구술이든 자료의 부재는 사건의 재구성이 불가능하여 현상의 부재로 읽힐 수밖에 없다.

개신교회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와 연구는 이에 대한 일반학계의 연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40년이 지났지만 연구가 거의 공백에 가까이 놓인 것은 충격이다. 교회의 공적 자료와 개신교계 연구의 부진은 1980년 5월 당시의 광주의 교회들의 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보여 질 수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 교회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공적 예배를 통해 계엄군의 폭력을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성취하는데 용기를 주며 교인들의 행동을 독려했다. 특히 조직적으로 교파를 초월하여 수습과 구호에 적극 나서서 찢기고 아파하는 시민들의 울음과 함께 했으며, 전국적인 교회 및 연합기관들을 통해 광주시민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군부에 의해 고립된 광주의 실상을 전국에 알렸다. 또한 에큐메니컬 관계망을 통해 세계교회에도 광주의 진실을 전했다. 이같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교회의 실제와 기록 간에 불균형이 드러났다.

역사학자 설혜심에 따르면 역사학은 “오직 엄정한 사료의 구성 위에 존재해야 한다. 동시에, 그 사료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거짓말을 하고, 욕심을 가지고, 꿈꾸는 존재이다”[88]라고 한다. ‘실제’와 ‘기록’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자료의 축척이 최우선이다. 그것이 인간이 만든 거짓말이든 욕심의 투영이든 꿈의 표현이든 우선 자료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개신교계는 아직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초자료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 5.18기념재단에서 증언록을 내 놓았지만, 이들이 어떤 인적 네트워크에서 활동했는지를 확인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기에 일차로 개신교계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의 축척이 최우선 과제이며, 기록을 남길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술사 연구를 통한 증언 채록이 시급하다. 40년이 지났다. 20대에 당시 광주 현장에 있었더라도 벌써 60세가 되었다. 시간이 많지 않다.

5.18의 정신은 ‘삶과 죽음과 생명’이 이어지는 십자가의 역설적 진리가 실현된 시공간이므로 바로 이곳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내가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로 지금 우리의 현존은 그들의 죽음을, 그들의 희생을, 그들의 생명을 터전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개신교회에게는 민주화의 유산은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 승화시켜야 할 유산은 존재하지 않는다”[89]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개신교회와 기관들에게는 이제 연구의 시작으로 보인다. 이 연구도 한 번의 연구로 그치지 않고 선행연구와의 연속성을 가지고 연구의 축척을 통해 50주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토대가 된다면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

88) 설혜심, 『온천의 문화사: 건전한 스포츠로부터 퇴폐적인 향락에 이르기까지』(한길사, 2002), 279.
89) 이해찬, 유시민 외, 『기억하는 자의 광주』(돌베개, 2010 (개정증보판)), 487.

**<참고문헌>**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1)-(13)”,「湖南宣敎」1-13 (1993.5-1995.11).
“광주시민을 위한 헌금(1980.7.25. 현재)”,「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회보」(1980.8.)
「한국기독공보」1980.6.7., 1980.7.5., 1980.8.9.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제6차 정기총회 및 정책협의회」(1981.2.19.-21., 성마카엘신학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제65회 총회회의록』(1980.9.25.-30, 서울영락교회당)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제65회 회의록』(1980.9.9.-12, 경남 진주제일교회당)
5.18기념재단 편,『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7: 개신교편』(도서출판 심미안, 2015).
5.18기념재단 편,『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9: 송백회편』(도서출판 심미안, 2019)
Arnold A. Peterson, *The 5.18 Kwangju Incident*(n.p.,1990), 정동섭 역,『5.18 광주사태』(풀빛, 1995)
KNCC 인권위원회 편,『한국교회 인권선교 20년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94)
KNCC 인권위원회 편, 조이제 집필,『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05)
Letter of USHIROKU Toshio, Moderator of UCCJ to Moderator PCK, PROK, Bishop KMC, July 21, 1980.
강성열,『방림교회 50년사』(한들출판사, 2015)
고문용동전도사순교기념사업회 엮음,『새벽길을 간 이』(한들출판사, 2018 개정증보판)
광주계림교회 50년사 편찬위원회 편,『광주계림교회 50년사』(새론문화사, 1997)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엮음,『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전61권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1997-2013)
광주동광교회 주보, 1980.6.1.
광주무진교회 주보, 1980.6.1., 1980.8.3.
광주벧엘교회 주보, 1980.5.25., 1980.6.1.
광주제일교회,「당회록」(1980,6.15.)
국가보훈처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당신이 잠든 곳에 우리 마음 함께 있네: 국립5.18민주묘지 비문록』((주)테코디자인그룹, 2018)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제1묘역 종교별 안장목록”2016.01.15.현재(미간행 조사자료).
김상집,“5.18민주화운동에서 YMCA 및 기독사회운동의 역할 토론문”,「5.18광주민주하운동과 기독사회운동 조명」, 광주YMCA 제99차 시민논단 자료집, 2020.6.3.
김수진,『광주제일교회 100년사』(쿰란출판사, 2006)
김종태,“광주시민 학생들의 넋을 위로하며”.「영원한 노동자 김종태」(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1982)
김흥수,“5월항쟁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반응”,「한국기독교와 역사」5 (1996.9), 155-183.
상무제일교회 주보, 1980.6.8.
서병호,『광주동광교회 30년사』(도서출판 글로리아, 1991)
서울안동교회 1980.6.1.주보
설혜심,『온천의 문화사: 건전한 스포츠로부터 퇴폐적인 향락에 이르기까지』(한길사, 2002)
소준섭 대표기록,『광주백서: 1980년 광주에서 기록된 최초의 항쟁백서』(어젠다, 2018).
이금남 외 7인 편집,『남광교회 45년사』(쿰란출판사, 2006)
이영성 편찬,『광주서현교회 90년사』(삼일인쇄사, 1998)
이우주,“5.18 당시 고 문용동 형과의 짧은 대화...”, 고 문용동전도사추모비건립위원회,『새벽길을 간 이』(푸른인쇄사, 2001), 47-48.
이해찬, 유시민 외,『기억하는 자의 광주』(돌베개, 2010 (개정증보판))
정춘식,『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5.18민중항쟁 증언록 1, 2』((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2014)
최경환,『공공신학으로 가는 길: 공공신학과 현대 정치철학의 대화』(도서출판100, 2019)
최정운,『오월의 사회과학: 사회과학자의 시선으로 새롭게 재구성한 5월 광주의 삶과 진실』(오월의 봄, 201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1980년대 민주화운동 Ⅵ-Ⅷ』(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엮음,『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풀빛, 1990)
한규무,“5.18 민중항쟁과 광주·전남지역 개신교계”,「한국기독교와 역사」37 (2012.9), 181-212.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79회 동기회,「류동운 추모집」(1985)
황석영 기록,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풀빛, 1985)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기록,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엮음,『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광주 5월 민중항쟁의 기록』(창비, 2017(전면개정판))

❒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학술심포지움 '5.18민주화운동과 기독교' 제1토론 (2020. 9. 5)

# 「5·18민주화운동과 한국교회: 항쟁기간 광주지역 교회의 활동, 연구동향, 그리고 연구과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박진우
(5·18기념재단)

이 토론문은 개신교에 문외한이며, 非교인인 토론자의 구성과 재해석이기에 혹시 모를 오독은 전적으로 토론자의 책임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최상도교수님(이하 발표자)이 서론에서 밝혔듯이 이 발표문은 5·18 당시의 10일간의 항쟁기간 동안 광주지역 개신교회의 주요 활동에 대한 역사기록 과정과 학계 연구에서의 개신교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한규무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자들의 선행연구와 새롭게 수집되고 발견된 자료를 통해 교회의 활동을 실증한 후, 연구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발표자가 아쉬움을 토로한 것처럼 개신교인들의 5·18 관련 활동이 교회 및 개신교 조직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료와 증언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글을 작성한 발표자의 고충이었을 것입니다. '항쟁기간 광주지역 교회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직 엄정한 사료'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실제'와 '기록'의 불균형으로 인해 연구에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발표자는 이것을 한계로만 규정하지 않고 왜 집대성하여 역사화하지 못했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교회 및 교인들의 활동에 주목했습니다.

이 글이 발표문인 점을 고려해서, 더 좋은 논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점을 제언하겠습니다.

첫째, 수많은 교인들이 항쟁에 참여했음에도, 교회의 공적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간극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이중정체성 즉 시민정체성과 종교정체성이 국가폭력의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중정체성이 증언하지 않은 수많은 교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지?, 그보다 더 많은 非교인들의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것인지도 고민해 봐야할 것입니다.

둘째, 발표자가 언급한 것처럼 교회는 전국 조직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독청년들은 목숨을 던져 광주의 실상을 광주 밖으로 전달했습니다. 고립된 광주를 외롭지 않게 했고,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토론자가 이 부분에 있어 정말 문외한이라서 하는 질문입니다. 1980년 5·18 당시 그리고 그 이후, 침묵을 넘어 광주와 5·18을 폄훼·왜곡했던 교회의 활동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다음 언급하는 내용이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980.05.21.)전남대 학생회에서는 제일교회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어떤 폭력과 방화도 막아야 한다. 광주 시민의 긍지를 살리자'고 설득(『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59쪽)

-(1980.05.22.)강진, 오전부터 광주에서 시위차량 계속 진입. 광주 현지 상황 알리며 읍민의 궐기호소. 수천 명의 읍민, 청년, 학생들 자체시위. 강진읍 교회에 본부를 두고 청년회의소 회원, 기독청년회, 강진농고 학생, 청년들 활약(『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83쪽)

-5·18의 또 다른 상징 해남읍교회(「해남신문」, 2020.06.02.)

-(1980.05.25.)광주 각 교회에서는 예배를 보는 자리에서 부상자 돕기 1천만 원 모금운동이 시작됐음을 알리고 모금에 들어가 이날 하루 동안 1백만 원 모금. 광주시내 목사들은 24일 저녁 초교파적으로 모금 결의(『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107쪽)

-(1980.05.27.)YWCA에서 밤을 새우던 50여 명의 여자는 인근 교회로 피신. 남자들만 20여 명 남았으나 총이 10정밖에 없어서 무기를 받으러 도청을 감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116쪽)

넷째, 이 발표문 내용과는 별개로 5·18 40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이 글이 '현재 대한민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주지하다시피, 5·18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한 사람들의 힘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었던 순간이었습니다. 1980년 오월 당시와 그 이후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신한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 이러한 작업들이 순조롭게 이뤄져 발표자의 연구가 좋은 결실을 맺기 바라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학술심포지움 '5.18민주화운동과 기독교' 제2발제 (2020. 9. 5)

# 1980년 5월 광주와 김대중 구명운동, 그리고 자유공조
## -북미주 개신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고지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후연구원)

1. 들어가며
2. 개신교 네트워크의 출현과 '김대중 구명운동' 관계
2.1. 개신교 네트워크의 출현과 반 유신운동(1970년대 후반)
2.2. 미주 개신교 네트워크의 초기 '광주항쟁' 인식과 대응
3. 1980년 5월 광주와 김대중 구명운동, 그리고 한미관계
3.1. 미주 개신교 네트워크의 김대중 구명운동과 자유 공조
3.2. 전두환의 방미(訪美) 와 승인, 그리고 구명운동의 귀결
4. 맺음말

## 1. 들어가며

한국사회 민주화이행에서 1980년 '5월 광주'는 권위주의 유신의 온전한 청산과 정치민주화를 향한 민중항쟁의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한국민족문제에서'5월 광주'는 주한미군으로 상징되는 분단체제에 본원적 물음을 제기한 역사적 사건이다.[90] 그 결과 1980년 5월 이후 한국사회 민족민주운동은 '5월 광주'가 던진 두 물음에 치열한 접근으로 전개되어 왔다. 1980년 5월 이후 미주 지역 개신교 네트워크의 김대중 구명운동은 광주항쟁이 제기한 민족·민주물음에 어떤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에서 연구는 출발하였다. 역사적으로'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2004년 재심청구로 무죄판결을 받아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이다. 역사 연구에서 완료형의 사건을 소환하여 기억할 때, 특히 김대중 사건과 같이 권위주의 군사정권에 의해'조작'되어 명예회복이 되기 전까지 개인의 삶 전체를 왜곡시켰던 사건을 불러들일 때, 연구자는 그가 걸어온 민중·민족·민주의 궤적에 대한 예우와 존중의 변이 먼저 고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두 가지 관점에서 1980년 5월 광주 시점으로 객관화 하고자 하였다. 첫째, 1980년 5월 미주에서 전개된 개신교 네트워크의 '김대중 구명운동'은 1970년대 반 유신운동의 연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1970년대 권위주의 유신권력에 저항한 민주화·인권운동은 개신교 에큐메니컬 사회선교부문의 주도로 재야민주세력과 연합전선을 형성하였다. 이 배경에 미국교회 및 세계교회의 아시아 선교연대와 지원은 절대적인 조건이 되고 있었다. 1975년 11월 한국인권 문제 지원을 위해 출발한 '북미주인권연합(North America Coalition for Human Rights in Korea, NACHRK)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1976년 개신교 신자 카터 대

90) 본 연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대신에 '5월 광주' 또는 '광주항쟁', 그리고 당대 표기인 '광주 사태' 등으로 표현하였다.

통령의'인권·도덕외교'천명은 범 개신교 인권운동의 지지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1980년 5월의 김대중 구명운동은 1970년대 개신교'반 유신운동'의 연장에서 세계교회와의 연대, 자유세계 공조로 접근될 수 있다. 둘째, 냉전기 분단 한반도 지형에서'김대중 구명운동'의 위치문제이다. 1980년 5월 18일 이후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 재확인과 경제지원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신군부에 대해 질서회복 종용과 정치 자유화를 지원 또는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 정상의 정치적 타협의 외부 변수인 김대중 구명운동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 반공주의 틀에서 전개되어 냉전기 분단 한국 지형 안에 포섭되어 있었다. 이는 '5월 광주'가 제기한 민족민주문제의 한계요인으로 접근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비밀 해제되고 있는 자료들에 힘입어 광주항쟁을 한미관계로 접근한 연구들이 적지 않게 축적되어 왔다.[91] 반면에 1980년 김대중 구명운동을 포함하여 미주지역 개신교 네트워크의 한국 민주화·인권운동 지원 관련 연구는 아직까지 미개척 분야로 출발선에 놓여 있다.[92]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잠정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1980년 5월 미주 개신교 네트워크의'김대중 구명운동'은 1970년대 반 유신운동의 연속에서, 운동이념으로는 개신교 인권사상, 자유민주주의, 정치 자유화 구호가 결합된 자유세계 공조노선으로 전개된다. 개신교 네트워크로는 '북미주인권연합(NACHRK)'와 '아시아 인권을 위한 교회위원회(CCHRA)'를 중심으로 한인 민주단체 '국민연합 북미본부'와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미주본부'가 동일 노선으로 연대하였다.[93] 이 잠정 결론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 국면에서 한국개신교 에큐메니컬 진영의 민족·민주문제 접근의 외연과 한계를 함의할 수 있을 것이다.

## 2. 개신교 네트워크의 출현과 '김대중 구명운동' 관계

### 2.1. 개신교 네트워크의 출현과 반 유신운동(1970년대 후반)

1970~1980년대 개신교 민주화·인권운동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거점으로 세계교회와 해외 기독자 조직들의 인적·물적 지원을 토대로 국내 유신정부를 압박하는 저항연대를 형성하였다. 1975년의 안보정국과 긴급조치 이후 한국 인권문제가 국제이슈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해외 기독자 네트워크들이 출현하였다. 국외 기독자 비공개 네트워크 '민주동지회'는 1975년 11월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직된"한국민주사회건설세계협의회"(World Council for Democracy in Korea)로 출발하여 1977년 10월"한국민주화기독자동지회(International Christian Network for Democracy in Korea)"로 변경하여 국내외 개신교 민주화·인권운동을 지원하였다.[94] 미국, 캐나다 그리스도교 교파연합으로 출범한'한국 인권을

91) 이삼성,「광주학살, 미국·신군부의 협조와 공모」『역사비평』, 1996 가을호; 이삼성,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 한길사, 1993; 정일준,「미국 개입의 선택성과 한계」『갈등하는 동맹』, 역사비평사, 2010; 박태균,「1970년대의 한미관계와 학습효과」『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창비, 2006; 박원곤,「5.18광주 민주화 항쟁과 미국의 대응」『한국정치학회보』 45, 2011; 장준갑·김건,「1980년대 초반(1980~1981) 한미관계 읽기」『미국사연구』 38, 2013; 홍석률,「김대중과 미국」『김대중대통령의 정치사상과 국제이해』(2019. 김대중 민주평화아카데미국제학술회의), 2019.7.5. 등.

92) 최용주,「광주항쟁과 초국적 후원 네트워크」『한국학』 43, 한국학중앙연구원, 2020. 일본의 '김대중 구명운동' 연구로는 이미숙,「1980년 '일한연대' 활동의 성격과 의미:일본 시민사회의 광주 5·18과 '김대중 구명운동' 자료를 중심으로」『민주주의와 인권』 19, 전남대5.18연구소, 2019.

93)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미주본부'는 1973년 김대중의 미국 활동기 반 유신운동 기구로 조직되어 미주지역 활동 기반이 된다.

위한 북미주연합((North America Coalition for Human Right in Korea, NACHRK, 북미주 인권연합, 또는 인권연합)'은 규모와 영향에서 가장 큰 미주 개신교 인권단체로 미국 정관계 대상으로 한국문제 여론형성을 주도하고 국제사회에 한국 인권상황을 알릴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북미주 인권연합」의 결성, 회원구성 및 운영, 임원단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인권연합」은 1975년 11월 19일 뉴욕에서 한국 인권문제 관련 그리스도교 단체 및 개인들이 회원으로 합류했다.[95] 결성 취지는'계속되는 한국 인권억압 상황에 대처하고 모든 한국 국민들을 위한 효과적 인권 지원'을 위해 창립되었다.[96] 인권연합 결성 목적은 ①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호소 동원(네트워킹) ②한국 인권 옹호를 위한 관련조치 촉구(로비활동) ③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분석 및 공유(정보수집) ④ 한국인권 피해자 지원책 마련(지원활동) 등이다.[97] 토론토, 시카고, 보스톤, 아틀랜타, 인디애나폴리스, 뉴욕, 워싱턴 D.C., 디트로이트, 로스앤젤래스 등에 지역그룹을 두었다.「인권연합」의 메일링 리스트는 300명에서 700명(1975~1978년 현재), 이 가운데 'A그룹'목록은 80명에서 200명으로 분류·관리되었다.[98] 이를 통해 「인권연합」의 주요 활동목표가 미 교회 및 정관계, 의회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로비활동임이 확인된다. 「인권연합」의 핵심 기구는 실행위원회(steering committee)로 총회 소집, 정책 및 프로그램 결정, 직원 고용, 감독 및 후원자 모집, 지역 및 로컬위원회 예산 감독, 전 세계 인권 네트워크 합의전략 조정 등「인권연합」사무를 총괄했다.[99] 1976~1980년 「인권연합」 회원은 아래와 같다.(기구 회원 포함)

[표-1]< 북미주인권연합 기구 회원(1976년 현재)>[100]

| 국가 | 명단(원 기구명) |
|---|---|
| 미국 | NCCUSA-Commission on Justice · Liberation · Human Fulfillment<br>NCCUSA-Division of Church & Society, International Affairs Working Group<br>NCCUSA-Commission on Regional and Local Ecumenism<br>NCCUSA-Division of Overseas Ministries, East Asia Working Group<br>NCCUSA-DOM, EAWG, Korea Joint Action Group<br>-Episcopal Church, Presbyterian Church US, United Board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Asia, United Church of Canada, United Methodist Church, United Presbyterian CHurch USA, Lutheran Church in America, Maryknoll Fathers, Maryknoll Sisters, Presyterian Church of Cananda, Church Women United<br>-United States Catholic Conference<br>-Society of Jesus, Wisconsin Province<br>-Maryknoll Fathers/Maryknoll Sisters |

94) 민주동지회 결성과 주요 인물에 대해서는 김흥수, 「한국민주화기독자동지회의 결성과 활동」(『한국기독교와 역사』1, 2007) 참조.

95) 패리스 하비, "Dear Colleagues and Friends;Statement on the Present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1979.11.1.

96) 'A Statement of Intent North American Coalition for Human Rights in Korea(1975.11.19.)' 이 문서는 인권연합 창립 시기 작성된 것으로 조직 목적, 구성, 회원 등이 확인된다.

97) 인권연합은 1948년 유엔 인권선언, NCCK 및 기독교 인권관련 정책과 조항을 따른다. 위의 자료 'Affirmation'. 1쪽.

98) NACHRK, "Overview of the program(8/76~8/78)", 5쪽.

99) 위의 자료, 'Steering Committee', 2쪽. 이외에도 인권연합의 주요 활동은 a) 한국 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지역 및 로컬 단체 네트워크 지원, b) 국가 기관(national agencies) 참여이다. 국가기관 참여는 미 의회 한국관련 청문회가 대표적이다. 이외 직접 지원 활동으로 a) 워싱턴, 오타와 사무국 및 유엔참석, b) 자료 문서화, 연구센터 지원 등, c) 지역 및 로컬 그룹을 대상으로 한 스태프 지원 및 자문, d) 한국 개신교 커뮤니티 및 세계 네트워크 관계 유지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활동했다. 위의 자료, 'Services of Coalition'.

| | | |
|---|---|---|
| 캐나다 | Canadian Council of Churchs<br>United Church of Canada-Ethnic Minorities Concerns<br>Womens Interchurch Council of Canada<br>Committee of Democratic Korea(Canadian) | |
| 아시아 지역회의 | Episcopal Church<br>Baptist Church(American)<br>United Presbterian Church USA | United Methodist Church<br>United Church of Christ |
| Asian Center for Theology and Strategy(ACTS)<br>Association of Korean Christian Scholars<br>Church Committee on Human Rights in Asia<br>Christian Church, Human Rights Office<br>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North American Office<br>World Conference of Religion for Peace | | 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ICCR)<br>Interreligious Foundation for Community Organization(IFCO)<br>International Documentation on the Contemporary Church(IDOC/NA) |
| 국제 네트워크 | Korea: NCC<br>Japan:NCC, CCA, Emergency com<br>Germany:NCC<br>Switzerland:WCC<br>Cananda:UCC | |

[표-2]<인권연합 실행임원명단(1976~1980)>

| 구분 | 1976·1977 | 1980(1월 현재) |
|---|---|---|
| 의장단 | **명예의장 -김재준[1]**<br>의 장- 페기 빌링스<br>**부의장- 이상철[1]** | **명예의장- 김재준[1]**<br>의 장 - 페기 빌링스<br>**부의장 -이상철[1]** |
| 임원 | 회 계 에드윈 루덴스(Edwin. M. Luidens)<br>재 무 에드윈 피셔(Edwin.O.Fisher, Jr)<br>**사무국장 김상호[1],[2]**<br>공동 사무국장 제임스 시노트(James Sinnot, 워싱턴 사무국) | 회 계 -에드윈 루덴스(Edwin. M. Luidens)<br>재 무- 에드윈 피셔(Edwin.O.Fisher, Jr)<br>**사무국장 -패리스 하비(Pharis J. Harvey)[2]**<br>공동 사무국장- 제임스 시노트(James Sinnot) |
| 실행위원회 | 프레드 베일리(Fred Bayiss)<br>호머 잭(Homer Jack)<br>김병서(Byung-suh Kim)<br>임창영(Channing Liem)<br>토마스 마티(Thomas Marty)<br>아네트 멀리(Annette Mulry)<br>리차드 포팅(Richard Poething)<br>**이승만(Syngman Rhee)[1]**<br>구스타프 슐츠(Gustav H.Schultz)<br>라랄드 슐츠(Larald Schultz)<br>뉴튼 터버(L.Newton Thurber)<br>도로시 와그너(Dorothy Wagner) | 프레드 베일리(Fred Bayiss)<br>**차상달(Sang Dal Cha)[n]**<br>**한승인(Seung In Hahn)[n]**<br>브라이언 헤어(Bryan Hehir)<br>**린다 존스(Rinda Jones)[4]**<br>Shin H. Kim<br>개스퍼 랑겔라(Gasper B.Langella)<br>토마스 마티(Thomas Marti)<br>윌리엄 노팅햄(William Nottingham)<br>뉴튼 터버(L.Newton Thurber)<br>도로시 와그너(Dorothy Wagner) |
| 자문단 | 조지 오글(George Ogle)<br>**박상증(Sang Jung Park)[1]**<br>도널드 레나드(Donald Ranard)[3]<br>그레고리 핸더슨(Gregory Handerson)[3] | **도널드 프레이저(Donald Fraser)[3]**<br>그레고리 핸더슨(Gregory Handerson)[3]<br>조지 오글(George Ogle)<br>도널드 레나드(Donald Ranard)[3] |

100) “Members of North American Coalition for Human Rights in Korea”.

| | | |
|---|---|---|
| | | 이승만(Syngman Rhee)[1]<br>손명걸(Myong Gul Son)[1] |

인권연합의 실질적인 운영은 실행위원회가 중요 안건.의제를 선정, 논의 후 각 회원(기구·개인)에게 전달되는 구조이다. 운영진 회의는 명예의장 김재준, 의장 페기 빌링스(미 감리교 소속), 이상철(캐나다연합교회), 김상호, 구춘회(한국 네트워크 담당·회계처리) 등을 중심으로 상시 열리는 구조이다. 임원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실행위원회 주요 인물 페기 벨링스, 김상호, 에드윈 루덴스, 에드윈 피셔는 모두 미 연합 감리교단 소속이다. 이는「인권연합」결성이 한미 선교관계 배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미 국무부 산하 '인권 및 인도주의 사무국(th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Affairs Bureau)'과 수시 연락망을 갖추어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의 소식을 국무부 또는 백악관으로 전달하는 경로로 활용했다.[101] **그룹[1]**은 한인 개신교 네트워크'민주동지회'구성원들로 WCC 산하 박상증을 중심으로 국내 NCCK와 긴밀히 연결되어 해외 한인 개신교 단체와 인권연합을 연결했다. **그룹[2]의 인권연합 사무국장은** 인권연합 실무책임자로 초대 김상호 목사에서 1979년  패리스 하비(Pharis Harvey, 미 감리교 소속) 목사로 바뀌었다. 이 변화는 유신 후반 한미관계 갈등증폭에서 국내 인권이슈들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었다. **그룹 [3]**의 자문단은 미국 내 각 분야에서 한국 민주화·인권문제에 정통한 전문가 그룹이다. 특히 정관계 인사 도널드 레나드(1970~1974 국무부 한국과장)와 도널드 프레이저 전 의원은 의회에서 한국인권 문제 관련 청문회를 다수 개최하여 한국 민주세력에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다. 실행위원에 린다 존스(Rinda Jones)[4]가 합류하여 아시아교회위원회(CCHRA)와 인권연합(NACHRK)의 공동전선 강화가 확인된다. 이외에 민족자주계열의 임창영이 제외되고 국민연합의 차상달과 한승인이 추가되어 미주 한인 민주단체 노선 반영이 확인된다.

'아시아 인권을 위한 교회인권위원회(Church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Asia, 아시아교회위원회, CCHRA)'는 시카고에 본부를 둔 아시아 에큐메니컬 선교기구로 미국의 대외정책 관련해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인권상황을 관리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조직되었다.[102] 지역 활동단체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원 제공, 미 의회 및 행정부에 아시아 크리스찬의 관심사 및 필요 전달, 아시아 인권상황에 대한 지역 언론 활동 등을 전개했다. 한국의 경우 국내 선교사 모임인'월요모임'과 직접 연결되었으며 인권연합(NACHRK)과 공동 연대하였다.'월요모임'의 실행 간사로서 한국 인권운동에 헌신한 린다 존스(Rinda Jonces)와 조이스 오버튼(Joyce Overton)이 시카고 본부 책임실무를 담당했다.[103]

미국교회의 아시아 에큐메니컬 선교 연대는 1970년대 유신권력의 사회선교탄압에 공동 대응했다.[104] 여기에 1976년 출범한 독실한 개신교 신자 카터 대통령의 인권·도덕외교 표방은

101) "Memorandum, Board of Global Ministries The Methodist Church", 1979.4.19.

102) "Church Committee on Human Rights in Asia, an Organization whose purpose is to act on behalf of those struggling for human rights in.." CCHRA는 미국교회 에큐메니컬 기구 연합으로 구성되었다. UCCC, CWU, PC(Presbytery of Chicago), UMC, NFPC(National Federation of Priests Councils), NACHRK, ICUIS, WILPF, CDFP, JPTWA, FFP, LCM, CLC, MS, EDC, WPJC, EPF, BP, UMWC, AFSC 등이 참여했다. CCHRA 사무실은 시카고 소재 국제도시산업사회교회연구소(ICUIS) 내에 두었다.

103) 랜디 라이스(Randy Rice), '고립에서 연대로', 짐 스탠즐 엮음,『시대를 지킨 양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71~76쪽 참조.

104) 민청학련 사건 이후 짐 시노트·조지 오글 선교사 추방과 1975년 인혁당 사건, 김지하 사건, 수도권 선교자금사건 등에 세계교회와 국제사회가 주목하게 된다.

미주 개신교네트워크의 한국 인권문제 지원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인권연합」.「아시아교회위원회」가 공동 대응한 대표적인 사건은 1976년 3월 1일 「민주구국선언(일명 명동사건)」이다. 「명동사건」은 두 가지 의미에서 1980년'5월 광주'이후 김대중 구명운동의 전사(前史)적 성격을 갖는다. 첫째, 김대중을 포함한 함석헌, 윤보선, 문익환·동환, 이문영, 안병무, 서남동, 이우정, 이태영 등 관련자들의 정치사회적·종교적 중량감은 미국 교회와 국제사회 구명운동으로 확산된 계기가 된다. 이 과정에서「인권연합」은 뉴욕본부를 중심으로 구속자 석방운동의 해외 안테나 역할을 총괄했다.[105] 둘째,「명동사건」으로 김대중 구명의 정치적 상징이다. 1976년 3월 1일부터 1978년 12월 27일 김대중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기까지 만 2년 8개월간 지속되는 동안 김대중 구명운동은 인권문제 이상으로 한국 민주화 이행의 상징이 되었다. 즉 유신체제 하에 미주 개신교 네트워크는 선교지원을 매개로 한국 정치민주화 이슈에도 깊이 개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정희 사후 한국 정치변동기 「인권연합」이 한국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원활동을 전개한 것에서도 확인된다.[106] 민주 재건을 위한 환경 조성이란 1. 한국군부의 정치 중립화와 민간 정치세력 출현 지원 2. 유신헌법 대체와 새로운 민주헌법의 입안, 한국 국민들의 주권 선택에 기초한 민주정부 선출의 절차 수립 3. 신헌법에는 인권 보장 및 국민의 주권적 선택 보장 4. 가능한 자유, 공개 선거를 통한 한국의 민주주의 목표 성취 5. 정치범, 양심수의 즉각적인 석방, 인권 운동가들의 구금 해제 6. 한국에 대한 미국 안보 책임 재확인 및 강조 등이다. 이는 유신 이후 한국 정치 이행의 절차와 내용을 포괄한 것으로 「인권연합」의 정치적 성격이 확인된다.

### 2.2. 미주 개신교 네트워크의 초기 '광주항쟁' 인식과 대응

1980년 5월 18일 이후 광주상황은 2~3개 경로로 미주 개신교 네트워크로 전달되었는데, 1) 국내 소재 선교사 그룹(월요모임)→일본 개신교 네트워크→미국 선교 본부 경로, 2) 경우에 따라 서울발 전신이 미국 인권연합으로 오는 경우, 3)국내 주재 해외 언론사.특파원·해외 상사의 증언 경로이다. 대체로 1), 2) 경로가 많았으며 국내 선교사 모임인 '월요모임'과 일본의 오재식(CCA), 독일 서남독선교부(EMS)에서 파견한 폴 슈나이스(Paul Schneiss) 선교사 통해 미국 교회로 전달되었다.[107] 5월 18일 이후 미주 한인 민주단체 첫 반응은 '국민연합 북미본부(이하 북미본부)'가 5월 20일에 발표한 성명문「檄」이다.[108] 1978년 7월 8일 국내 민주단체 연합조직'민주주의 국민연합'의 미주본부로 발족한'북미본부'(상임위원장 이상철)은 성명 발표에 앞서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이후 중앙 상임위원 앞으로 다음의 내용을 확인시킨 바 있다.

> "오늘의 한국의 급박한 사태를 위하여 미 국무성, 국방성 그리고 백악관에 전보나 편지보내기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군부가 자숙하도

---

105) 「3·1명동사건」의 여파와 범 개신교 저항연대에 대해서는 고지수 「1976년 3·1민주구국선언의 '사건화'와 반(反)유신」『역사연구』, 2019 참조.

106) 「인권연합」의 패리스 하비는 12·12쿠데타 이후 한미관계가 전례 없이 불안정한 상태로, 특히 한국 정치 자유화 과정은 물론 한미 군 지휘체계, 주한미군의 안보 유지, 한국정부의 사회불안 통제력 상실 등 전반적인 불안요소 증가로 한미관계 두 축인 한반도 안보유지와 민주제도화 모두 후퇴한 것으로 인식했다. Pharis Harvey, "U.S.-Korean Relations after Park", 1980.1.3.

107) 월터 "버치"더스트, 「선교사, 소떼 그리고 월요모임」, 짐 스탠슬, 위의 책, 260쪽 참조. 독일 서남독선교부(EMS) 폴 슈나이스 목사의 한국 민주화운동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한운석, 「냉전시대 한독 에큐메니칼 협력:1970년대와 80년대를 중심으로」 참조.

108) 「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참조.

록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할 것과 계엄령의 조속한 해제를 강력하게 종용하라는 내용이면 될 것입니다."[109]

간단명료하나 국민연합의 정세인식을 잘 보여주는 내용으로 계엄령 해제를 위해 미국 정부, 정관계 대상으로 여론형성을 통한 국내 압박 목적이 확인된다. 성명문「檄」은 "교회인은 예수의 권위로'사탄아 물러가라'하고 외친다. 우리는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각까지 싸울 것"이라 하여 미주「북미본부」의 종교적 신념이 확인된다. 성명은 군의 본연 임무 복귀, 정치범 석방, 헌법 기본권 보장 외 총 9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110] 5월 23일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미주본부(한민통)」(의장 이재현).「민주주의국민연합 북미본부」(의장 이상철).「재북미한인기독학자회의」(의장 동원모) 공동 명의로 발표된'성명서'는 '현 정세를 6.25 이후 가장 심각한 비상사태'로 간주하고, '전두환 군부의 무력 포기', '최규하 정부 총 퇴진', '새로운 과도내각 구성 및 헌법 개정.총선거','북한의 무력남침 경고', '우방 미국의 신속하고 분명한 질서회복 협력'등을 촉구했다.[111] 세 단체 공동성명은 광주 직전 발표된 일련의 성명들과 다르지 않은데, 특히 '우방 미국'에 질서회복을 촉구하였다. 5월 26일 김재준(의장).박상증(사무국장) 공동 명의로 발표된 「민주동지회」의 '긴급호소문'은 한미연합사령부와 미국을 향한 비난 내용이 포함되어 주목된다(호소문 2항). 내용은'미국의 광주 군부대 투입 동의로 더 많은 유혈사태 초래' 가능성을 비판하고, 이것이 향후 반미감정을 조성하여 오히려 한반도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것을 우려했다.[112] 이어 호소문은 광주학살이 멈추도록 전 세계 자유진영 국가·교회들이 한국정부를 압박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유혈사태의 미국 배경으로 반미감정 형성을 우려한 「민주동지회」의 호소는 미주 개신교 네트워크의 현실인식과 방향을 잘 보여준다.

미주 개신교 인권단체로는 5월 20일 '아시아교회위원회(CCHRA)'의 대응이 가장 먼저 확인된다.[113] CCHRA는 5월 18~19일 광주상황을 보고 받고, '한국 인권문제 관련 세계 그리스도교 네트워크'의 즉각 지원과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강력 수단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CCHRA가 제시한 구체적인 방법은 카터 대통령, 국무부, 상하 의원, 특히 대외관계 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 서신, 전보를 발송하여 한국정부를 최대한 압박할 것을 촉구하여 「국민연합 북미본부」와 동일한 해법을 제시했다.[114] 「인권연합(NACHRK)」은 5월 21일 패리스 하비

---

109) 이 내용은 사무국장 김정순이 작성하여 중앙상임위원에게 발송한 것이다. 1978년 7월 15일 뉴욕에서 결성된 '국민연합 북미본부'의 1980년 3월 현재 임원은 고문- 윤보선, 함석헌, 김대중, 지학순, 한승인, 전규홍, 문재린 등, 상임위원-이상철(위원장), 김상돈, 김재준, 김정순, 선우학원, 이재현, 차상달 등, 사무국- 김정순(국장), 박상증(기획), 임순만(국제), 김윤철(지방), 김홍준(재정), 안중식(홍보) 등, 재정위원-한승인(위원장), 김윤철, 김홍준, 손명걸, 유시흥 등이다. 『민주국민』, 1980.3.16. 제2호 '임원명단' 참조.

110) 격문의 9개 요구사항에는 '광주상황' 언급이 없고 군부 임무 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볼 때 '5.17 비상계엄확대 조치' 상황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작성자는 초대 상임위원장 김재준 목사로 추정된다.

111)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미주본부」·「민주주의국민연합 북미본부」·「재북미한인기독학자회의」, '성명서', 1980.5.23.

112) 김재준·박상증(해외기독자민주동지회), 'An Urgent Appeal', 1980.5.26.

113) CCHRA, "Korea:Action Alert", 1980. 5. 20.

114) 구체적으로는 1) 한국정부에 계엄해제·민주이행 촉구를 위해 최대 압력 행사하도록 미국무부 장관에게 전보 발송할 것, 2) 카터대통령, 국무부, 상원 외교관계 위원회 등에 서신 발송. 광주 사태가 한미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을 한국 관리들에게 전달할 것, 3) 지역 의원들에게 한국 민주이행 촉구 전화(선거 해로 반드시 응답할 것임), 4) 지역 언론사에 미국 국민의 세금, 경제지원이 한국 군사정부 지원을 비판하는 편지 발송할 것 등. CCHRA는 상원 대외관계위원회 소속 의원들- Luga(인디애나), Baker(테네시), Glenn(Ohio), Javits(뉴욕), Stone(플로리다) 등-에게 "한국의 계엄해제와 민주주의 이행하도록 미국이 한국정부에 최대한 압력을 가할 것"의 전보 문구와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제

가 회원 앞으로 발송한 편지에서 광주 유혈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두 가지 내용을 강조했다. 첫째, 인권연합은 5월 19일 미 국무부 언론 브리핑에서 호딩 카터 대변인이 계엄령 확대 조치에'매우 당황한(deeply disturbed)'으로 표현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미국정부가 확고한 추가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115] 둘째, 인권연합이 의미한 '확고한 추가조치'란 5월 말로 예정된 미 하원 한국 군사원조 175만 달러를 포함한 예산안 투표의 동결을 의미했다.[116] 카터 행정부에서 미 의회는 한국 인권문제 대응으로 대한 군사원조 동결 및 삭감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 배경에는 개신교 인권운동 네트워크의 압박 여론이 중요 요인이었다. 특히 한국 인권상황과 직접 관계된 국내 선교사들의 보고가 「인권연합」을 통해 미 의회로 접수되었는데, 미국의 지원 무기가 계엄 하 인권탄압에 지원되어선 안 된다는 논리가 하원 외교위원회 예산 관련 보고서에 반영되었다.[117] 이를 토대로 「인권연합」은 각 회원 대상 행동수칙으로 카터 대통령과 하원 의원들에게 군사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전신 또는 서신발송을 지시했다.[118] 「인권연합」의 이러한 주장은 광주 사태 이후 한국 국민들에게서 조성되기 시작한 '반미감정'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배경으로도 설명된다. 5월 광주 이후 반미감성 형성은 미국정부와 개신교 네트워크 공히 예민한 사안이었는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지지해 온 개신교 민주진영은 카터 행정부 후반 일련의 실망스런 정책들로부터 잠재되어 온 반미정서가 김대중 재판을 계기로 증폭될 것을 우려했다.[119] 앞서 미 국무부 논평에 실망한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5월 27일 카터 대통령 앞으로 서신을 보낸 「인권연합」은 광주 유혈진압으로 한국 국민에게 조성되기 시작한 반미감정을 우려하면서 한국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지속될 것이므로 이미 조성된 반미감정이 한미관계를 더 크게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카터대통령에게 다음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120]

1. 대통령께서 5월 18일 이후 한국군에 의해 자행된 폭력과 살상에 강력하고 분명하게 비난할 것
2. 김대중을 포함한 민주인사들에 대한 강력 지지와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할 것
3. 계엄령 해제와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에서 물러날 때까지 무기판매, PL480 선적, 수출입은행 차관 및 기타 원조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모든 지원의 즉각적인 동결[121]

이상의 즉각적인 조치 없이는 한국인들의 반감, 혐오가 커져 양국 관계 악화는 물론 한국 민주화는 요원할 것이란 우려로 마무리되었다. 미주 개신교 네트워크의 압력요청과 달리 5월 18일 이후 미국 관리들은 한반도 안보공약과 주한미군, 경제지원 등 기존 정책을 유지하되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서는 질서회복, 정치자유화를 강조했다.[122] 5월 22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

---

시했다.

115) 5월 19일 호딩 카터(Hodding Carter)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We are deeply disturbed by the extension of martial law throughout the Republic of Korea,"라 표현했다. 주한미국대사관 공보실, "FOR THE RECORD", 1980. 6. 18.

116) 패리스 하비, "Dear Friends and Collegues;", 1980.5.21.

117) 루이즈 모리스, 「한국이 나에게 내 조국과 신앙에 대해 가르쳐 준 것」, 짐 스탠츨 엮음, 『시대를 지키는 양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89~91쪽 참조.

118) 위와 같음. 하원 외교위원회 한국 군원 예산에 보고에는 "it is clearly the intent and desire of the congress that military assistance authorized for fiscal year 1981 not be used for martial law purposes, but for external defense and legitimate security needs"라고 하여 군사원조가 계엄유지에 사용되지 않고, 외부방위와 합법적인 안보유지를 위한 용도임을 강조했다.

119) 패리스 하비, 'Some recent trends in South Korea' 1979.1.9., 2쪽.

120) "Dear Mr. President, Jimmy Carter"(1980.5.27.), 이 서신은 인권연합 의장 페기 빌링스, 한민통 미주본부 의장 이재현, 민주주의국민연합 북미본부 상임의장 이상철 등 3인이 공동 서명했다.

121) 위와 동일.

린 정책검토위원회(Policy Review Committee, PRC)는 한국에서의 최우선 순위를'질서 회복'으로 결론 내리고 이에 필요한 무력 사용을 승인했다.[123] 결론에서 브레진스키 안보보좌관은 향후 접근으로 "단기간의 지원(in the short term support)과 정치 일정을 위한 장기 압력(in the longer term pressure for political evlution)"으로 정리했다.[124] 같은 날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 상황을 이용하려는 어떠한 외부 공격에 대해서도 안보 공약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확인 한다"는 내용의 국무부 성명을 발표했다.[125] 백악관 안보회의 결론에 국민연합 북미본부 이상철 상임위원장이 머스키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질의(5.23)에 미 국무부 한국 문제담당 데이빗 블렉모어(D.Blakemore)는 6월 11일자 답신에서 "외부위협으로부터 안보 위협에 한국을 방어할 책임이 있는 사령관의 판단에 대해 미국정부는 통제할 권한이 없으며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비난할 수 없다"고 하여 위컴 사령관에 대한 위임을 확인했다.[126] 1980년 6월 25일 아시아 문제 관련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 출석한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마이클 아마코스트(Michael Armacost) 차관보는 한국 상황 분석으로 기존의 안보 균형 위에 새로운 안보위험에 대비해 주한미군의 안보억지력, 남한 군사력 증강, 확고한 군 지휘 시스템 개발 등을 강조했다. 이러한 억지력이 유지되지 않는 한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세력균형 파괴는 물론 중국, 소련, 일본 그리고 미국에까지 안보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 보았다.[127] 광주 진압 후 미 수출입은행(The Ex-In Bank) 총재 존 무어(John Moore)의 방한과 전두환 군부에 6억3천 1백만 달러 지원(5.22)은 광주 사태 이후 한반도 안보와 경제지원을 우선한 미국정부의 의지가 확인된다.[128]

## 3. 1980년 5월 광주와 김대중 구명운동, 그리고 한미관계

### 3.1. 미주 개신교 네트워크의 김대중 구명운동과 자유 공조

미주 개신교 네트워크의 김대중 구명운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개신교 인권사상, 한국 정치 자유화 등의 이념과 구호로, 일본 개신교 네크워크, 세계교회, 국제인권기구와 연대하여 미 행정부, 백악관, 미 의회를 대상으로 한국정부 압박 여론운동으로 전개되었다.[129]'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8월 14일 김대중 외 2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내

---

122) 윌리엄 글라이스틴 지음·황정일 옮김, 『알려지지 않은 역사』, RHK코리아, 2014, 210~211쪽.

123) Policy Review Committee, 1980.5.23. Don Oberdofer Files, Box.2,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료, 1980.5. 국사편찬위원회. 5월 22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머스키 국무장관 주재로 열린 PRC회의는 안보보좌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데이빗 애런, 국무부차관 워렌 크리스토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리차드 홀브룩, 한국과장 로버트 리치, 국방부장관 해롤드 브라운(Harold Brown), 국방부 국제안보문제 부차관보 닉 플렛(Nick Platt), 국제안보 부차관보 데이빗 맥기퍼트, CIA의 스탠필드 터너(Stanfield Turner) 제독, 중국 및 동아시아관계 담당 존 홀드리지(John Holdridge), 합참의장 데이빗 존스 장군, 존 베시 장군 등이 참석했다.

124) 위와 같음.

125) "The Statement read by a DoS spokesman at the noon briefing in Washington, May 22. 1980. 주한미국대사관 공보실, "FOR THE RECORD", 1980. 6. 18.

126) "미 국무부 한국문제담당 데이빗 블렉모어(David Blakemore)가 이상철에게 보낸 서신", 1980. 6.11.

127) The Opening Statement by Acting Assistant Secretary Michael Armacost at an Session of the House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Asia, June 25, 1980.

128) 패리스 하비, "Dear Friends and Colleagues;", 1980. 6. 16.

129) 일본은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사건 이후 일한시민연대 등을 중심으로 1차 김대중 구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1976년 3·1명동사건 이후 2차 구명운동, 1980년 5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세

란예비음모, 외환관리법위반, 계엄법·반공법 위반 등으로 기소와 동시에 육군본부 계엄고등군법회의 1차 군사재판을 시작으로 1심 선고(9.17), 항소심 선고(11.3), 대법원 선고(1981.1.23.)로 진행되었다. 글라이스틴이'성공의 보장 없는 얇은 빙판 위 걷기'로 표현한 김대중 재판은 광주 사태 진압 이후 한미 양국 간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했다.[130] 미국 언론들은 김대중 재판이 전두환 신군부에게는 한미관계 시험용으로[131] 인권단체로부터 압박을 받는 카터 대통령과 머스키 국무장관에게는'사형선고'가 내려질 경우 한미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132] 개신교 배경의 미국 인권단체와 엘리트 지식인에게 김대중 재판은 한국 민주화 이행의 상징이자 광주 비극과 동일시되어 한국 정부를 압박할 절대 이유가 된 반면, 정통성이 결여된 전두환 신군부는 '국내 문제','사법 절차'등을 이유로 미국 협상카드로 이용했다. 카터 대통령과 백악관은 현지 글라이스틴 대사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압박 수위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공식적인'제재와 압력'을 배제하여 인권단체로부터 압력을 감수하는 형국이었다.[133]

1980년 9월 17일 1심 선고에서'사형선고'가 내려진 이후 대법원 최종심까지 사형이 확정되자 구명운동도 재판 전개에 따라 확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김대중은 "한국의 야당 지도자(leader of the opposition)"에서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 '한국 민주화운동의 교두보', '한국의 마틴 루터 킹(South Korea's Martin Luther King)''정의의 상징(a symbol of the right)', '민중 표상(The Minjung , the Humble oppressed folks)','인권의 영웅(Human Rights Hero)'등으로 인식이 강화되었다.[134] 「국민연합 북미본부」(상임위원장 이상철, 상임위원-김상돈 김재준 김정순 선우학원 이재현 차상달)는 계엄사 기소 직후인 1980년 7월 초부터 '김대중 선생 구출합시다' 캠페인을 시작하여'미 대통령, 국무성, 관계 요로에 편지쓰기 운동, 김대중 석방 서명운동, 모금운동'등을 전개했다. 1심 재판과 같은 시기인 8월 14~16일 제5차 대표자대회를 개최해 조국 민주회복 운동의 당면과제로 '김대중 및 민주인사 구출'로 결의하였다.[135] 김대중 재판의 주요 쟁점인'공산주의자'혐의에 대해「국민연합 북미본부」는 "민주사회 건설을 통한 진정한 승공의 길을 독재 권력이 '공산주의 혐의'로 탄압하여 결과적으로 더 심각한 공산주의 위협으로 몰고 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경고했다.[136] 1973년 7월 김대중 미국 활동기에 결성된 한민통 미주본부 8차 총회(1980.8.8.~8.10) 도 성명서를 통해 민주화 달성의 핵심 과제는'민주화운동의 교두보인 김대중 및 민주인사 구출'로 확인하고 이 운동에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성명서는 8월 7일 존 위컴 사령관의 L.A. 타임즈와의 인터뷰(일명'들쥐 발언') 가 한국의 반미정서를 키워 반미운동의 계기가 될 것을 우려하고 한미우호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자유·민주체제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137] 미국의 전두환

---

계교회 네크워크와 연대하여 김대중 구명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숙의 연구 참조.

130) 글라이스틴은 자신의 임기 중 전두환을 만난 10여 차례에서 김대중 재판이 주요 또는 유일의제였다고 기록했다. 글라이스틴, 앞의 책, 241쪽.

131) Henry Scott Stokes, "Trial likely to test U.S.-Seoul Relations", *The New York Times,* August 14, 1980.

132) Bernard Gwertzman, "U.S. Said to Tell Seoul to Soften Rule by Miltary", *The New York Times,* August 13, 1980.;글라이스틴, 위의 책, 242쪽.

133) 미국 정부의 접근은 글라이스틴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다.

134) Pharis Harvey, "Dear Member of Congress," 1980.7.16.;Andrew Young, "South Korea's Martin Luther King", *The Washington Post*, 1980. 9. 29.;문동환, "Time to Take Sid",speech at the 'save Kim Dae Jung Rally'(1980.12.12.) 등.

135) '진실한 민족의 지도자 김대중 선생을 구출합시다', 민주주의국미연합 북미본부 (1980. 7.);「민주주의국민연합북미본부 제5차 대표자대회 초청장」 등.

136) 민주주의국민연합 북미본부, "민주주의 회복만이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이다", 1980. 11.11.

장군 지지를 골자로 한 존 위컴 사령관의 인터뷰가 반미감정을 형성하여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는 미 의회에서도 강하게 제기되었는데, 8월 26일 머스키 국무장관에게 보낸 전신에서 칼 레빈(Carl Levin) 상원의원은 광주진상 파악을 위해 파견한 미장로교 연합 보고를 토대로 한국민들의 반미감정을 전달하고 위컴 발언에 대한 국무부의 공식적인 불신임을 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138] 칼 레빈은 신군부 아래 한국 인권상황이 최악인 점을 지적하고 이대로 지속될 경우 미국은 한국인들의 지지 상실은 물론 한국 국민들로부터 민주주의의 이상(democratic ideals)이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다는 신념을 갖게 할 것을 강하게 우려했다.

1980년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보궐선거에서 전두환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같은 날 카터 대통령은 친서를 보내어 미국의 안보·경제유지 공약을 재확인하고 정치 자유화 진전을 촉구했다. 한국 상황에 우려를 표한 카터 서신은 1. 미국은 전두환의 최규하 대통령 정치 일정-국민투표에 의한 신헌법 제정과 국민선거-재확인 약속을 주목해 왔으며, 2. 건전한 한미관계 필수조건은 자유로운 정치제도에 있음을 강조, 3. 국제적 주목을 받는 김대중 재판은 국내 사법적 문제로 간섭할 의도는 없으나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 4. 김대중의 사형은 심각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 쟁점은 글라이스틴 대사와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람), 5. 미국은 외부 공격으로부터 한국 안보 공약을 재확인, 6. 국민지지를 기초로 한 정치 자유화·개인 자유 확대로 정권 안정을 도모할 것 등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139] 사적(privately) 의견을 전제로 했으나 카터 서신은 이제 막 대통령이 된 전두환의 향후 정치 일정 안내표와 같은 내용들이다. 카터의 의중이 이러하다면 개신교 네트워크의 김대중 구명 운동이 미칠 영향은 가늠된다.

김대중 구명운동 중 규모에서 가장 큰 켐페인은 「인권연합」이 총괄하고 미 의회·범 개신교 진영이 공동 참여한 "김대중과 민주지도자 구출 캠페인(Campaign to Free Kim Dae-Jung and the Other Democratic Leaders, 이하 '구출 캠페인')"이다. 도널드 프레이저 미니애폴리스 시장(전 미 하원의원)과 문동환 목사가 공동 의장을 맡은'구출 캠페인'은 1980년 10월 17일 워싱턴 내셔널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캠페인 조직과 활동을 알렸다.[140] 캠페인의 참여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표-3]<'김대중과 민주 지도자 구출 캠페인'참여자 명단>[141]

| 공동의장 | 공동사무국장 | 실행위원회 | 미 의회 의원 | 자문단 |
|---|---|---|---|---|
| 도널드 프레이저 (Donald Fraser)<br>문동환 | 최성일(국민연합)<br>패리스 하비(인권연합) | Edward J. Baker<br>Peggy Billings<br>Sung-il Choi<br>Edwin R. Gregart<br>Pharis Harvey<br>Roberta Lebenbach<br>Don Luce<br>Michael McIntyre | Anthony C. Beilenson(D-CA)<br>David E. Bonior(D-MI)<br>Don Bonker(D-wa)<br>John L. Burton(D-CA)<br>Bob Carr(D-MI)<br>Shirley Chisholm(D-NY)<br>Thomas D. Daschle(D-SD)<br>Ronald B. Dellums(D-CA) | Mia Adjali<br>William Boyer<br>Dennis Brutus<br>William J. Butler<br>Jerome A.Cohen<br>Adrian W. Dewind<br>John K. Fairbanks<br>J. Bryan Hehir |

137)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미주본부 제8차 총회 성명서', 1980.8.10. 이보다 앞서 한민통 미주본부는 1980년 6월 2일부터 워싱턴 국무성 정문 앞에서 "Save KIM DAE JUNG"을 내건 계속시위를 전개했다.

138) "Letter from Carl Levin to Edmund Muskie," 1980. 8. 26.

139) "Letter from President Jimmy Carter to President Elect Chun", August 27, 1980. Don Oberdofer Files, Box.1, 국사편찬위원회.

140)"Campaign to Free Kim Dae-Jung and the Other Democratic Leaders; Press conference" 1980.10.17.

141) 위와 같음.

| | | | | |
|---|---|---|---|---|
| | | Sang Jung Park | Thomas J. Downey(D-NY)<br>Robert W. Edgar(D-PA)<br>Don Edwards(D-CA)<br>Robert Garcia(D-NY)<br>Tony P. Hall(D-OH)<br>Thomas A.Harkin(D-IA)<br>Elizabeth HoltzmanD-NY)<br>Andrew Maguire(D-NJ)<br>Norman Y. Mineta(D-ca)<br>James L. Oberstar(D-MN)<br>Richard L. Ottinger(D-NY)<br>Fred W.Richmond(D-NY)<br>John F. Seiberling(D-OH)<br>Paul Simon(D-IL)<br>Stephen J. Solarz(D-NY)<br>Fortney H Stark(D-CA)<br>Louis Stokes(D-OH)<br>Theodore S. Weiss(D-NY)<br>Howard Wolpe(D-MI) | Gregory Henderson<br>James Laney<br>Gari Ledyard<br>Jai Hyun Lee<br>Denise Levertov<br>Lindsay Mattison<br>George Ogle<br>Marcus Raskin<br>Donald Ranard<br>Edwin O. Reischauer<br>Donald Shriver<br>William L. Wipfler |

민주당 소속 의원 다수가 참여한 이 켐페인의 목표와 활동은 ①청와대를 대상으로 켐페인 참여자 서명의 서신 발송 ② 레이건 후보에게 미국의 위신을 위해 김대중을 석방 주장할 것 ③미 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Fact Finding Team이 한국방문토록 할 것 ④ 김대중 구출 시위 전개 등이다. 캠페인은 공동 의장 도널드 프레이저와 문동환의 명의로 11월 24일 카터 대통령, 미 의회, 레이건 당선자, UN 사무총장, 전두환 앞으로 참여자 서명의 서신을 발송했다.[142] 켐페인은 재판 경과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백악관, 국무부를 상대로 김대중 석방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카터대통령과 국무부를 압박했다.[143](김대중 석방 탄원 서신은 [첨부 표] 참조).

대법원 최종 판결이 다가오자 뉴욕타임스에는 비중 있는'김대중 구명' 캠페인들이 연달아 게재되었는데, 1980년 12월 3일「WORLD-WIDE FRIENDS OF KIM DAE JUNG」과 7일「구출 캠페인」의 "SAVE A LIFE & SAVE DEMOCRACY"등이다. 3일자 캠페인은 김대중과 오랜 인연의 에드윈 라이샤워(E.O.Reischauer, 하버드대 교수)·아미야 차크라바티(Amiya Charkravarty, 인도 학자)·군터 프로이덴버그(G. Freudenberg, 서독 오스나르뷔크대 교수)·게오르그 발트(G.Wald, 하버드대 교수)·루이제 린저(L.Rinser, 독일작가)·스테판 솔라즈(S.J.Solarz, U.S. Congressman)·요아킴 이스라엘(J.Israel, 코펜하겐대 교수) 등의 서명과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게재되었다.[144] 7일의「구출 캠페인」은 도널드 프레이저와 문동환이 공동으로 서명하여 전두환 대통령 앞으로 메시지와 서명자 명단을 게재했다. 메시지는 한국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반해 비민주적이고 불안정한 한국은 미국에게도 도덕적으로나 경제, 군사적으로 짐이 될 뿐임을 강조하여 김대중과 민주인사들의 무조건적 석방을 촉구했다.[145]

미국 내 김대중 구명운동에 힘입어 연금 상태인 이희호가 카터대통령 앞으로 탄원서를 보낸 것도 이 무렵이다. 이희호 서신은 김대중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는 전직 미연방 관리 로버트

142) "His Excellency, President Chun Doo Whan", 1980.11.24.
143) "Telegram from Jimmy Carter to The Embassy in Korea", Dec. 1. 1980. Don Oberdofer Files, Box.1, 국사편찬위원회.
144) "KIM DAE JUNG MUST NOT DIE!", The New York Times, 1980.12.3.
145) "SAVE A LIFE & SAVE DEMOCRACY", The New York Times, 1980.12.7. 이 광고에는「구출 캠페인」참여자 전원의 서명이 함께 게시되었다.

키니(Robert A. Kinney)를 통해 비밀리에 백악관으로 전달되었다.[146] 서신에서 이희호는 남편이 석방될 경우 정계에서 물러나 기독교 복음전파 사업에 헌신할 것이며 이것에 남편도 동의했음을 알리고 한국 정계를 떠나 유학과 신병치료를 위한 미국행을 요청했다.[147] 그리고 아래와 같이 자신의 요청 근거를 밝혔다.

> 한국 정부는 김대중 석방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내정 간섭'이라 하지만, 미국은 이미 수 만 명의 미국인들을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시킨 나라입니다. 현재도 많은 미국인들과 장병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과 도움을 받아온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견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하의 판단은 -한국정부에게-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148]

한미동맹에 대한 무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신은 전 세계적인 구명운동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집행될 경우 이는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닌,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동맹으로부터도 소외된 비민주 국가를 위한 희생의 댓가가 될 것'이라 하여 남편의 희생이 국가적 차원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희호 서신은 백악관 안전보장회의 도널드 그레그, 브레진스키 등이 회람한 후 카터에게 전달되었다. 도널드 그레그가 브레진스키에게 보낸 비망록에는 몇 가지 사실이 언급되었는데 첫째, 편지 전달자인 로버트 키니는 김대중 가족과 오랜 인연으로 믿을 만한 인물이며, 둘째, 이 서신에'지금껏 우리가 해온 대로 김대중 사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으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피력했다. 그레그는 김대중 사면을 위해 미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카터 대통령이 이 서신을 볼 필요는 없을 것이라 덧붙이고 최종 판단은 브레진스키에게 넘겼다.[149] 브레진스키는 이희호 서신을 첨부한 비망록을 카터 대통령에게 보내고 몇 가지를 강조했다. 김대중이 석방될 경우 정계에서 물러날 것, 미국은 한미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강한 어조로 김대중 감형을 주장할 것, 가능한 한 모든 채널을 통해 압박할 것 등이다.[150] 미 의회와 인권단체들의 지속적인 김대중 구명 호소에 미국 정부는 "김대중 석방을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 중"이며, "한국정부도 김대중 건에 대한 미국의 뜻을 잘 알고 있"다는 공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덧붙여 "최종 석방 시기와 기한의 결정은 한국정부만이 결정할 사안"이라 하여 김대중 석방의 최종심은 한국정부에 달려 있음을 확인시켰다.[151]

1980년 11월 미 대통령선거에서 로널드 레이건의 승리로 카터행정부는 전두환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되었으며 김대중 구명은'전환의제'로 떠올랐다. 여기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여론 압박이 커지면서  카터행정부는 마지막 수단으로 미국 고위 관료를 한국에 파견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레이건 행정부가 김대중 구명에 동일한 노선을 유지하도록 협의하는 것이다.[152] 그 결과 5월 광주 이후 미국 고위관료로는 처음으로 12월 13일 해롤드 브라운 국

---

146)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Zbigniew Brzezinski" 1980.10.20. National Security Affairs, 국사편찬위원회.

147) "Dear President and Mrs. Carter, from Mrs. Kim Dae Jung", Oct. 1. 1980.

148) 이희호, 위의 편지, 2쪽.

149) "Memorandum for Zbigniew Brzezinski from Donald Gregg", Oct. 16. 1980. National Security Affairs, 국사편찬위원회. 이 시기 도널드 그레그는 백악관 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관이다.

150)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Zbigniew Brzezinski" Oct. 20. 1980. National Security Affairs, 국사편찬위원회.

151) "미 국무부 한국과장 데이빗 렘버슨(David F. Lambertson)이 패리스 하비 목사에게," 1982.12.8. 미국 정부의 공식적이고 일관된 답변은 글라이스틴과 전두환 간 협상 테이블에 '비공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전에 조율된 결과이다.

152)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Dec. 4. 1980.

방장관이 방한해 카터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김대중 처형이 한미 안보, 경제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했다.[153] 이 자리에서 전두환은 자신이 군부로부터 처형 압력을 받고 있으며 사법 절차에 따라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사형확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화답했다. 공방이 오가고 브라운은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 당시 미국의 개입으로 목숨을 건진 사실도 거론하여 압박했다.[154] 브라운 장관의 방한을 앞둔 12월 10일「인권연합」의 패리스 하비는 국내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로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전화하여 김대중 사면을 촉구할 것을 독려했다.

>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한국정부가 김대중 사형을 재고하도록 전 세계가 압력을 보내고 있으나 전두환과 그의 주변 군인들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제거되길 바라고 있다.[155]

대법원 판결을 앞둔 1980년 12월 22일「인권연합」은 6천명의 서명자 명단이 포함된 탄원서를 카터 대통령과 레이건 당선자, U.N 사무총장 커트 발트하임 앞으로 발송했다.[156] 브라운의 방한 이후 김대중의 운명은 레이건 차기 행정부로 옮겨갔으며, 카터 행정부는 리처드 홀브룩과 마이클 아마코스트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부차관보를 레이건 인수팀의 리처드 알랜(Richard Allen)과 협의로 레이건 취임 후 전두환의 워싱턴 방문과 김대중 구명의 교환이 성사되었다.[157]

### 3.2. 전두환의 방미(訪美) 와 승인, 그리고 구명운동의 귀결

정통성이 결여된 전두환 신군부가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을 받는 길은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이다. 1980년 5월 광주 이후 카터 행정부는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포함 양국 정부 간 고위급 만남을 배제시켜 전두환 정권의 공식 승인을 유보해 왔다.[158] 1980년 11월 13일'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내걸고 당선된 레이건 행정부는 한반도 전쟁억지력 강화, 한미동맹 공고와 대한방위공약 이행 등 이전보다 강화된 강경노선이 예견되었다.[159] 카터 행정부에서 도덕·인권

---

153) Jimmy Carter. 2010, *White House Diar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491쪽. 브라운 국방장관의 방한은 전두환과 대화 후 글라이스틴 대사의 제의로 성사되었다. 글라이스틴, 앞의 책, 268쪽.

154) 이 자리에 동석했던 도널드 그레그는 대화는 '실패'이며 김대중은 처형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널드 그레그 지음·차미례 옮김,『역사의 파편들-도널드 그레그 회고록』, 창비, 2015, 255쪽.

155) 패리스 하비, 'Dear Friends of Korea,' 1980.12.10. 하비는 이 독려메시지에서 주한미대사관의 전화번호를 첨부했다.

156) CCHRA, "Newsworthy notes", 이보다 앞서 김대중의 상고가 기각되자 일한시민연대의 "유엔사무총장 탄원위원회(The Excutive Committee of "Appeal to the Securit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조직되어 1980년 11월 3일 커트 발트하임(Kurt Waldheim)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진정서는 김대중을 열성적인 카톨릭 신자, 인권과 민주주의, 정의와 평화의 사도임을 강조하고 유엔의 인권선언에 배치되는 한국 군사재판을 비판했다. 유엔이 나서서 한국의 민주주의 지도자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김대중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을 탄원했다. 탄원서 서명자는 Utsunnomita Tokuma, Miyazaki Shigeki, Aochi Shin, Den Hideo, Bai Dongho, Chung Jae-Jun, Kim jong-Chung, Ito Narihiko, Sasaki Hidenori 등.

157) 레이건 승리 후 전두환은 당선자 인수팀과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고, 12~1월 사이 수차례 비밀회동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KCIA 워싱턴 지국장 손장래를 통해 레이건대통령 당선자가 김대중의 처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전두환은 워싱턴 방문 의사를 밝혀 김대중의 석방과 미국행이 성사되었다. 돈 오버도퍼, 앞의 책, 135쪽; 도널드 그레그, 앞의 책, 256쪽.

158) 강력한 제재 수단 없이도 미국의 유보적 태도는 공격적 수사보다도 전두환에게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었다. 글라이스틴, 앞의 책, 237쪽.

159) 장준갑·김건,「1980년대 초반(1980~1981) 한미관계 읽기」『미국사연구』38, 2013, 200~202쪽 참

외교, 친 개신교 노선이 한국의 군사정부와 마찰 요인이었던 것과 달리 레이건 행정부의 강경 노선은 전두환 정권의 군사동맹 위주 반공노선과 조화를 이루었다. 한미 간 쟁점이던'김대중 문제'는 전두환의 워싱턴 방문과 한미정상회담으로 타결되어 정치적 성격을 분명히 했다.[160] 1981년 1월 23일 한국 대법원이 김대중 사형을 확정한지 하루 뒤인 24일 전두환 대통령의 재가로 무기징역 형 감형,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1월 28일 전두환은 방미 길에 올라 2월 2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대외적인 정치 승인과 함께 F-16 전투기 36대 구매 및 군사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이어 2월 25일 간접선거로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카터 정부의 인권외교에 힘을 받았던 개신교 네트워크는 전두환의 '방미 결정'에 격앙된 어조로 구명운동을 이어갔다. 1981년 1월'아시아교회위원회(CCHRA)'는 한미정상회담을 '명백한 거래'로 규정하고'전두환 장군은 대법원 판결을 감형한 것으로 레이건 대통령의 환심을 산 것'이라 강조했다.[161] 회원 대상 행동지침에는 1) 2월 2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충격을 표현할 것 2) 김대중의 즉시 석방 요구를 행정부(레이건 대통령, 헤이그 국무장관) 앞으로 전신, 메일, 전보 발송할 것, 3) 의회관계로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실망과 미국의 대외정책 재고 촉구 등, 4) 각 지역 회원 앞으로는 전두환의 미국 방문 도시일정에 맞춰 항위 시위 전개할 것 등을 지시했다. 전두환의 방미 일정으로 로스앤젤레스(1.27~29, 차상달 담당), 뉴욕(1.29~2.1, 인권연합 담당), 하와이(2.3)을 상세히 알려 항위 시위를 독려했다.[162] 린다 존스는 1월 25일 <The United Methodist Reporter> 앞으로 보낸 글에서도 전두환의 방미 성격을 계엄해제와 김대중의 사형 감형으로 얻은 '명백한 거래'이며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미국인들에게'부끄러운 이벤트'가 될 것이라 단정했다.[163] 「인권연합」의 패리스 하비는 1981년을 레이건 행정부의 새로운 정치기후를 파악하는 중대 시기이자 동시에'불확실의 해'로 인식했다.[164] 패리스 하비는 1981년 1월 16일 회원 발송 메시지에서 "김대중 재판의 짧은 숨고르기로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대법원 선고 이후의 행동 지침을 내렸다.

1. 김대중이 석방되지 않을 시 보이콧 위협으로 한국 고문들에게 계속 전화할 것.
2. 한국문제 관련 청문회에서 특히 예산관련 협의에 반영되도록 할 것. 특히 전두환 정권의 체계화되어 가는 고문기술, 테러 전술 등 반 인권현실 강조

위의 행동지침에서 다음의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김대중의 완전 석방까지 미 의회 동원 압박 여론 노선 유지 둘째, 향후 압박 쟁점으로 한국의 보편 인권현실 강조가 예상된다. 이는 레이건 행정부에서도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개신교 네트워크 지원 활동이 예견되는 부분이다. 실질적인 민주화와 무관한 전두환 군사정부의 유화조치들과 방미 결정이 개신교 네트워크에 불러일으킨 반감과 저항은 1979년 봄 카터대통령의 방한 결정에서 보여준 개신교 민주세력의 카터 방한 반대운동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인권주의자 카터 대통령의 방한이 유신정부

---

조.

160) '김대중 석방'을 둘러싼 1980년대 초 한미관계는 장준갑·김건 위의 연구와 정일준,「미국 개입의 선택성과 한계」『갈등하는 동맹』, 역사비평사, 2010; 박태균,「1970년대의 한미관계와 학습효과」『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창비, 2006 참조.

161) 'Korea; Action Alert, Chun to Visit Reagan Feb.2! Kim Spared, But Still not Free', 1981, 1.23. 이 명백한 거래로 남은 것은 1) 민주주의를 옹호한 김대중은 감옥에서 쇠약해져 가고 있으며 2) 1년 전 봄 민주주의를 외친 수백의 한국인들을 투옥시킨 전두환에게 자유를 준 것이며 3) 2월 중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전두환은 이번 방미로 가장 큰 지지자를 얻은 것을 강조했다.

162) CCHRA, 위와 같음. 이 글의 작성자는 린다 존스이다.

163) 'Letter to the Editors, from Linda Jones,' 1981, 1,25.

164) '패리스 하비가 회원들에게,' 1981.1.16.

에 대한 정치적 승인으로 비춰져 인권억압을 정당화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165] 미국 내 개신교지도자들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은 "양국의 오랜 동맹관계를 위해서도 김대중 석방 및 시민권 회복, 언론·표현의 자유 보장 등 민주이행이 촉구되어야 할 것"이라 하여 전두환 방미 선결조건이 자유·민주제 이행에 있음을 강조했다.[166] 이 여건의 개선 없이 '한반도 장기적인 안정과  한미 양국 간 지속적인 우정도 없을 것'이라고 하여 한미동맹을 전제로 한 민주조치 해법을 제시했다. 이 서신의 대표 발의자는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클레어 랜달(Claire Randall), 미 연합장로교 회장 윌리엄 톰슨(William Thompson), 미연합장로교 총회 선교위원회 사무국장 다니엘 리틀(G. Daniel Little), 미 감리교세계선교국 부총무 로이스 밀러(Lois C. Miller), 미기독교교회협의회 해외 선교국 & 미연합장로교 프로그램 담당 오스카 맥클라우드(J.Oscar McCloud), 미 연합 감리교 세계선교국 부총무 페기 빌링스(Peggy Billings) 등으로 모두「인권연합」소속 회원이다.[167] 이와 동일한 논리가 1981년 6월'김대중 내란음모 가족'대표로 박용길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확인된다.[168]  서신에서 박용길은 첫째, 한미 혈맹관계 근거가 수많은 미국인들의 생명을 댓가로 지불한 자유민주주수호임을 상기시키고 한국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강조했다. 둘째, 레이건의 반공주의를 근거로 한국에서의 진정한 승공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자유·민주체제로, 독재와 권위주의는 월남전의 교훈과 같이 실패의 길임을 상기시켰다. 셋째, 한국 김대중 및 민주인사들이 미국의 도움으로 석방된다면 이는 레이건 인권정책의 성공사례가 될 것이며, 넷째,  한국 내 지식인·학생층에 팽배한 반미감정이 한미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였다.[169] 외교 수사를 감안하더라도 한미동맹에 기반 한 자유민주주의, 반공주의, 친미주의 등이 결합된 개신교 민주진영의 현실인식을 잘 보여준다. 전두환 방미로 정치적 승인을 얻은 것에 개신교 네트워크와 미국교회 지도자들이 우려를 표명하자 미 국무부는 한미 군사동맹의 원칙 기조로 화답했다. 미국의 전두환 환영은 '2차 대전 이후 지속되어 온 동맹국 정부 대통령으로서 환영'이며 한국의 안보는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의 근간임을 강조했다. 전두환의 방미 직전 취해진 일련의 조치들-계엄 해제, 김대중 사형 면제, 신헌법에 기초한 선거 등-은 한국정치 자유화로 가는 긍정적 신호로 한미관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170]

김대중 사형 감형 1년 뒤인 1982년 1월 7일「인권연합」·「국민연합 북미본부」공동의「구출 켐페인」은 참여자 앞으로 투옥 중인 김대중의 건강 악화 상황을 전하고 1년 전 캠페인 정신을 되살려 1월 23일로 예정된 '국제호소 켐페인(International Appeal)'에 서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171]  1월 22일 「인권연합」이 배포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제호소 켐페인

165) 페기 벨링스가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1979.2.1.;함석헌·윤보선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1979.2.9.; 미 감리교회 패트리샤 패터슨(Patricia J. Patterson)이 지미카터 대통령에게, 1979.4.9.; 북미주인권연합(NACHRK)·Friends of the Korean People이 카터 대통령에게, 1979.4.19.; 공덕귀가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1979.4.28;'린다 존스가 로잘린 카터에게', 1979.6.11. 등 다수.

166) 이 서신에는 52명의 미국 개신교 지도자들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 'Letter to President Reagan from National Church Leaders Regarding with Korean President Chun's Visit'(1981.1.29.)

167) 위와 같음.

168)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관련 가족 대표 박용길이 레이건 대통령에게,"1981.6.25.

169) 이 서신은 7월 7일 패리스 하비의 소개 편지와 함께 백악관에 발송되었다.  "패리스 하비(Pharis Harvey)가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에게"(1981.7.7).

170) 미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 윌리엄 다이어스(William J.Dyess)가 파크 리지 장로교회 실행위원회(Park Ridge Presbyterian Church Executive Committee) 앞으로 보낸 편지, 1981, 2,23.

171) 'An Earnest, International Appeal, Requesting that Mr. Kim Dae-Jung Released From Prison', 1982.1.7.

(International Appeal)'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김대중의 신병치료 목적의 석방을 호소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1982년 1월 23일 워싱턴 D.C. 제6장로교회에서 개최된 켐페인 행사는'북미주 인권연합(NACHRK)'와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미주본부'공동 주관 하에 문동환과 조지 오글 선교사가 연설을 맡았다. 아래에서 호소문의 요지를 보면,

> 지금 시점에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유, 독립을 요구하는 인간의 호소는 모든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을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지구상의 어떤 권력도 그러한 목소리를 억압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재확인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꺼지지 않는 불꽃을 간직해 온 한국민들에 대한 깊은 경이를 지금까지 표현해 왔다. 이와 같은 확신 위에 우리는 한국 정부에 김대중의 석방을 진심으로 요청하는 바이다.[172]

위에서 1년 전 구명운동 당시 카터 대통령과 미 정부를 향해 한국 정부 압박을 요구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인류 보편 양심에 호소하면서 한국정부에 김대중 석방을 요청하여 달라진 어조가 확인된다.[173]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도널드 그레그가 레이건 정부의 인수인계 중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김대중 구명'이라 하였듯이 1982년 12월 신병치료와 연구 목적의 미국행이 마침내 이루어졌다.[174]

인권과 도덕외교를 주창했던 카터 대통령의 백악관 일지는 1980년 '5월 광주'에 대해 침묵한 반면, 김대중에 대해서는'인권의 영웅(Human Rights Hero)으로 나는 그의 사형을 멈추기 위한 모든 압력을 전두환에게 행했으며 마침내 신병치료 목적으로 미국으로 올 수 있었다'는 회고를 남겼다.[175] '5월 광주'에 대한 카터 대통령의 침묵에 해석은 다양할 수 있으나 김대중 구명운동이 전개되는 동안 개신교 네트워크 내에'광주 사태'의 원인과 진상규명, 미국의 배후 책임에 대한 물음이 없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오히려 이 물음은 전두환 방미를 앞둔 시점에 '광주사태 관련 피의자 가족일동'이 레이건 대통령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확인된다.[176] 편지는 김대중 구출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자유우방의 연대책임이 있는 광주 사태에 일체의 공식, 비공식 노력에 관심이 없는 것은 통탄스런 일'로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과 이유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 지난 광주 사태를 돌이켜 보건대 누군가에 의해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야기된 사태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부를 옹호하고 시민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끝났고 그 진상이나 후유증을 달아보기는커녕 완전히 잊혀진 사진처럼 다루어질 때 남한에서의 미국의 이익이 수천여명의 무고한 사상자보다도 고귀한지 당신들의 기독교를 빌어 묻고 싶습니다.[177]

1980년 5월 광주 국면에서 미주 개신교 네트워크의 김대중 구명운동은 1970년대 카터행정부의 인권·도덕외교에 힘을 받은 미국교회의 아시아 선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카터 대통령이 야심차게 내세웠던 '주한미군 철수'의제가 한반도 군사억지력 유지를 위해 1979년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철회된 선례에서 보듯이 자유세계 보편적 인권이념은 냉전기 분단 한반도 지형에서 미국의 동북아시아 안보전략과 한미동맹에 종속되었다.[178]

---

172) An Earnest, International Appeal, Requesting that Mr. Kim Dae-Jung Released From Prison', Press Release, 1982, 1,22.
173) 호소문 서명자는 미국-64명, 캐나다-6명, 일본-45명, 독일-3명, 호주-3명, 뉴질랜드-1명 등이다.
174) 도널드 그레그 지음·차미례 옮김, 앞의 책, 256쪽.
175) Jimmy Carter. 2010, *White House Diar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455쪽.
176) "대한민국 광주사태 관련 피의자 가족 일동이 레이건 미국 대통령께" 1980.1.(날짜 미상).
177) 위의 편지. 이 편지가 미주 인권단체에서 수집한 것을 볼 때 레이건 대통령에게 전달되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미 의회와 범 개신교 그룹의 '김대중 구명운동'에서 '5월 광주'의 본질적 물음은 제기되기 어려운 구조였다.[179]

## 4. 맺음말

이 연구는 1980년 5월 광주항쟁과 미주 개신교 네트워크의 김대중 구명운동의 역사적 의미에 관한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1970년대 한국 개신교 에큐메니컬 진영의 민주화·인권운동은 인류 보편의 인권가치를 한국사회에 토착화 시키고 권위주의 폭력에 대한 민주 저항으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독보적인 기록을 남겼다. 1980년 5월 18일 직후 광주소식을 국내보다 빠르게 접했던 미주 개신교인들은 광주 살상을 세계에 알리고 계엄령 해제·정치 민주화를 요구하여'자유·민주'의 역사방향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미주 개신교 네트워크의 김대중 구명운동은'5월 광주'가 던진 민족·민주문제에 제한된 요소들이 있었다. 미국교회 아시아 선교 기반의 김대중 구명운동은 자유민주주의와 개신교 인권사상을 기초로 미 의회·정관계 여론운동을 전개하여 한계요인이 명확했다. 광주 배후에 미국책임문제가 반미감정으로 확산될 것에 대한 우려는 대표적인 예이다. 전두환 신군부의 등장과 한국 인권상황에는 정치민주화 요구로 저항했지만 한반도 안보와 질서유지를 위한 미국의 무력사용 승인에는 저항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1980년 봄 전 민중적 정치 민주화 논쟁과 가능성들은 '김대중 석방'의 압박 구호로 대체되어 한미 정상 간 정책결정에 운명처럼 맡겨졌다. 1980년 5월 미주 개신교 네트워크의'김대중 구명운동'은 미국식 자유·민주체제 안에, 궁극적으로는 냉전기 자유세계 질서 안에 전개되어 분단한국의 본질적 물음은 제기될 수 없는 제한성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1980년대 초 미주 개신교 네트워크의 일부로 또는 공동 연대한 한인 민주세력의 민족민주 문제의식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첨부]<김대중 구명 관련 미주 개신교 네트워크의 서신 및 답신(일부)>

| 발신자 | 수신자 | 날짜 | 내용 |
|---|---|---|---|
| 주한 선교사 그룹 일동 | 지미 카터 대통령 | 1980. 6.6. | -전두환 군부의 인권상황 알림<br>-정치 민주화 과정이 요원함 |
| 국무부 한국문제 담당 데이비드 블렉모어 (David Blackmore) | 이상철 | 1980. 6.11. | -5.23. 이상철 편지에 대한 답신<br>-광주사태는 지나갔으며 미국은 한구정부가 소요원인들에 집중하길 바람 |
| 미국 디트로이트 시에서 개최된 '전미 신학대회' 참가 그리스도교 지도자 500여명 | 머스키 국무장관 | 1980. 8.5. | -김대중이 사형될 경우 한국의 정치사회 안정을 바라는 미국의 정책을 약화시킬 것,<br>-한국의 현 정부를 지지하는 미국에 대해 한국인들의 반감이 커져 장기적으로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 |
| 마이클 아마코스트(M.H. | 주한 감리교 세계선 | 1980. | -6.6. 포트라스 부부가 카터 대통령에게 보낸 |

178) 정성철,「관료정치와 카터행정부의 주한미군철수정책」『세계정치』26집 2호, 2005 참조. 한미정상회담 이후 7월 20일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지상군 철수를 1981년까지 중단할 것을 발표했고 화답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조치 9호로 수감된 정치범 180명의 연내 석방을 알렸다.

179) '5월 광주'에서 민족 민주문제 제기는 개신교 바깥 영역에서 제기되었는데, '광주 사태 구속자 가족일동'이 글라이스틴 대사에 보낸 편지(1980. 12.22)는 주한미군과 분단영속화, 군사 정치체제 지원과 정치자유화 억제 등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미국이란 무엇인가'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 | | |
|---|---|---|---|
| Armacost)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 교회 에드워트 포트라스(E.W. Poitras) 부처 | 8. 8. | 서신의 답신<br>-미국의 대한정책의 두 가지 핵심은 외부 공격으로부터의 안보와 민주화 문제임(인권 보호 포함)<br>-동아시아 안보 평화의 근본 이해는 헌법 개혁과 국민 지지의 민주정부 구성.<br>-교회의 우려와 같이 미국정부도 광주 이후 민주주의 후퇴에 우려하는 바가 큼. |
| 리처드 포크(Richard. A.Falk) 프린스턴 국제연구센터 교수 |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 1980. 8.25. | -1975년 한국방문 이후 김대중의 신념에 공감<br>-김대중 개인을 넘어 한반도 전체 안전문제 |
| 칼 레빈(Carl Levin) 상원의원 | 에드먼드 머스키 국무장관 | 1980. 8.26 | -한국의 인권상황은 최악으로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지원을 상실할 위험 상태<br>-한국정부가 이대로 계속 나간다면, 그리고 미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민들의 이상은 공산주의 아래서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 여길 것<br>-국무부가 존 위컴 발언에 미국의 불신임을 분명히 할 것 |
|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 윌리엄 다이어스(William J. Dyess) | WAC 인권운동가 크리스 맥더모트(Chris McDermott) | 1980. 9.8. | -머스키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신의 답신<br>-김대중 재판에 주한미대사와 외교인사, 언론, 피고측 가족 등의 참관이 허용될 것으로 앎. |
|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백악관 안보보좌관 | 리차드 포크(Richard A. Falk) 프린스턴대 국제연구센터 | 1980. 9.9. | -김대중 구명 호소가 이미 상당한 상황<br>-한국의 새정부도 김대중 재판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음.<br>-미일 정부는 김대중에 대해 공조하고 있음 |
| 박상증 | 지미 카터 대통령 | 1980. 9.10. | -전두환이 민주이행을 유보할 경우 미국은 모든 대한 원조 수단을 동결해야 함<br>-주한미대사 소환과 미국관리의 한국방문 취소 등 조치가 없을 경우 한국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 |
| 이재현 | 지미 카터 대통령 | 1980. 9.10. | -광주 이후 한국민들의 반미감정이 매우 커지고 있음<br>-더 이상 미국의 행동으로 한국의 민주적인 국민들을 소외시키지 않기를 바람<br>-전두환의 민주진전을 이루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한 원조(경제, 군원)를 동결해 주기 바람 |
| 미 국무부 의회담당 차관보 브라이언 앳 우드(J. Brian Atwood) | 러셀 롱(Russell Long) 상원의원 | 1980. 9.18. | -8.22. 롱 의원의 메모에 답신<br>-미 정부는 이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와 협력, 다양한 외교적, 국제법적 관점에서 전력을 경주하고 있음 |
| 윌리엄 그로브(W.B.Grove) 미 감리교 웨스트 버지니아 감독 | 머스키 미 국무장관 | 1980. 9.25 | -인권과 시민자유 정신에서 한국의 민주 지도자 김대중을 위해 힘써 줄 것 호소<br>-미국정부의 영향으로 김대중의 사면과 석방을 기대함 |
| 윌리엄 다이어스(William J. Dyess) | 미감리교 북인디애나 컨퍼런스 메럴 게이블(Merrell D. Geible) 의장 | 1980. 10.14 | 1980. 9.26. 머스키 국무장관에게 보낸 탄원 서신<br>-사법재판 중에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은 불가능하나 한국정부도 미국 정부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있음 |
| 미 국무부 공보 담당 차관보 윌리엄 다이어스(William J. Dyess) | 미NCC총무 클레어 랜달(C.Randall) | 1980. 10.21 | -9.18 카터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신<br>-사법적 판단에 달린 문제로 미국 정부가 재판에 대한 공식 언급을 삼가고 있으나 우리의 |

| | | | |
|---|---|---|---|
| | | | 관심과 우려는 한국인들에게 전달되고 있음 |
| 윌리엄 다이어스(William J. Dyess) | 유니온 신학대학 총장 도널드 슈라이버(Donald Shriver, Jr.) | 1980. 10.21 | 10.2. 카터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신<br>-위와 같음.<br>-미국이 김대중과 한국의 민주인사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카터의 인권 가치를 지지해 온 미국 국민들의 '모럴'은 훼손될 것임 |
| 윌리엄 다이어스(William J. Dyess) | 지미 소여·린다 슐츠 목사(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 메트로폴리탄 협회) | 1980. 11.7 |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교회의 의견에 미국정부도 공감하고 있음. 한국정부와 김대중 재판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고 정치 자유화도 진전될 것임 |
| 케네스 티가르덴(Kenneth L. Teegarden) 그리스도교회(제자교회) 의장 | 지미 카터 대통령 | 1980. 11.21 | 김대중 대법원 판결에 한국정부 압력 행사해 줄 것 |
| 윌리엄 다이어스(William J. Dyess) | 케네스 티가르덴 목사 | 1980. 12.9 | -미국 정부도 귀하의 건의와 동일입장이며, 한국정부 당국도 미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음.<br>-김대중 사건은 현재 사법재판 중으로 미국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 리차드 리치(R.Rich) 한국문제과장 | 델마 아데어(Thelma Adair) 미교회여성연합회장 | 1981. 2.11 | -1.22. 레이건 취임 축하 서신에 답신<br>-전두환 대통령의 김대중 사형 감형과 유화조치들이 한미 유대관계를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함 |
| 아시아 베넷(Asia.A. Bennett)한미우호협의회 사무국장 | 리차드 리치(R.Rich) 한국문제과장 | 1981. 2.12 | -80.11.13/1.27 서신의 답신<br>-전두환 대통령의 김대중 감형에 국무부는 환영함<br>-최근 김지하 등의 석방도 매우 고무적임<br>-이러한 유화조치들이 더 진전되길 희망함 |
| 클레어 렌달 NCCCUSA 사무국장 | 리차드 리치(R.Rich) 한국문제과장 | 1981. 2.19 | -1.29. 레이건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신의 답신<br>-미 국무부는 1.23. 전두환 대통령의 김대중 사형감형과 1.24. 계엄해제 조치 등을 환영함<br>-이러한 유화조치들이 더 진전되길 희망함 |
| 윌리엄 다이어스(William J. Dyess) | 파크리치 장로교회 실행위원회 | 1981. 2.23 | -전두환 대통령의 방미에 레이건 행정부는 한미우호관계 진전을 희망<br>-정치적 유화조치들이 향후 더 진전될 것 |
| 로버트 리치(R. Rich) 한국문제과장 | Thelma Adair 미교회여성연합회장 | 1981. 2.23. | 1월 22일자 레이건 신임 대통령에게 보낸 사면 청원에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유화조치를 끌어내고 있다는 내용 |
| 윌리엄 다이어스(William J. Dyess) | 데이비드 존스 부처 | 1981. 2.23 | -전두환 방미 질의에 대한 답신<br>-레이건 정부는 전두환을 동맹국의 지도자로 환영<br>-김대중 사형 감형을 포함한 전두환의 유화조치들에 미국은 만족하며 향후 한미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 |
| 상원의원 Alfonse D'Amato | 미 국무부 의회담당 | 1981. 2.25. | -미장로교연합의 보고서를 근거로 전두환에 의해 한국 인권이 짓밟히고 있음(호소문 첨부) |
| 리처드 페어뱅크(R. Fairbanks) 의회관계 차관보 | 상원 빌 브래들리 의원 | 1981. 3.16. | -3.2. 브래들리 서신에 답신<br>-1.23. 김대중 사형 감형 조치, 계엄령 해제 조치 등을 환영하면서 향후 진전된 일정을 기대함 |
| 리처드 페어뱅크(R. Fairbanks) 의회관계 차관보 | 상원 Alfonse D'Amato | 1981. 3.30 | -2.25. 김대중 건에 대한 서신의 답신<br>-미국 정부는 전두환 대통령의 김대중 사형 감형을 지지함.<br>-한국정부는 계속해서 정치 민주화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함 |
| 리처드 페어뱅크(R. Fairbanks) 의회관계 차 | 하원 돈 에드워드(Don Edwards) | 1981. 4.8. | -1.29./2.12. 서신과 질문에 대한 답신 |

| 관보 | | | |
|---|---|---|---|
| 김대중 사건 관련자 가족일동(박용길 대표) | 레이건 대통령 | 1981. 6. 25 | -한미 양국의 영구 평화는 양국 국민 간 신뢰와 정의를 바탕으로 성취될 수 있음<br>-한국 지식인과 학생 계층에 반미감정 팽배. |
| 로버트 리치(R. Rich)한국문제과장 | 패리스 하비 | 1981. 8.7 | -한국에서 온 Mrs. 문(박용길)의 편지 첨부한 패리스 하비의 서신 잘 받았음<br>-주한미대사와 미국무부는 항시 의사소통에 열려있음 |

❒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학술심포지움 '5.18민주화운동과 기독교' 제2토론 (2020. 9. 5)

# 고지수 박사님 발제에 대한 토론문

**한운석**
**(튀빙겐한국학센터장)**

해외에서의 한국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연구들이 소략한 가운데 발표자가 북미주개신교 네트워크의 김대중 구명운동에 대해 자세한 연구를 해준 것은 무척 소중한 기여라 생각합니다. 한독 에큐메니칼 협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제 지평을 넓혀준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토론에서 주로 북미주개신교 네트워크의 김대중 구명운동에서 나타나는 기본 사상에 대한 해석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발표자는 여러 차례 개신교 국제 네트워크의 김대중 구명운동의 한계로서 미국의 책임을 분명히 지적하지 못한 것과 친미주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백악관과 미국의 의회를 움직이고 미국 내에 여론을 조성하여 전두환 정권을 강하게 압박하여 김대중과 구속된 민주인사들을 석방하고자 했고 그러려면 미국의 책임을 정면으로 제기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제자가 밝힌 바와 같이 5월 26일 민주동지회의 긴급호소문은 "한미연합사령부와 미국을 향한 비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광주 군부대 투입 동의로 더 많은 유혈사태 초래가능성을 비판하고, 이것이 향후 반미감정을 조성하여 오히려 한반도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것을 우려했다"는 것입니다. 발제자는 "반미감정 형성을 우려한 민주동지회의 호소"에 주목하여 이것을 친미주의의 표현으로 해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이 한국 민주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들 중의 하나라는 비판적 이해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진보적인 에큐메니칼 운동가들이 그런 속내를 감추고 미국을 움직이기 위한 논리를 이용한 것이라 해석하고 싶습니다.

발표자는 III장에서도 박용길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의 넷째 요구로서 "한국 내 지식인·학생층에 팽배한 반미감정이 한미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는 것을 "외교수사를 감안하더라도 한미동맹에 기반 한 자유민주주의, 반공주의, 친미주의 등이 결합된 개신교 민주진영의 현실인식을 잘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유신체제하에서 1970년대에 민주화운동과 도시산업선교회와 농민운동 등민중 생존권 운동, 한국 민중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을 통해 민중신학을 발전시켰고 서남동, 안병무, 문동환 등 갈릴리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그 주축을 형성했다는 것을 발표자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과 북미주 에큐메니칼 운동에 적극 참여한 교계 인사들과 그에 뜻을 같이한 지식인들은 다수가 이러한 민중신학에 동조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한국의 민중운동을 성찰하면서 한국 현대사에서 미국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980년 이들의 현실 인식은 이미 친미주의를 극복하고 미국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오히려 더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80년대에 진보적인 기독교 인사들이 통일운동에 더 매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반공주의와 관련해서도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발제자는 “김대중 재판의 주요 쟁점인 ‘공산주의자’혐의에 대해「국민연합 북미본부」는 ‘민주사회 건설을 통한 진정한 승공의 길을 독재 권력이 공산주의 혐의로 탄압하여 결과적으로 더 심각한 공산주의 위협으로 몰고 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경고했다.”고 서술했습니다.

박용길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한국에서의 진정한 승공은 독재와 권위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자유·민주체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들을 반공주의의 표현이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유신체제 하에서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는 데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된 것이 공산주의자로 낙인찍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독재 정권은 심지어 WCC도 용공세력으로 몰았습니다. 따라서 에큐메니칼 운동은 공산주의 낙인찍는 이데올로기와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 전술적으로 이떤 논리로 이에 대처할 것인가가 많이 논의되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와 기독교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독교회협의회는 70년대 말에 공산주의·사회주의와 기독교의 관계를 다루는 워크숍을 갖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김대중 구명운동에서 나온 선언문이나 서한들에서 표현된 반공주의를 북미주 개신교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사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연관해서도 북미주의 개신교 네트워크에 참여한 교회 인사들이 어떤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예컨대 복음주의 신학보다는 자유주의 신학, 그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신학자들의 영향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교단이 더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박정희 시대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1960년대 산업선교가 중요해지면서 알린스키의 도시 빈민선교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과는 연관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교’ 라든지 WCC와의 연관 속에서 국제 에큐메니칼 운동에 영향을 미친 신학사상과의 연관도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학술심포지움 '5.18민주화운동과 기독교' 제3발제 (2020. 9. 5)

#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우리는 무엇을 보았고 보지 못했나:

## '세기의 재판'을 통해 살펴보는 정의와 화해의 과제[180)]

**김상덕**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들어가며
1. "세기의 재판" 그리고 민주주의 승리
2. 정의와 평화의 복잡한 관계
2.1. 길을 잃어버린 정의
2.2. 평화의 개념과 혼용
3. 정의와 평화에 관한 논의
3.1. 평화가 정의보다 우선인 경우 (priority of peace, justice later)
3.2. 정의가 평화보다 우선인 경우 (priority of justice, peace later)
3.3.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정의 실현의 우선성
3.4. 한국교회의 입장과 대응
4. 미완의 승리, 정의는 회복되어야 한다!
4.1. 미완의 승리
4.2. 정의의 문제인가, 처벌의 문제인가?
5. 용서와 화해를 위한 교회의 역할
5.1. 사진이 할 수 없는 일
5.2. 공적, 상징적 역할의 중요성
나가며

180) 본 발제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의 6장 "Restoring Justice for Peace and Reconciliation"의 일부를 본 행사의 발제를 위한 형태로 오늘의 상황에 맞춰 수정 및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그림 4. 1996년 8월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좌)가 전두환 전 대통령(우)이 서울지방법원에서 12.12와 5.18 사건의 재판 결과를 듣기 위해 두 손을 잡은 채 서서 기다리고 있다. © 경향신문

## 들어가며

죄수복을 입은 두 중년의 남성이 손을 잡고 나란히 서있다. 굳게 닫은 입과 엇갈린 시선, 표정 등에서 사진 속 무거운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듯하다. 흑백 이미지의 사진은 원본 사진보다 더 힘이 느껴진다. 마치 시공간은 정지되고 피사체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힘이 있다. 사진은 과거의 기록이며 특별히 의미 있는 시간, 역사적 순간의 기록이다. 사진은 영속적 시간의 순간을 포착하고 영원히 박제한다. 사진 이미지를 본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기록을 본다는 것을 의미하며 청중의 기억을 되살린다, 아니 형성한다. 어떤 사진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한 집단과 사회의 기억을 형성한다. 이 사진이 한국사회에 전달하는 것은 무엇이고, 한국사회는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이 사진은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방법원 417호실에서 전두환·노태우 전(前) 대통령이 12.12 내란음모와 5.18 광주학살의 혐의에 대한 첫 번째 재판 선고를 기다리는 장면이다. 한때 "대통령 각하"로 불리며 군사력을 장악하고 강력한 독재정치를 감행했던 그들의 호칭은 이제 "수감번호 1042"와 "수감번호 3124"이다. 당시 언론들은 이날 법정에서의 이 장면을 신문 1면에 배치하고 이른바 "세기의 재판"(Trial of the Century)[181]이라고 타이틀을 잡았다.[182] 이날 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81) 한국 현대사에서 언론이 "세기의 재판"으로 다룬 사건들은 다음의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8295.html#cb
182) 경향신문(1996. 8. 27) 1면 참조.

두 사람을 클로즈업 한 인물사진으로 처리한 이 사진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한다. 먼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데 둘 사이의 '친분'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 두 사람이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 모종의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보다 9년 앞선, 1987년 6월 10일에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후보의 선거 유세를 돕기 위해 잠실 주경기장에 왔고 둘은 손을 굳게 잡았었다. 이 두 사진은 5.18 사진집 『우리는 보았다: 5.18 광주민주화항쟁』에 의도적으로 나란히 배치되기도 하였다.[183)]

두 번째로 사진 속 두 사람의 시선은 각자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사진기자와 편집자는 의도적으로 이 사진을 포착하고 선택했을 것이다. 두 손은 붙잡고 있지만 두 시선은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이 사진은 마치 두 사람의 생각이나 입장이 이미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사진 속 전두환은 고집스럽고 당당해 보이는 반면, 노태우의 모습에선 상대적으로 불편함과 두려움 등이 나타난다. 굳게 잡은 두 손이 그들은 같은 배를 탄 공범이었지만, 그 배는 곧 침몰할 위기에 처한 듯 보인다. 이 사진이 보여주는 것과 보여주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 1. "세기의 재판" 그리고 민주주의 승리

소위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 재판은 단지 개인의 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오랜 독재정권(1961-1987)의 막을 상징하는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 탄생을 뜻한다. 특별히 5.18 광주항쟁의 역사는 군사정부의 불의와 폭력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나고 나서야, 두 대통령이 법정 앞에 서게 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위 사진 속 "세기의 재판"은 마침내 군사정부의 독재체제가 무너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상징적 순간을 담고 있다.

이로써 오랜 한국 독재의 역사가 막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한 달 후, 대법원은 서울법원에서의 1심 결과를 각각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에서 17년형으로 삭감하였다. 게다가, 1년 뒤인 1997년 12월 22일, 전두환과 노태우는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게 된다. 그들이 처음 감옥에 수감된 지 2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을 뿐이다. 16년 동안 막강한 권력에 의해 무참하게 죽어간 무고한 시민들 그리고 그에 맞서 싸웠던 수많은 시민들의 저항과 노력으로 시작된 한국의 민주주의, 그 시작에 바로 "세기의 재판"이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불의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자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그리고 그 승리는 2년 만에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든지) 막을 내렸다. 이 일련의 사건은 소위 한국의 형사 사법제도(criminal justice system)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현 사법제도 안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당시 법원의 결정과 형량은 공정한가? 그것은 무엇을 혹은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현 사법제도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특별히 이 사진 속에서, 청중은 피해자를 위한 진실한 사과를 볼 수 있을까? 전두환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후회 혹은 사죄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가 정한 추징금 2,205억 납부를 두고 자신이 가진 전재산은 고작 29만원이라는 대답으로 피해자에게 또 한번의 상처를 주기도 했다.[184)] 또한 그는 2017년 4월에 발간된 그의 자서전에서 자신 또한 5.18

183) 5·18 기념재단, 『우리는 보았다: 5·18 광주민주화항쟁』 사진집, (광주: 5·18기념재단, 1991/2006), p. 155-156

의 희생자 중 한 명이라는 발언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사진을 선택하면서 필자가 제기하고 싶은 질문은 '피해자를 향한 진실한 사과 없이 5.18 광주항쟁의 정의는 실현될 수 있는가?' 이다. 이 질문은 정의와 평화의 관계로도 이어진다. 광주항쟁 40주년, 한국 사회에서 정의와 평화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과 구속 및 특별 사면, 그리고 자신의 역사적 책임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등 1996년 "세기의 재판"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다. 현 '사법적 정의' 체계 안에서 그는 이미 유죄 판결과 처벌을 받았음에도, 국민 다수의 정서는 그의 미온적 태도와 피해자 가족들을 향한 사죄 및 적극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정의롭지 못하다고 여긴다. 따라서 이 논문의 주요 관심은 '사법적 정의'의 한계를 보완할 정의 개념으로서 '회복적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을 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정의와 평화에 대한 이론적 개념들을 살핀 후, 이어서 한국사회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의의 우선성과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미완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회복적 정의'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2. 정의와 평화의 복잡한 관계

### 2.1. 길을 잃어버린 정의

오늘날 정의는 길을 잃었다. 정의에 대한 공통된 개념이나 의미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공공신학자 던컨 포레스터(Duncan Forrester, 1933-2016)는 포스트모던 사회 속에서 다뤄지는 정의에 대한 담론들이 가진 한계를 지적한다. 첫째로 정의에 관한 다양한 설명들 사이에서 근본적인 모순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정의에 관한 이론들 속에서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요인들은 철저히 배제된다는 점이다.[185] 포레스터는 파편화된 정의의 이해를 포스트모던 사회의 특징으로 이해한다.[186] 종교는 더 이상 정의를 규정하거나 법제화하는 힘을 상실했고 이로 인한 정의의 개념이나 실천이 세분화되고 다양화되었다고 말한다. 그 결과, 정의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그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광장은, 마치 '조국 사태' 속 광화문과 서초구로 나뉘듯이, 또 연령 및 성/젠더 등으로 나뉘듯이, 누군가에게 정의롭지 못한 일이 정의로운 일로서 주장되고 강요하는 현상들을 자주 목격한다. 특별히, 5.18 광주항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논의가 정쟁에 사용되면서 새로운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미 상당 수준에서 역사적 평가가 마무리 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정의'에 대한 파편화된 인식이 편향적인 역사의식을 주장하는 일부 단체들과 쉽게 연결되는 것 같다. 다시 말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의'의 관점이 개인화되고 상대적인 것이 된 셈이다.

---

184) 2003년 정부가 추징금 환수 집행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재산을 요구하자 한 말이다. 2020년 현재까지 정부가 환수한 추징금 액수는 전체의 절반 가량으로 약 1200억 정도이며 남은 금액은 1005억 정도이다. 김가윤, (뉴시스, 2020. 4. 27) "'전두환 추징금' 작년 25억 더 환수... 아직 1005억 남았다" (Accessed 2020. 8. 14)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27_0001007520 참조.

185) Duncan B. Frrester, *Christian Justice and Public Poli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2.

186) ibid. 2-3.

필자의 주장은 하나의 역사해석만이 존재하던 근대적 역사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과거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던 방식은 많은 경우 승자(권력을 가진 자)의 편에서 서술되는 경향이 짙었으며, 이로 인하여 중요한 이야기와 덜 중요한 이야기의 구분이 생기기도 하였다. 따라서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읽고 해석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며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장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존재한다. 지만원과 그의 추종자들은 5.18 광주항쟁의 역사적 사실마저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이념적 선동을 지속하고 있다.[187] 그 배후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집단성을 강화하고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집단은 아마도 극우정치집단일 것이다. 이들은 현 정부가 우리 사회를 공산화하고 도덕적으로 타락시켜 붕괴하려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법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믿은 수많은 시민들이 '서초동'에 모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반대하는 이유로 '광화문' 광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결집했다. 모임장소와 구호만 달랐지만, 두 공간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었다. 과거 역사를 두고 저마다의 관점으로 '옳고 그름'을 논하는 현상은 한국사회의 심각한 갈등의 문제가 되었다.

### 2.2. 평화의 개념과 혼용

오늘날 정의의 위기는 평화의 영역에서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의의 개념만큼이나 평화에 대한 이해도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 사회는 어떤 정의와 어떤 평화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혼란스럽기 마련이다. 이찬수는 이를 가리켜 '평화'(대문자 Peace)와 '평화들'(소문자 peaces)로 구별하고 오늘날 사회에서 여전히 평화를 말하면서도 갈등이 빈번한 이유들을 평화의 편협한 이해 때문이라고 말한다.[188] 인류 역사 속에서 벌어진 갈등과 전쟁들은 모두 각자의 '평화'를 목적으로 벌어졌다는 것은 가장 큰 모순 중 하나일 것이다.

평화의 개념은 모호하고 이상적인 개념에 가깝다. 평화의 길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평화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평화의 개념이 요한 갈퉁(Johan Galtung)의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 개념이다.[189] 흔히 우리는 평화를 "직접적인 폭력의 부재 상태(the cessation of direct violence)"으로 이해하는데 이를 가리켜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라고 규정한다. 반면, '적극적 평화' 관점은 폭력을 직접적 폭력과 함께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에까지 포괄한다.[190]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조적/문화적

---

187) 지만원은 2020년 2월 13일,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주장하여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원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고령의 나이를 고려하여 법정구속까지는 하지 않았다. 최유경 (KBS뉴스, 2020. 2. 13) "'5.18 명예훼손' 지만원, 1심서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Accessed 2020. 8. 25) http://mn.kbs.co.kr/news/view.do?ncd=4381194 참조.

188) 이찬수, 『평화와 평화들』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7) 참조.

189) 오늘날 '적극적 평화'의 개념은 평화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 토대가 되는 개념일 것이다. 이 개념을 만든 요한 갈퉁(Johan Galtung)은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 국제평화센터의 창립자이며 한반도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국제 문제에 대하여 방대한 저술 및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평화연구와 갈등연구의 학문적 영역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요한 갈퉁/강종일 옮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2000)을 참조하라.

190)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Oslo, London & Thousand Oaks, CA: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 Sage Publications, 1996). 72.

폭력에 대한 이해가 곧 정의의 개념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평화학에서는 사회적 불의와 구조적 문제들을 폭력의 잠재적 원인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직접적 폭력과 함께 폭력의 가능성(원인)들을 줄여가는 것을 평화로 이해한다. 폭력을 줄이는 과정으로서의 평화는 평화를 단지 폭력의 부재로 광범위한 폭력을 다루며 적극적인 평화의 구조와 문화를 세우는데 도움을 준다.

다시 무엇이 폭력인가에 대한 '정의'의 개념이 필요하다.

평화에 대한 두 가지 개념 모두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 소극적 평화는 평화를 직접적인 폭력의 부재로서 평화로운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그 평화가 불의한 정부나 힘에 의해 유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나치 정권하에 유지되는 독일 사회의 질서를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 반대로 ...

## 3. 정의와 평화에 관한 논의

### 3.1. 평화가 정의보다 우선인 경우 (priority of peace, justice later)

정의와 평화에 대한 논쟁은 주로 무엇이 우선하는가를 두고 나눠진다(Hovil et al. 2005; Whitmore 2010; Philpott 2012; Kim 2015). 먼저 살펴볼 입장은 평화가 정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로마 가톨릭 신학자인 토드 위트모어(Todd Whitmore)는 '소극적 평화'가 정의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전통적으로 가톨릭 사회교리(Catholic Social Teaching)는 정의의 우선성을 강조해 왔는데, 위트모어는 적어도 물리적 폭력과 전쟁 등이 멈추어야 사회정의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91]

여기서 '평화'란 전쟁이나 폭력의 부재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갈등의 상황이 급박하거나 심각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간다 내전의 경우, 오랜 기간 내전과 쿠테타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권은 수차례 바뀌고 이에 따른 피해자의 수만 늘어 누가 정의로운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192] 국제 구호단체인 난민법 프로젝트(Refugee Law Project)에 따르면, 북부 우간다 지역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을 멈추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전쟁이 길어질수록 마을을 회복하는데 더 큰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제공한 바 있다.[193]

현대 전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테러나 게릴라전과 같이 민간인 거주지역에 피해를 주기 쉬우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아이들이나 여성들에게로 향하기 쉽다. 따라서 많은 국제 구호단체들은 일단 전쟁을 멈추기 위하여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많은 아프리카 내전들의 사례에서, 전쟁을 멈추기 위한 힘이 내부적으로는 부족하여 유엔(UN) 평화유지군과

---

191) Todd D. Whitmore, "Peacebuilding and Its Challenging Partners: Justice, Human Rights, Developments, and Solidarity," in Peacebuilding: Catholic Ttheology, Ethics, and Praxis, ed. Robert J. Schreiter, R. Scott Appleby, and Gerard F. Powers (Maryknoll, NY: Orbis, 2010).

192)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라. Lucy Hovil, Joanna R. Quinn, and Project Refugee Law, Peace First, Justice Later: Traditional Justice in Northern Uganda (Kampala: Refugee Law Project, 2005); Adam Branch, "Neither Peace nor Justice: Political Violence and the Peasantry in Northern Uganda, 1986 -1998," African Studies Quarterly 8, no. 2 (2005).

193) Hovil, Quinn, and Refugee Law, Peace First, Justice Later: Traditional Justice in Northern Uganda. 17.

같은 외부 개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 외부자의 입장에서 어느 편을 '정의'의 편으로 볼 것인지 분별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외부 개입으로부터 전쟁이 멈춘다고 하여도 그 정치적 공백을 독재정권이 차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 신중한 개입이 필요하다.

### 3.2. 정의가 평화보다 우선인 경우 (priority of justice, peace later)

한국의 경우, 국제적 개입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 것만은 아니었다.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온전히 독립하기도 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주변 강국들에 의해 분단이 결정되었으며, 분단 후 초기 남한 정부를 이끌어 갈 지도자 선출에도 시민들의 의견은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한국 사회에는 '정의'의 실현이 '평화'보다 우선적으로 여겨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것은 우리 역사의 중요한 매듭을 바르게 정리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가기 위한 열망과도 같다.

특별히 한국 근현대사에서 정의의 실현이란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을 이르기도 한다. 광복 후 친일청산은 줄곧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자유, 독립, 민주사회로서의 전환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이었다.[194] 김동춘은 그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직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사회는 어두운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할 수 있었던 두 번의 결정적 순간을 놓쳤다고 말한다.[195] 첫 번째는 해방 직후 기간(1945-1950)이고, 두 번째 기간은 4.19 혁명 직후 한 달간의 기간이 주어졌지만 친일청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해방 직후 미군정이 들어서고 국가 운영 및 행정을 담당할 인력이 충분치 않았기에 다수의 친일 인사들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196]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으나, 이승만 정권의 반대에 부딪혀 1년 만에 해산되었다. 그 배경에는 친일청산보다 당장 시급한 외부의 위협요소, 즉 공산주의와의 싸움을 택한 것이었다.[197] 해방 이후부터 친일 청산이라는 정의의 실현은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불편한 '정의' 보다 당장의 '평화'를 선택한 셈이다.

과거사 정리의 기회를 놓친 결과는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일 인사들은 점차 정부 요직에 자리하면서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김동춘은 과거사 청산을 실패가 또 다른 불의를 이어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그들은 그들의 과거로부터 숨었고, 그 과정에서 더한 악행을 저질렀다. 그들의 세력이 커질수록, 그들의 과거를 감춰야 할 필요 또한 커져만 갔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았고, 국가 폭력은 더욱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식민시대의 불의를 등에 업고 시작된 대한민국은 그 시작부터 인권유린들을 자행하고 있었다.[198]

한국사회에서 과거사 문제는 단지 친일파를 처벌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김동춘은 친일 인사들로 구성된 정부와 과거사 청산의 실패는 더 큰 고통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고 보았

194)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2: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234.
195) Kim, Dong-choon. "The Long Road toward Truth and Reconciliation." [In En]. *Critical Asian Studies* 42, no. 4 (2010): 525-52.
196) Kim Dong-choon, "The Long Road toward Truth and Reconciliation." 529.
197) 위의 논문. 530-531.
198) 위의 논문. 533.

다.[199] 바로 군부독재의 시작이었다. 일본군관학교 출신인 박정희는 해방 후 만주에서 귀국하여 육군 소위로 군인생활을 시작하면서 군 내부에서 입지를 다진다. 이 시기는 반민특위의 활동 시기와도 겹친다. 또한 4.19 혁명 이후 자유민주공화국을 향한 정치적 변화의 바람이 5.16 쿠테타로 인하여 실패하게 된 점 등은 결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정희의 집권은 한국사회를 오랜 군사독재시대로 접어들게 하였고, 중앙정보부의 신설과 함께 감시와 고문, 간첩 조작 및 의문사 등의 또 다른 형태의 과거사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전두환 정권이 12.12 쿠테타로 시작된 것과 5.18 광주학살이 그 정치적 공백을 채우기 위한 '공포 정치'이었다는 점 등은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당장의 평화를 선택한 결과인 것이다.[200] 그러므로 '친일청산'과 '독재정권'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그 영향은 시대를 거쳐 현재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 3.3.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정의 실현의 우선성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정의와 평화의 관계가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 함을 보았다. 정의와 평화 모두 지키고 따라야 할 가치이지만, 역사적 상황과 선택들은 이 두 가치 중 우선순위를 매겨 정해진다. 때론 물리적 폭력과 오랜 전쟁을 멈추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경우가 있는 반면, 때론 불의한 정권에 맞서 저항하고 결연한 정의를 선택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 두 결정은 양날의 검처럼 단점도 존재한다. '소극적 평화'를 선택하는 경우 지배구조를 정당화하고 유지되도록 하는 데 악용될 여지가 있다. 반면, '정의'를 우선으로 할 경우에라도, 자기 정의에 빠져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절대적 정의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와 평화와의 관계는 결국 역사적 맥락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며 어느 편이 무조건적으로 옳거나 틀린 것은 아니다.

한국 근현대사 속 과거사 청산의 문제는 곧 정의 실현의 문제였다. 민족의 배신자인 친일청산의 실패와 그로 인해 발생한 군사 독재의 시작은 결국 1980년 오월 광주에서 발생한 대량 학살을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 군사정권이 들어서지 않았다면, 반공과 국익을 이유로 허락된 막강한 군사력이 결집되지 않았다면 40년 전 광주는 여전히 햇살의 고을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5.18 광주항쟁의 배경은 당시 군사 정권의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독재'는 불의의 상징이었으며, 민주주의는 '정의'의 상징이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즉 '정의'는 당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다. 혹자는 민주화운동 과정 중에 발생한 폭력적 시위나 경찰 및 계엄군과의 물리적 충돌을 도덕적 비판을 하기도 한다. 폭력시위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당시 폭력시위란 곧 정의를 위한 투쟁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은 상기할 만하다. 왜냐하면 5.18 민주화운동에서 우선순위는 '평화'가 아니라 '정의'였기 때문이다. 이는 광주의 시민들과 민주화운동을 염원하던 사람들이 폭력적이어서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형성된 '정의'의 실현에 대한 염원이 물리적으로 표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 3.4. 한국교회의 입장과 대응

군사정권(1961-1987) 하에서 '민주주의'는 곧 '정의'와 같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독재 정권을 마감하게 하는 것 뿐이었다. "독재타도"의 구호는 당시 민주화운동 그룹

---

199) 위의 논문. 533-536.

200) '왜 광주인가?'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에 대하여는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파주: 오월의봄, 2012)을 참조하라.

이 가진 '정의'의 개념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 폴린 베이커(Pauline H. Baker)는 정의가 곧 평화의 기초임을 주지시킨다. 베이커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단시안적인 해결은 될 수 있으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장기적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녀는 장기적 전략으로서 굳건한 민주주의적 기초를 세우는 일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믿는다.[201]

광주항쟁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민주화운동에 투신하는 것이 곧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한국교회들도 정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에 기꺼이 참여하였다. 당시 보수적 교회들은 주로 교회성장과 영적성숙 등에 초점을 맞추곤 했다. 반면 진보적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독재정권에 저항하고 민주화를 외치는 일에 앞장섰다.[202] 그리고 그 신학적 사상의 중심에는 민중신학이 자리하고 있었다.

김창환(Sebastin Kim)은 당시 민중신학이 한국교회가 '평화'보다 '정의'를 추구하도록 이끌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서남동이 '민중'을 역사의 주체이며 '민중의 한'을 해결하는 것이 곧 한국 신학의 주요 과제라고 본 것은 당시 불의한 군사정권과 그로 인하여 고통받는 약자들을 위한 고민이 담긴 것이었다.[203] 민중신학이 끼친 사회 정의에 대한 강조는 통일문제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88선언'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 '평화', '한민족' 세 원칙에 더하여 최초로 인권의 문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남북한 및 분단이라는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민중에 대한 정의를 내세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04] 안병무는 통일과 평화의 신학에서 정의의 우선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정의 없는 평화는 상상할 수 없으며 한반도에 정의가 실현되기 전까지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있어서, 정의란 불의한 압제로부터 민중의 해방을 의미하고, 인권의 회복을 말하고, 특별히 한국의 민주화 그 자체였다.[205]

이러한 신학적 배경 속에서, 한국의 진보적 그리스도인들은 독재 정권을 마감하고 민주사회를 실현하는 일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그 내부적 동기는 바로 '정의'에 대한 강조 때문이었다. 특별히 민중신학은 그리스도인 뿐만이 아니라 당시 민주화운동 그룹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 이는 "독재타도"와 "호헌철폐"를 외쳤던 6월 항쟁으로까지 이어졌으며 기독교의 여부를 떠나서 공통적으로 공유되는 목적의식, 즉 '정의'에 대한 열망의 표출인 것이다.

종종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과정 속에서 기독교의 역할은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마주한다. 이를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양적으로 증명하는 일은 그 자료 보관 및 발굴의 한계로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온 '정의 구현'에 대한 내적 욕구는 기독교적 가치인 이웃사랑과 약자에 대한 보호, 불의에 대한 저항 등으로 공통의 분모를 공유하고 있으며, 특별히 민중신학의 영향으로 당시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만한 충분한 신학적, 역사적 동기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

---

201) Pauline H. Baker, Conflict Resolution Versus Democratic Governance: Divergent Paths to Peace?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6). 566.

202) Sebastian Kim, "Justice and Peace Will Kiss Each Other (Psalm 85.10b): Minjung Perspectives on Peace-Building" in *Transformation*. Vol. 32, No. 3 (Sage, 2015). 190.

203) Sebastian Kim, "Socio-Political Reconciliation: Struggles against Injustice and Division in Korea," in Theology in the Public Sphere, ed. Sebastian Kim (London: SCM Press, 2011). 117.

204) 위의 글.

205) Ahn Byung-mu, Christ in the Midst of Minjung Event (Seoul: Korea Theological Study Institute, 1989). 34-59.

가 있다.

## 4. 미완의 승리, 정의는 회복되어야 한다!

이제 다시 [그림1]에서 보았던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민중의 함성들이 모여 마침내 “서울의 봄”을 일으키고, 문민정부에 들어서는 마침내 과거사 청산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였다. 1996년 사진 속 죄수복을 입은 두 중년 남성에게 내려진 1심 재판 결과는 앞서 언급한대로 “사형”과 “무기징역”이었다. 당시 언론들은 이 역사적 순간을 박제하여 “세기의 재판”이라는 명패를 달아주었다. 굴곡의 시대를 지나온 많은 시민들에게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탄성을 자아내도록 만드는 장면처럼 보였을 것이다.

5.18기념재단에서 제작한 사진집 『오월, 민주주의의 승리』(2006)는 1991년 초판에는 없는 사진들이 담겨 있는데, 1996년 서울지방법원 1심 재판을 받으러 들어가는 두 대통령의 사진이 각각 맨 마지막 장에 나란히 배치되어있다.[206] 책 왼편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놓여 있고 큰 제목으로 “세기의 재판”이라고 적혀있다. 책 오른편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의 제목은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이 사진집의 부제는 ‘5.18에서 6월항쟁으로’이며 이는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단지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한 ‘학살’이나, 거기에 맞서 저항한 ‘항쟁’으로 여기지 않고, 더 나아가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6월항쟁의 단초가 된 연결성을 강조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한때 광주 시민들에게 (그리고 한국 시민들에게) 오월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지만, 이제는 민주주의 승리의 시작점으로서 재구성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은 “세기의 재판”으로 끝이 난다.

그런데, 현대의 청중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과연 이 사진이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과연 전두환의 구속과 처벌만으로 충분히 정의롭다고 느낄 수 있을까? 지금부터는 2020년 오늘을 사는 독자들의 시선에서 사진[그림1]에 대한 이해와 생각을 다뤄보기로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정의’의 개념에 대해 그리고 평화와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 4.1. 미완의 승리

첫 번째 질문은 과연 현대의 청중들은 사진[그림1]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승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이다. 1996년 이 사진이 찍히고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에는 분명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세기의 재판’, ‘민주주의의 승리’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오랜 기간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불의를 저지르고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했음에도 그 사실이 밝혀지지 못했다. 그러나 마침내 서울지방법원에서 내린 ‘사형’ 선고와 이후 대법원의 ‘무기징역’ 선고는 뉴스를 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드디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시작되는구나. 그래 독재는 민주사회를 향한 열망을 꺾을 수 없지.’ 하며 감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청중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두환은 고작 1년 만에 형집행을 유예받고 특별 사면되었기 때문이다. 고령의 나이를 불구하고서라도 마땅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들도 존재할 것이다. 반면 특별사면은 정치적 문제이긴 하나, 적어도 그가 저지른

206) 5.18기념재단, 『오월, 민주주의의 승리』 (서울: 사진예술사, 2006). 258-259.

잘못에 대한 추징금만이라도 온전히 걷어주길 바랐을지도 모른다. “내 전 재산이 29만원이야.” 혹시나 하는 기대를 완전히 뭉개뜨린 발언이기도 하다. 심지어 그는 2017년 회고록을 출간해 자신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는 대신 거짓 변명으로 자신과 시민들을 두 번 속이고 있다. 어느날 한 언론사가 골프장에서 그를 만나 인터뷰를 시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심각한 허탈함을 자아내었던 적이 있다. 한국의 온정주의인가 아니면 한국에서는 ‘정의’가 실현될 수 없는 것일까? 따라서 사진 속 ‘세기의 재판’의 제목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제도적으로는 민주사회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그는 충분히 죄값을 치르지 않고 있다. 아직은 ‘미완의 승리’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 4.2. 정의의 문제인가, 처벌의 문제인가?

혹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충분히 죄값을 치르지 않아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의 혐의로 1심 사형과 대법원 무기징역의 선고를 받았다. 이말은 유죄판결과 형량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불만족스러움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 그가 받은 특별사면인가, 아니면 추징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서인가? 만약 현재 남은 추징금 전액을 환수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거나 충분히 정의롭다고 느끼게 될까?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진 이 불만족감은 처벌의 정도에 있는가, 아니면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회적 감정인 것인가 따져물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그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강하게 처벌해야 정의로운 것일까? 과연 처벌은 정의의 충분조건인가?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사회는 정의로워지는 것일까? 처벌은 정의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이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흔히 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한다는 생각은 근대 형사 사법체계(criminal justice system)에 기초한 것이다. 이 제도 안에서는 정의란 법의 준수 여부로만 규정되며 범죄는 법을 어기는 행위를 말한다. 특별히 범죄에 대해 적용할 때 그것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기 보다 국가(체계)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누군가 법을 어긴다면 해당 범법행위의 피해자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국가가 된다. 벌금이나 노역도 국가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또한 죄의 유무에 대한 판단도 국가가 대신하며 그 집행 또한 국가가 관할한다. 결국 현행 사법체계 안에서는 피해자는 사라지고 오직 가해자와 처벌만이 남게 된다.[207] 반면, 처벌이 아닌 피해자의 회복이 목적이 된다면 벌금이나 구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위한 사죄와 보상, 그리고 과거로부터의 치유이다.

사진[그림1] 속 “세기의 재판”은 오랜 기간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화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그러나 그 재판의 과정에서 민주화운동의 주체였던 시민이나 군사정부의 피해자는 배제되거나 잊혀지기 쉽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서 그들은 유죄인가, 아니면 그들이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유죄인 것인가? 그들은 어찌 되었든 법정 형벌을 받았고 사면을 받았다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다 치른 것이니, 피해자를 위한 법적인 의무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처벌하는 것만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는 없다. 반면,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가 온전히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의’이다.

민중신학은 ‘정의’를 위하여 독재에 맞서 싸우고 약자를 위하여 민주주의를 옹호했다. 그런데 응보적 정의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불의를 처벌하는 것으로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207) 응보적 정의와 관련해서는 Howard Zehr, Changing Lenses: A New Focus for Crime and Justice (Harrisonburg, VA: Herald Press, 2003)을 참조하라.

착각하기 쉽다. 오늘날 5.18 민주화운동이 정의롭게 기억되기 위해서는 '민중' 특히 폭력으로부터 억압 받았던 '피해자'를 중심으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기의 재판'은 반쪽자리 승리이며, 여전히 피해자를 향한 진정한 사죄와 용서의 길은 요원해 보인다. 광주항쟁 40주년, 한국교회는 온전한 정의의 회복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5. 용서와 화해를 위한 교회의 역할

### 5.1. 사진이 할 수 없는 일

앞서 보았던 사진[그림 1]은 이미 일어난 일이다. 사진이란 이미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으로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카메라에 담을 수는 없다. '세기의 재판' 사진 이후 언론에 공개된 사진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명절이면 그에게 찾아가 인사를 하는 그의 측근들의 모습이나 회고록을 통해 자신도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말하는 장면이나, 전재산이 29만원이라고 했던 그가 호화롭게 골프를 즐기는 모습 등에서 그가 과거를 후회하거나 진실로 사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사진으로 재현할 것인가? 이런 면에서 사진은 현실정치와 비슷하다. 회복적 정의를 주장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정치에서는 누구도 용서를 강요할 수도 없으며 처벌은 받아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찾기가 어렵다.

### 5.2. 공적, 상징적 역할의 중요성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맞는 5.18 기념행사에서 한 사진이 화제가 되었다. 사진[그림 2] 속 주인공은 5.18 유가족이다. 그녀의 생일은 1980년 5월 18일이다. 매년 찾아오는 자신의 생일이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그녀가 태어나고 나흘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사연은 이렇다. 그녀의 아버지는 완도 수협에서 일을 했는데 딸의 출생소식을 듣고는 만사를 제쳐두고 광주 집으로 오게 된다. 그리고 나흘 후인 22일에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만 것이다. 사진 속 여성은 기념식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편지를 읽는 형식으로 자신의 이야기와 아빠를 향한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을 고백한다.

"아빠, 미안해, 내가 그날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면..."

피해자의 고통을 누가 감히 이해할 수 있을까? 어찌 그것이 오롯이 그녀의 잘못일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슬픔과 고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세기의 재판'과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가 이들의 아픔을 달래주기엔 너무도 먼 이야기처럼 보인다.

그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편지 낭독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려는 유가족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다가가 가볍게 그녀를 감싸 안는다. 그녀도 이내 문 대통령 품에 안겨 운다. 필자는 이 사진이 그 해 보았던 어떤 사진보다 아름답게 기억한다.

기억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기억도 있지만, 과거를 재구성하는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도 있다. 특별히 대통령은 한 나라를 상징하며 그의 행동이나 정치적 제스처는 한 집단의 의식을 바꿀만한 힘이 있다. 과거 독일의 수상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1913-1992)가 폴란드 바르샤바의 전쟁 희생자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진은 그 어떤 말보다 강한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림 5.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유가족인 김소형씨를 위로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 나가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우리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보지 못했는가? 그동안 진실이 규명되고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들도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오월의 광주에서 시작된 민주화의 바람은 유월항쟁에서 열매를 맺기도 했으며, 마침내 '세기의 재판'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들을 향한 사죄와 책임규명을 불분명한 상태이다. '정의'가 처벌이 아닌 피해자의 회복과 용서, 화해에 있다고 하면, 사죄하지 않는 가해자로 인하여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사진은 일어나지 않은 일은 카메라로 재현할 수 없다. 그러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시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포옹은 정치적으로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지난 과거의 국가로부터 대신하여 사죄와 용서의 뜻을 부족하나마 전달하는 상징적인 메시지이다. 필자는 종교의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상징 역할에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기독교가 '민중'을 위하여 함께 저항하고 싸웠다면, 이제는 사과하지 않는 자를 대신하여 5.18 유가족에게 사과하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나아가 오월의 광주와 유사한 일을 겪었던 주변 국가와의 연대와 폭력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는 것으로서 조금이나마 그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Adam Branch, "Neither Peace nor Justice: Political Violence and the Peasantry in Northern Uganda, 1986 -1998," African Studies Quarterly 8, no. 2 (2005).

Ahn Byung-mu, Christ in the Midst of Minjung Event (Seoul: Korea Theological Study Institute, 1989)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2: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Duncan B. Frrester, *Christian Justice and Public Poli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Howard Zehr, *Changing Lenses: A New Focus for Crime and Justice* (Harrisonburg, VA: Herald Press, 2003)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Oslo, London & Thousand Oaks, CA: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 Sage Publications, 1996).

Lucy Hovil, Joanna R. Quinn, and Project Refugee Law, Peace First, Justice Later: Traditional Justice in Northern Uganda (Kampala: Refugee Law Project, 2005)

Sebastian Kim, "Socio-Political Reconciliation: Struggles against Injustice and Division in Korea," in Theology in the Public Sphere, ed. Sebastian Kim (London: SCM Press, 2011).

Todd D. Whitmore, "Peacebuilding and Its Challenging Partners: Justice, Human Rights, Developments, and Solidarity," in Peacebuilding: Catholic Ttheology, Ethics, and Praxis, ed. Robert J. Schreiter, R. Scott Appleby, and Gerard F. Powers (Maryknoll, NY: Orbis, 2010).

5·18 기념재단, 『우리는 보았다: 5·18 광주민주화항쟁』 사진집, (광주: 5·18기념재단, 1991/2006)
_____, 『오월, 민주주의의 승리』 (서울: 사진예술사, 2006)

요한 갈퉁/강종일 옮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2000)

이찬수, 『평화와 평화들』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7)

김가윤, (뉴시스, 2020. 4. 27) "'전두환 추징금' 작년 25억 더 환수... 아직 1005억 남았다" (Accessed 2020. 8. 14)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27_0001007520

경향신문(1996. 8. 27) 1면 사진 "세기의 재판" 참조.

이종신 (한겨레, 2017. 8. 25) "이재용 재판 계기로 본 대한민국 '세기의 재판' 10선" (Accessed 2020. 8. 28)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8295.html#cb

❒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학술심포지움 '5.18민주화운동과 기독교' 제3토론 (2020. 9. 5)

#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우리는 무엇을 보았고 보지 못했나: '세기의 재판'을 통해 살펴보는 정의와 화해의 과제> 에 대한 논찬

**권혁률**
(NCC 언론위원장,
성공회대 연구교수)

## 1. 들어가는 말

발표자는 이른바 "세기의 재판"이라고 표현됐던 1996년 8월 26일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정 사진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동시에 두 사람이 손을 굳게 잡은 또하나의 사진을 소환한다. 그보다 9년 앞선, 1987년 6월 10일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노태우가 대통령후보로 선출돼 당시 현역 대통령이었던 전두환과 손을 맞잡은 사진이다. 발표자가-아마도 지면관계상-소개하지 않은 그 사진을 논찬 자리를 빌려 소개하면 <그림 1>의 장면이다.

<그림 1>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손을 맞잡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후보.

그런데 <그림 1>의 장면이 연출되고 있던 1987년 6월 10일의 바로 그 시간, 거리에서는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는 함성이 울려 퍼졌고, 그 함성의 진앙지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6.10 국민대회를 주최한 성공회서울대성당이었다. <그림 2>는 성공회대성당에서 그날의 함성을 기리며 사제관 앞에 건립한 기념비다. 이 사진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으로 상징되는 80년대 군부독재정권과 한국교회-정확히는 한국교회의 민주화인권운동진영-이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상징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1987년 6월 10일 국민대회가 열린 성공회대성당의 기념비.

광주민주화운동 발생 초기에 한국교회는 상대적으로 적극적 대응이 미흡하였다는 일각의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는 일종의 채무의식으로 남아 이후 한국교회 민주화인권진영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리고 학살원흉을 처벌하라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광주학살의 원흉이 정권을 이어받으려는 시도에 주도적으로 맞서 6월민주항쟁을 이끌었던 것이다.

## 2. '회복적 정의와 화해'는 '진실규명'을 바탕으로

발제자는 광주민주화운동의 가해주역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라는 형이 확정된 후 불과 1년 뒤에 사면이 이뤄진 우리의 정치현실에 실망하며 '회복적 정의와 화해'를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대안적인 정의 실현의 개념과 실천전략으로 제안하였다. 한국의 사법적 체계는 정의와 평화를 모두 실현하기에 부족하며 특별히 피해자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중심의 정의와 화해를 추구하는 '회복적 정의'가 현 사법적 정의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사과와 용서, 이를 통한 피해자의 회복과 갈등의 해결이 정의로운 평화의 길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필자는 원론적 수준에서는 이에 적극 동의하지만, 한국의 정치, 사회적 현실 속에서는 이러한 해결의 길이 어찌 보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직까지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부정하고 진실도 부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도 피해자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소 다른 입장이라고 하지만, 80년 신군부로 통칭되는 광주민주화운동 가해세력의 진

정한 사과는 40년이 지난 지금은커녕,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정치권 일각과 극우세력에서는 명확히 해명된 '북한군의 80년 광주 투입설'을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으며, 헬리콥터 기총소사설도 명확히 진상이 규명되어 논쟁이 가라앉기는커녕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발제자도 '길을 잃어버린 정의'라는 표현으로 잘 지적하고 있다. 지만원 같은 인물이나 최근 광화문광장에 모인 이들처럼 저마다의 관점으로 '정의'를 추구하고 저마다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현상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심각한 갈등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여기서 논찬자는 '회복적 정의와 화해'라는 개념과 실천전략에 또 하나의 개념과 실천전략을 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진실규명'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진실 왜곡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208] 그같은 '가짜뉴스'의 주된 대상은 북한과 광주민주화운동이다. "김대중 지지세력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 광주사태의 진실이다" "북한군 특수부대가 광주에 침투해서 국군과 민간인을 죽인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는 모두 가짜다" 등등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는 헤아릴 수가 없고, 아무리 팩트체크가 이루어져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그날의 비극을 초래한 발포책임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헬리콤터 기총소사 등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부분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가해자사이의 '화해'와 '회복적 정의'는 너무도 가야할 길이 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논찬자는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 아직도 '진실규명'이라는 숙제가 너무도 엄중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그렇기에 발제자가 제기한 '회복적 정의와 화해'는 '진실 규명'이라는 바탕위에 이뤄져야할 실천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첨언하고자 한다.

## 3.'정의'와 '평화'의 우선순위

발제자는 '평화가 정의보다 우선인 경우'와 '정의가 평화보다 우선인 경우'의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매우 흥미로운 내용으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해방후 친일 지배세력은 '불편한 정의보다 당장의 평화를 선택한 셈'이라는 분석이나 한국의 민중신학이 평화보다 정의를 추구하도록 이끌었다는 연구성과의 소개 역시 매우 주목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해방이후 한국현대사에서 '정의'와 '평화'의 문제는 이렇게 획일적으로 두 진영으로 나눠서 선택된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승만 정권에서 이승만 본인과 친일반공진영은 북진통일을 부르짖은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평화통일을 외치며 오히려 '평화'와 '정의'를 하나로 연결 지어 인식하였었다. 또 80년대이후 기독교민주화운동진영에서도 광주민주화운동을 겪으며 군부독재와 그를 방조하는 외세라는 현실을 초래한 근본원인은 분단에 있다며 '정의'와 '평화'를 함께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발제자가 광주민주화운동과 정의 실현의 우선성을 이야기한 것이 이러한 맥락과 완전

208) '가짜뉴스'는 'Fake News'의 번역으로 기존의 루머, 유언비어와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학계에서는 '가짜뉴스'의 개념정의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체로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내용을 소설 미디어 등 온라인네트워크를 통해 전파하고자 만든 뉴스 형태의 내용물"라는 정의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가짜뉴스는 이익을 위한 상업적 행위, 또는 정치적 목적을 포함한 특정 목적을 달성하여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히 어긋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배자들이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거짓 평화'에 맞서 '민주주주의 곧 정의의 실현'이 우선과제라고 인식했다는 분석 역시 올바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논찬자는 발제자가 강조하는 '정의의 회복'에 주목하고자 한다. 피해자의 회복이 목적이 될 경우 벌금이나 구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위한 사죄와 보상, 그리고 과거로부터의 치유라는 지적은 매우 의미가 크다. 특히 '과거로부터의 치유'는 피해당사자뿐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온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의로운 심판과 가해자의 사죄, 보상뿐 아니라 진실 규명과 그에 따른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

즉 국민 모두가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에 공감하고 더 이상 어떤 세력도 이같은 진실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적, 법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명문화한다거나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실을 왜곡폄훼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사법적 응징을 가하는 법제화 등은 피해자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과거로부터 치유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라고 본다.

## 4.'나오는 말

발제자의 글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완성상태인 논문이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제출된 내용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 좋은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특별히 발제자가 마지막에 제기한 '용서와 화해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토론과 실천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적, 상징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발제자의 지적대로 한국교회가 광주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용서와 화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발제자의 마지막 지적대로, 과거 기독교가 민중을 위하여 함께 저항하고 싸웠다면 이제는 사과하지 않는 자를 대신하여 5.18 유가족에게 사과하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논찬자가 생각하기에 한국교회 주류 대다수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아픔을 외면했고 심지어 일부 지도자들은 가해자들에게 동조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 스스로가 이러한 과거의 죄책을 고백하고 사과하는 일부터 우선해야만 한다.

# 5.18민주화운동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손승호**
명지대 객원교수

1. 서론
2. 교회협의 초기 대응 실패(1980-1983)
3. 이후 교회협의 활동(1984~1987)
   1) 진상규명사업
   2) 외곽단체 설립
   3) 성명서 발표
4. 결론

## 1. 서론

5.18민주화운동은 '1970년대를 거치며 생명력을 키워 온 민주화의 역량이 이제는 성숙한 자기실현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 줄 수 있는 한 계기'였으며[209] 참혹하지만 소중한 역사적 전환점으로서 한국사회의 민주화 노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210] 그런 의미에서 5.18민주화운동은 한국현대 정치사의 핵심 사건으로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는 당사자의 역사인식과 정치색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바로미터로 작용하고 있다.

2020년 2월 9일 종로에서 총선에 출마한 한 거물급 정치인의 발언이 역사인식 논란에 휩싸였다. 선거유세차 찾은 분식집 앞에서 어묵과 떡볶이를 먹던 그는 "1980년 그때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라고 발언했고 당시 야당은 일제히 '빈약한 역사인식', '역사 공부 좀 하라'는 비판을 쏟아냈다.[211] 해당 정치인은 5.18민주화운동과는 전혀 관계없는 발언이라고 해명했고 소속 당은 "관계없는 발언을 억지로 결부시켜 역사인식문제로 왜곡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네거티브 공세는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다.[212] 이 논란은 2020년의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국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이 가지는 위치를 잘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바로미터로서의 5.18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보수정당조차 정치적 부담을 가지게 되었을 정도의 높은 역사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2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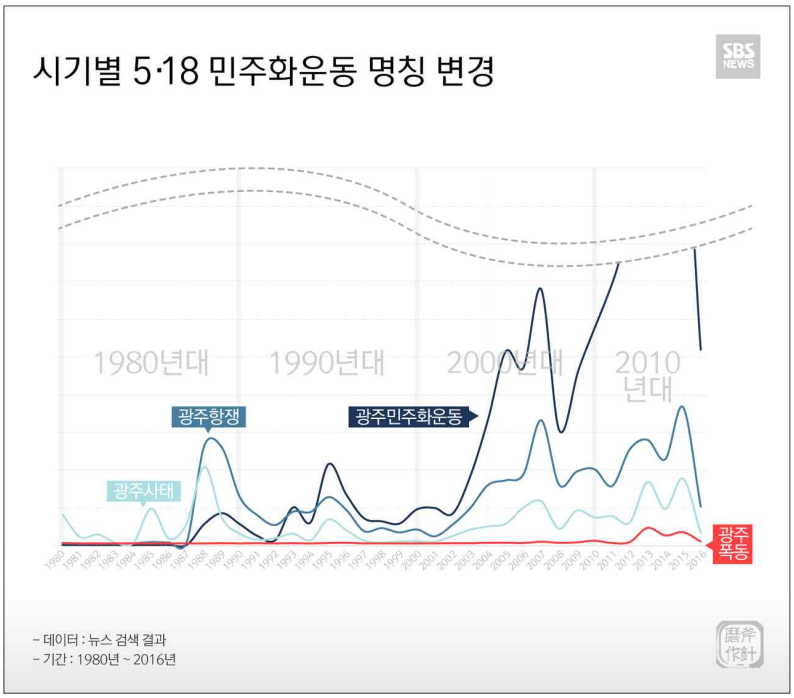
209) NCCK 인권위원회, 『1980년대 민주화운동 Ⅵ』(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 ⅰ.
210)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은 세계적 중요성, 고유성, 대체 불가능성을 인정받아 항목명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211) "황교안, "1980년 무슨 사태 있었죠?" … 쏟아진 비판," SBS 2020년 2월 10일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42612&plink=ORI&cooper=DAUM, 2020년 8월 15일 접속.
212) "황교안 '무슨 슨태' 논란 커지자… 한국당 법적대응 예고," 「시사저널」 2020년 2월 11일자,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612, 2020년 8월 15일 접속.

본 논문은 이런 5.18민주화운동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18민주화운동 자체가 어떻게 시작·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연구들을 통해 밝혀져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교회협이 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협이 5.18민주화운동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 집중한 선행연구는 없다. 다만 교회협의 인권위원회가 출판한 책 『한국교회 인권선교 20년사』[214]에는 스치듯이 언급되어 있으며, 『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215]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교회협의 대응이 약간이나마 정리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것이 가장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선행연구이다. 그 밖에 김명배의 『해방후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사-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1960-1987』[216]은

213) 그러나 SBS가 2016년 분석한 언론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키워드 사용량의 시기별 분석은 여전히 갈 길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화 이전에는 주로 5.18은 '사태'로 표현되어 왔다. 그러다 1987년부터 '사태'보다는 '항쟁'이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민주화운동' 표현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1989년 5.18의 공식명칭을 '사태'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개칭하였고 그에 따라 1989년부터는 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이 '사태'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 '민주화운동'이 대세로 자리잡게 되는 것은 1994년경인데 이는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역사바로세우기, 5.18특별법 제정 등을 시행한 결과로 보인다.

흥미로우면서 동시에 우려스러운 것은 2002년부터 다시 '광주사태'라는 표현의 사용이 일정한 비율로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3년 이후부터는 '광주폭동'이라는 표현의 사용도 늘어났다는 점이다. 2002년은 참여정부가 출범했던 대선이 있었던 해이고, 2013년은 '일간베스트'(일베)의 전성기 시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치들은 언제든 특정 정치세력의 목적과 인터넷 언론 환경 등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보수적 정치 세력이 유튜브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무시 못 할 여론 형성 기능을 획득한 것을 생각하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부작침] '광주사태, → '광주항쟁' → '광주 민주화운동' → !?" SBS, 2016년 5월 16일자 참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76165, 2020년 8월 15일 접속




214) KNCC 인권위원회 편, 『한국교회 인권선교 20년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94)
215) 조이제, 『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03).
216) 김명배, 『해방후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사-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1960-1987』(북코리아, 2009)

“광주민주화운동과 교회”라는 절에서 교회의 대응의 일부로서 교회협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5.18민주화운동 이전의 계엄 상황에서 교회협의 모습이 주로 소개되고 있으며 사건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는 거의 서술되어 있지 않다.

『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교회협 인권위원회의 초기 대응은 ‘역사의 오점’으로 표현되고 있다.[217] 그러나 왜 그러한 ‘역사의 오점’이 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 다른 언급이 없다. 다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218] 따라서 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초기 대응이 ‘오점’으로 남게 되었는지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1차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이어 교회협이 그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특별한 주장을 제시하기보다는 교회협이 무슨 일을 하고자 했으며, 왜 미진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협이 1980년대에 생산했던 여러 문서들을 참고하였다. 특히 교회협 총회록, 인권위원회 회의록, 인권위원회 소식지「인권소식」,『1980년대 민주화운동 Ⅵ-Ⅷ』[219] 등 교회협이 생산한 문서를 주로 검토하였다. 이중『1980년대 민주화운동 Ⅵ-Ⅷ』은 1984년 구성된 교회협 인권위원회 내부의 ‘광주사태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 수집한 자료들을 취합한 자료집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사건일지, 언론보도, 각계의 성명서, 공판기록, 교회협 인권위원회의 상반기 일지 등이 수록되어 있어 사료적 가치가 있으나 일부 오류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220] 또한 5.18민주화운동의 당시인 1980년은「인권소식」발행이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1980년의 상황은 총회록, 인권위원회 회의록만을 주요 1차 사료로 검토하였다. 또한 일부의 회고와 증언을 참고하였는데 김상근, 이문영, 조용술, 박형규 등이 지면으로 밝힌 것을 이용하였다.

## 2. 교회협의 초기 대응 실패(1980~1983)

1981년 2월에 있었던 교회협 30차 총회 자료집을 보면 ‘총무인사 및 보고’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221] 총무인사는 지난 한 해 동안 교회협이 어떤 일들을 해 왔는지에 대한 총무의 철학을 담은 보고서이다. 따라서 총무인사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적어도 그 사업이 공식적인 교회협의 주요 사업으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0차 총회의 총무인사에는 국외 기독교기관(WCC, 일본NCC)이 한국을 방문했거나 한국에서 방문간 것, ‘한국교회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가 조직 된 것, 각종 인사, 친목 모임을 가졌던 것 등이 언급되어 있다. 1981년 2월의 총회에서 보고된 교회협의 핵심 활동 사항에 정치적 영역의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국외 기독교기관을 만난 것 정도 밖에 찾을 수 없는 것

217) 조이제,『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 171.

218) 이런 인식은 김명배도 공유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를 비롯한 한국개신교계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취한 천주교회와는 (달리) 초기에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였다,” 김명배,『해방후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사-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1960-1987』, 215.

219) NCCK 인권위원회,『1980년대 민주화운동 Ⅵ-Ⅷ』(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

220) 예를 들어 이 책에는 1980년 6월 28일 “NCC 인권위원회, 현 시국에 대한 NCC의 견해와 태도를 표명키 위한 인권·교사위원회의 소집을 당국에 신청했으나 불허 통지받음”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당시 총회록과 인권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실제 소집일은 그보다 한 달 전인 1980년 5월 28일이었다.

221) “총무인사 및 보고,”「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30회 총회 자료집」(1981. 2. 27), 15-16

은 이상한 일이다.

1980년의 상황은 교회협이 국내의 민주화·인권 이슈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힘든 여러 제약을 제공하였다. 같은 해 인권위원회 사업보고의 개요에는 당시 상황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 10.26 사건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인권소식"의 발간과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한 금요기도회"는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5.17비상계엄 확대조치로 인권위원들의 연행, 구속과 법률자문위원들의 연행, 구속, 휴업 등으로 법률구조활동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도 인권위원회 사업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이 계속된 데다 5.17 조치로 인권위원과 법률자문위원까지 연행, 투옥되고 11월 5일에는 사무실이 수색당하고 위원과 직원이 연행되는 사태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 1981년 1월 25일 현재 인권위원회에 알려진 구속자는 아직도 370여명으로서 이들에 대한 대책활동이 요청되고 있으며, 현재도 이문영 부위원장과 한승헌 위원이 수감되어 있을뿐더러 그 외 성직자와 수많은 학생들이 수감되어 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드립니다.[222]

비상계엄상황에서 인권위원회의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인권소식」의 발행과 '금요기도회', 법률구조활동이 중지되고 위원들이 구속 되었다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들었던 실제적 이유 중 하나이다. 인권위원회의 부위원장이었던 이문영은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가 발효되기 직전인 5월 17일 저녁 11시에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집에서 중앙정보부 직원 세 명에게 연행되었고 중앙정보부 건물 지하로 연행된 후 이해동, 한승헌, 서남동, 한완상 등을 만났다고 회고하였다.[223] 이는 교회협 내의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는 물론 주변의 재야인사들까지 폭넓게 연행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224] 이런 상황으로 인해 교회와사회위원회가 5월 7일 소위원회(위원 : 김관석, 조남기, 김준영, 오충일, 김순배, 이재정)를 구성하여 추진 중이던 "계엄해제, 민주화 일정 단축 등 정치안정문제, 학원사태, 사북사태, 철강노동자 쟁의사태 등 노사문제, 실업사태, 물가고 등 경제문제, 정치범 석방사면문제, 군부의 중립문제 등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전달하는 건의문을 작성"하여 실행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은 중단되었다.[225]

교회협이 언제 어떤 경로로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인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다룬 것은 5월 26일이었다. 이날 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회와 교회와사회위원회 연석회의를 소집 요청키로 하고, 연석회의의 결과를 이미 소집된 실행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과 "현 시국과 특히 구속중인 인사들에 대한 문제를 위하여 당국자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광주사태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그 위원으로 임원진과 권성오, 오충일 위원을 포함"하는 것을 결의하였다.[226] 그러나 5월 28일로 계획된 인권위원회와 교회와사회위원회의 연석회의는 당국의 집회불허로 유산되었다. 따라서 실행위원회에 상정할 안건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어 6월 2일, 10일, 11일, 7

222) "인권위원회 사업보고 개요,"「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30회 총회 자료집」(1981. 2. 27), 76-77.

223) 당시의 교회협 내 직함을 놓고 보면 이들 중 이문영은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한승헌은 인권위원회 위원, 한완상은 청년분과위원회와 국제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었으며 서남동은 신학문제연구위원장이었다. 따라서 당시 연행은 다만 인권위원회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송건호와 조화순 역시 연행되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구 조직,"「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30회 총회 자료집」(1981. 2. 27), 1-6, 96.

224) 이문영 지음, 『겁 많은 자의 용기』(삼인, 2008), 365-367 참조.

225)「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30회 총회 자료집」(1981.2.27.), 31-32.

226)「인권위원회 회의록」, 1980.5.26.

월 3일에 업무협의를 이어갔는데 이는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로 인해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급한 사항에 대한 업무 자문”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227] 회의의 빈도를 보았을 때는 제법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

5월 28일의 연석회의와 실행위원회 안건 상정은 실패하였지만 당국자와의 면담은 성사되었다. 7월 4일 인권위원장 조남기와 사무국장 이경배(배석)가 국군보안사령관실에서 약 1시간 20분 동안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문만필 군목(배석)을 면담하였다. 7월 14일 이 면담에 대한 보고회가 있었는데 “1) 연행자들의 소재 확인 및 면회 요청, 2) 정국변화에 따른 교회의 입장, 3) 광주사태에 대한 교회적 관심, 4) 종교인으로서의 정치적 관심 등 광범위한 내용을 협의하였다는 것을 구두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 보고를 청취한 교회협 인사들은 뭔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회의록 맨 밑에는 “※ 보고를 들은 다음 이와 같은 면담이 이루어질 경우 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임하기로 합의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전두환을 만나고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협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228] 어쨌든 당국자와의 만남이 성사는 되었으나 협의의 결과가 원했던 것과는 달랐거나 부족했다는 점을 암시한다.

비록 “광주사태 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앞선 6월 4일 대책위원으로 선정된 오충일과 이경배가 광주에 방문하여 상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를 오충일을 보고자로 세워 실행위원회에 보고하려 하였다. 그러나 실행위원회를 진행하던 회장 강원용이 보고를 막고 나섰다.

> 인권위원회는 오충일 목사와 이경배 사무국장을 즉시 광주로 파견하여 사태의 진상을 알오보게 한다. 아직 광주 진·출입조차 어려울 시점이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많은 것을 살치고 돌아온다. 마침 KNCC 실행위원회가 열린다. 회의 말미에 광주 조사 보고를 하려 한다. 회장은 임시 실행위원회 안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고를 제지한다. 회의법으로는 그 제지의 변이 맞다. 그러나 회의법을 따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 광주의 외롭고 그러나 의로운 투쟁을 돕고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 KNCC가 자신의 역사에 오점을 찍은 것이다.[229]

「제30회 총회 자료집」의 “주요행사일지”를 보면 이 해에 임시실행위원회는 11월 7일 단 한 차례 있었다. 그렇다면 6월 4일 광주를 방문하여 조사한 것을 11월에 보고하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다른 임시실행위원회가 있었는데 총회 자료집에 누락이 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보고의 시점이 너무 늦다는 의아함은 있으나 총회 자료집을 기준으로 강원용의 임시실행위원회에서의 보고 제지와 이후 행보, 그리고 교회협 내 한국기독교장로회(이사 기장) 측 인사들 사이의 미묘한 갈등 등을 이어 생각하면 묘한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11월 25일 강원용 목사는 전두환의 국정 자문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았다. 광주의 참상에 대한 보고를 제지한 뒤 20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강원용은 그의 회고록에서 자신의 국정 자문위원 수락이 사형선고를 받은 김대중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230]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입장을 알리기 어려웠으며 강원용에 대한 여론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

227) 「인권위원회 회의록」, 1980.5.26.
228) “면담보고,” 「인권위원회 회의록」, 1980.7.14.
229) 김상근, “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인권민주화 운동에 나섰나?,” 「내일을 여는 역사」 26호 (2006.12), 171-172.
230) 강원용, 『역사의 언덕에서 4, 미완성의 민주화』(한길사, 2003), 161-178 참조.

> 나는 국정 자문위원이 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받아야 했다. … 국내에서 쏟아지는 비난은 말도 못했다. … 그런 국내외의 반응들을 보면서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웠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결정했고,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도 그런 비난과 여론을 받으니 국정 자문직을 수락한 내 결정에 대해 회의와 후회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한 가지 뿐이었다. 내 명예를 진창 속에 던지면서까지 뜻했던 바, 즉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나아가 최악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는 데 미력이나마 힘을 쏟는 것뿐.[231]

강원용에 대한 여론이 최악이었던 것은 그가 WCC를 떠나게 되는 과정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강원용은 1983년 7월 밴쿠버에서 열린 제6차 WCC총회에서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회장을 노리고 있었는데 1975년 나이로비 총회때부터 아시아 회장 물망에 오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시마투팡과 합의를 통해 내정된 상태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인도에서 회장 후보를 내었고 한국인 참석자들은 강원용이 회장이 되는 것에 격렬히 반대하였다.

> 5일 아침 총회 장소로 나갔는데 나는 문득 눈에 들어 온 벽보를 보고 기절할 듯 놀랐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씌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온 강 목사는 독재자인 전 대통령의 자문역이자 지지자인데 WCC 회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벽보는 한 군데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너무 창피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내가 회장이 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한국 사람들이고, 그것도 내가 속한 기독교장로회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까지 노골적이고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현실에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완전히 포기하는 것뿐이었다. 나는 서슴지 않고 회장직 포기를 결심했다.[232]

강원용은 이를 자신의 “양극단을 배제하고 중간 입장에서 조정과 화해의 역할을 자임해온 본인의 활동이 불러온 오해와 비난” 중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233] 활동가로서의 노선이 달랐고 그에 따른 오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회협에 참여하고 있는 기장 인사들 사이의 라이벌 의식과 서로에 대한 견제는 공공연한 일이기도 하였다. 강원용은 연합기관까지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기독교연합회를 교단들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총무인 김관석을 옥죄인 바 있었고 김관석이 총무 3선에 나섰을 때 그의 소속 교단인 기장이 동의하지 않아 타교단인 기독교대한복음교회의 추천으로 후보자격을 얻기도 하였다.[234]

강원용 입장에서는 급진 운동권 세력인 김관석과 박형규 노선을 따르고 5.18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고 싶어했던, 소장파 목사들은 강원용이 임시 실행위원회에서 보고를 막은 것에 대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통상적으로 당시에 사용되던 이슈파이팅의 방식을 고려해 보면 당시 소장파 목사들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실행위원회에서의 보고 이후 이 정보를 습득한 정부당국에 의해 오충일이 연행되고, 다시 이 연행을 기회로 집회나 기도회, 보고회 등을 열어 5.18민주화운동의 실상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여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내는 동시에 교회가 이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만든다. 그런데 강원용이 그 전략의 출발점에서 계획을 수포로 만들었으며 이어 본인은 전두환의 국정자문으로 합류한 것이다. 이는 그 의도가 무엇이었든 교회협으로서도 강원용 개인으로서도 매우 아쉬운 일이다.

---

231) 강원용, 『역사의 언덕에서 4, 미완성의 민주화』, 179-180.
232) 여해와 함께 엮음, 『사이·너머』(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334-335.
233) 여해와 함께 엮음, 『사이·너머』, 336.
234) 김상근, “김상근 목사의 민주화·통일 운동 이야기,” 「한국기독교와 역사」 52(2020.3), 227.

결과적으로 5월 28일 인권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의 대응을 위해 준비한 3가지 움직임 '1) 인권위원회와 교회와사회위원회의 연석회의와 실행위원회 안건 상정, 2) 전두환과의 면담, 3) 진상조사와 발표'가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연석회의는 당국의 집회 불허로 개최되지 못했으며, 전두환과의 면담은 성사되어 광범위한 내용을 협의하였지만 무엇인가 탐탁지 않았으며, 진상조사와 발표는 보고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이렇게 교회협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5월 30일 김의기, 6월 14일 김종태와 같은 청년들이 광주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잃었다.

이후 교회협의 활동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조사나 이슈화 같은 직접적인 활동보다는 그런 직접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는 인사들이 받는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는 일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광주나 서울의 교도소의 교도행정상의 문제를 시정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 건의를 한다거나, 다양한 기관과 지역에서 개최하는 추모예배가 당한 탄압에 대한 대응 같은 것들이 그것이었다.[235] 그러나 김명배가 지적하듯이 교회협의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236] 이런 문제의식은 당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82년 5월 24일에 있었던 인권위원회와 청년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결의되었다.

> 2. 양위원회의 결의로서 긴급 실행위원회 소집을 요청키로 하다.
> 3. 엔씨씨 실행위원회의 명의로 5.18사건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해 줄 것을 긴급 실.위에 건의키로 하고 앞으로 NCC를 비롯한 범교단적인 회계[회개의 오기-인용자 주]운동을 전개키로 하다.
> 4. 광주 고영근 목사의 설교 등 제시된 자료들은 정치목적적인 것이 아닐고 기독자들의 신앙고백으로 확인한다.[237]

양 위원회의 결의는 이제는 교회협이 직접 5.18민주화운동의 추모와 진상규명 요구를 해야 하며 그동안 이 문제에 있어 소극적이었던 교회협과 회원 교단들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1982년 6월 1일 임시 실행위원회에서 이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이 자리에서 3항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다만 1982년 5월 18일 광주YWCA회관에서 광주기독교연합회, 광주기독청년협의회, 기장 전남노회 교회와사회위원회가 주최한 '광주2주기 추모예배' 탄압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광주사태에 대해 교회의 입장을 밝히되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된 의령총기사건, 장영자 사건, 교회 및 도시산업선교 활동에 대한 언론의 문제, 구속자에 관한 문제" 등을 포함하여 함께 다루어 교회의 신학적 입장과 고백적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의하였다.[238] 그런데 그마나 이 성명도 발표 되지 못한 것 같다. 해당 연도 총회록은 물론『19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도 이 성명을 찾을 수 없다.

청년위원회와 인권위원회 역시 3항의 실천에 나선 것 같지 않다. 양 위원회 역시 3항을 축소하거나 누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인권, 청년위원회 현석 보고회의

---

235) 「인권위원회 긴급임원회 회의록」, 1982.5.17.; 「인권위원회·청년분과위원회 연석회의록」, 1982.5.20.

236) 가장 진보적인 성격의 교단으로 알려진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조차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았다. 김상근은 1980년 9월에 있었던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서 광주에 대해 한마디 언급이 없었던 것에 '이럴 수 없다, 기장이 이럴 수 없다'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회고하였다. 김상근, "김상근 목사의 민주화·통일 운동 이야기,"「한국기독교와 역사」, 221-222.

237)「인권위원회·청년분과위원회 연석회의록」, 1982.5.24.

238)「교회협 제32차 총회 및 정책협의회 자료집 2」(1983.2.24.), 20.

5월 25일 회관 소회의실, 양위원과 엔시시 관계인사 50명이 참가했습니다.

○ 고영근 목사님 설교 내용등 5.18추모예배에 관한 보고가 있고 이 내용들이 오늘의 기독자의 양심을 대변한 것임을 박수로 확인하고, 보다 강력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엔시시 실행위원회의 소집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239]

애초의 계획이었던 실행위원회의 자체적 추모행사 개최, 범교단적인 회개 등은 다만 '보다 강력한 대책'이라는 표현으로 감추어졌으며 광주에서 개최된 추모예배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의 책임을 언급한 후 연행된 고영근의 설교 내용이 메인 아젠더로 등장하였다.

결국 교회협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성명 혹은 추모기도회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1982년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인권문제전국협의회에서 발표된 "인권선언"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언급이 있긴 하지만 "민주와 정의를 외치다 쓰려져 간 광주의 시민들" 정도에 간단한 수준이었으며 이마저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언급하기 위한 전초였다.[240]

이런 문제에 대하여 1980년대 인권위원장을 역임했던 조용술과 박형규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241]

조용술 : 80년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반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80년대 상반기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은 광주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본회는 광주사건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밝힐 수는 없으나 여하간 역사에 오점을 남긴 것이었죠.

박형규 : 인권위가 80, 81년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죽어있었기 때문에 인권위의 활동을 81년도에 사회선교협의회(사선)이 재건되면서 대신했죠.[242]

## 3. 이후 교회협의 활동(1984~1987)

### 3.1. 진상규명 사업

교회협이 5.18민주화운동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계기는 1984년 6월 25일부터 27일에 있었던 인권문제전국협의회에서 "광주사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건의한 것이다.[243] 인권위원회는 7월 5일 모임을 갖고 임원회가 광주사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맡기로 결정하였다.[244] 바로 이어 모인 임원회에서는 김상근, 오충일, 금영균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245] 11월 9일 첫 모임을 가진 광주진상조사위원회는 광주 지역의 조사위원으로 강신석, 윤기석, 방철호, 이경석, 문정식, 김영진이 선출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조직 구성에 들어가 위원장 김상근, 부위원장 문정식, 서기 김영진으로 조직을 마쳤다. 그리고 업무는 어디까지나 진상 조사까지임을 결정하였다.[246]

1985년 5월 8일 모인 광주문제위원회는 조사정리에 대해 "Ⅰ. 기본조사서를 기초로 하고,

239) "청년위원회,"「교회협 제32차 총회 및 정책협의회 자료집 1」(1983.2.24.). 32
240) "인권선언,"『한국교회 인권운동 20년사』, 206.
241) 박형규는 1982-83년, 조용술은 1984-87년 인권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42) "창간특집대담 인권위원회의 역사와 인권운동의 전망,"「월간 인권」 창간호(1992.3), 15.
243)「교회협 제34차 총회 및 정책협의회 자료집」(1985.2.27.), 47.
244)「인권위원회 회의록」, 1984.7.5.
245)「인권위원회 임원회 회의록」, 1984.7.5.
246)「광주진상조사위원회 실무자 메모」, 1984.11.9.

Ⅱ. 정부발표문 및 해외보도 재료를 더욱 수집 공동으로 편집하기로, Ⅲ. 조사위원이 다시금 정리하여 편집키로 한다, Ⅳ. 편집위원은 인권위원회 조사위원과 광주 강신석 목사로 한다"는 네가지 사항을 결의하였다.[247] 그 이후의 조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조사사업은 1987년 1,000쪽이 넘는 분량으로 다양한 사료들을 취합·정리한 『1980년대 민주화운동』(전 3권)을 출판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은 이후 출간된 자료집과 조사보고서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1990년 도서출판 풀빛에서 출간된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의 1부 "광주 5월 민중항쟁 일지"에는 일부 중요한 대목의 근거자료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사용하고 있다. 그 중 일부를 옮기자면 다음과 같다.

> 23:00 도청 앞 발포 : - 도청 앞은 치열한 심야 공방전 계속, 계엄군은 공포를 쏘아대고 공중으로는 위협사격을 하는 기관총의 예광탄 날음.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계엄군은 M16 자동소총 발사.(1980년대 민주화운동); 14:00 무기탈취를 위해 시외지역으로 : - 무안. 광주 무장시위대 30명이 버스로 내려와 군민과 합세하여 무안군 일대 시위. 무안 현경면지서 습격, 접수. 무안경찰서 청계지서 습격하여 다량의 M1 소총, 카빈 소총 노획.(1980년대 민주화운동)[248]

### 3.2. 외곽단체 설립

1983년 7월 「인권소식」이 재발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인권소식」에서도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글은 찾기 힘들다. 간혹 '광주'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광주에서 벌어진 다른 사건에 대한 소식이 대부분이다. 매우 드물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상당한 분량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148호의 헤드라인 "'전국기독자민주쟁취대회', 광주민중항쟁기념대회 개회"라는 기사와 151호의 6면에 실린 1985년도 인권문제 전국협의회의 "성명서"가 그것이다.

「인권소식」 148호의 기사를 살펴보면 '전국기독자 민주쟁취대회'의 공동의장은 박형규와 조남기로 인권위원회의 전위원장들이었다. 이 민주쟁취대회는 1985년 4월 26일 '5월광주민중항쟁기념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에 조아라, 부회장에 고영근·유연창, 총무에 강신석·이해학을 선임하였다. 기념위원회는 5월 10일 서울의 약수형제교회에서 대회를 개최하여 '광주학살 진상규명 기독학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주의 피는 보상받아야 한다. - 5월 광주민중항쟁 이어받아 민주쟁취 이룩하자"를 발표하였다. 성명서는 8가지의 '우리의 주장'이 포함되어있었다.[249]

> 1. 광주 대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는 퇴진하라.
> 1. 광주 학살 희생자와 유족 부상자에 대한 완전한 보상책을 마련하라.
> 1. 모든 정치인은 광주학살 진상규명에 앞장서라
> 1. 미행정부는 광주학살 방조에 대해 사죄하고 한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배신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라.
> 1.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복권 사면을 실시하라.
> 1. 노동법·집시법·언기법 등 제악법을 개폐하라
> 1. 최저임금제 실시하고 외국농축산물 도입을 즉각 중단하며,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생존권을

247) 「광주조사위원회」, 1985.5.8.
248)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풀빛, 1990), 51, 65.
249) 「인권소식」 148호, 1985.5.16.

보장하라.

1. 전교회와 국민은 5월 12일부터 27일까지를 광주민중항쟁기념기간으로 설정하고 희생자 추모 집회 및 행사를 비롯한 진상규명투쟁에 나서자.

이 사례는 교회협이 비록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교회협의 주요인사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단체 설립을 주도하여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조남기와 박형규 등의 인물은 이미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대표적 기독교인으로 세간에 알려진 인물들로써 이들이 꼭 교회협의 전 인권위원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활동에 참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 3.3. 성명서 발표

1985년 6월 3일부터 5일까지 인권문제 전국협의회가 대전가톨릭 교육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협의회는 각 지역의 인권위원회(금강, 수원, 전북, 대구, 울산, 천안, 대전, 원주, 청주, 부산, 인천, 춘천, 성남, 전남, 총 14개 지역)와 교회협의 인권위원회가 함께 모이는 자리였다. 전국적으로 참가인원은 약 150명이었으며 주제는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었다. 이 전국협의회의 특징은 두 개의 성명서를 채택했다는 것이다. 보통 당해연도의 인권선언 한 건만을 발표해왔던 것과 달리 이 협의회는 "85년도 인권선언"과 "광주의거 5주년에 즈음한 성명서" 두 개를 발표하였다.[250]

"85년도 인권선언"은 대통령선거제도, 공권력 남용, 부당해고, 사표 강요 및 블랙리스트, 외국 농축산물 도입정책, 도시빈민 생존권, 공해피해, 언론통폐합, 양심수, 구속된 학생·노동자·시민의 석방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종합적인 선언[251]이었던 반면 "광주의거 5주년에 즈음한 성명서"는 5.18민주화운동에 집중되어 있는 성명서였다. 이 성명서의 중요한 점은 교회협이 5.18민주화운동이라는 단일한 이슈를 가지고 생산한 유일한 문서라는 것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교회협의 종합적인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다른 저항세력이 가진 일반적인 인식과 다른 점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교회협이 이 성명에서 보인 5.18민주화운동의 인식은 첫째, "광주사태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권력을 장악하려 했던 현군부 독재세력에 의해 발생된 것이며 거기에는 직접 혹은 간접으로 미국이 개입되었다는 것", 둘째, "광주시민 학살의 진상규명과 그 책임자의 처벌, 현 군부독재정권의 퇴진과 미국정부의 한국민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여 온, 미국문화원 농성학생들을 포함한 청년·학생들의 행동은 지극히 당연한 것", 셋째, "희생된 선량한 광주시민들이 폭도라는 누명을 벗고 그 유가족과 부상자들은 응분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 넷째, '광주사태의 진상이 조속히 규명되는 것은 민족 민주 민중의 대의에 입각한 역사발전을 이룩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절차'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성명은 1985년도 인권문제 전국협의회 참가자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우리의 입장 -

1. 광주사태의 진상과 책임이 조속히 규명되어야 한다.
2. 광주사태의 책임자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회개의 구체적 실천으로 퇴진하여야 한다.
3. 진정한 국가간의 우호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광주사태를 방조한 미국은 한국민에게 사과하고,

250) 「교회협 제35차 총회 자료집」(1986.2.27.)77-78.
251) "1985년도 인권선언," 「교회협 제35차 총회 자료집」, 149.

독재정권의 수립과 존속을 도와 온 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4. 광주의거 희생자의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는 응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광주사태 진상을 밝히려는 범국민적인 열망에 대한 당국의 폭력적 탄압과 인권침해 행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6. 광주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평화적이고 의연한 자세로 미문화원에서 농성함으로써 국민의 열망을 대변한 민주애국학생들을 용공시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처벌도 가해서는 안된다.

7. 우리는 광주의거 희생자들을 기리는 "광주 5.18민중혁명희생자 위력탑 건립 및 기념사업 범국민운동위원회"의 활동을 지지하며 적극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252]

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5.18민주화운동에 관련한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한다. 하나는 "광주사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광주의거"이다. '사태'는 군부독재 정권이 미국의 방조 아래 자국민을 학살한 것을 의미하고, '의거'는 광주시민의 저항을 의미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주체를 누구로 두느냐에 따라 표현을 신중히 결정하였던 것이다.[253] 어찌되었든 1985년에 이르러서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성명서가 발표될 수 있었다는 점은 분명 교회협 인권위원회의 역사에 있어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다.

## 4. 결론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1980년은 교회협 인권위원회가 위축되어 있던 시기였다. '금요기도회, 「인권소식」 발행, 법률구조활동 등이 모두 중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하자 교회협 인권위원회는 5월 26일 교회화사회위원회와 연석 회의, 전두환과의 면담, 대책위원회의 구성이라는 세 가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연석회의는 당국의 집회 금지로 무산되었고, 전두환과의 면담은 씁쓸한 뒷맛을 남겼으며, 대책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는 실행위원회에서 보고조차 하지 못했다. 회의법을 근거로 이 보고를 막았던 강원용은 이후 전두환의 국정자문위원이 되었고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내외의 장벽에 걸린 초기 대응은 결국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실패하게 되었다. 인권위원회 관계자들조차 이를 '역사의 오점'이라 평가하고 있다.

이후 1984년 6월에 개최된 인권문제전국협의회에서 인권위원회에 "광주사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건의하게 되면서 진상조사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3권으로 구성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은 일지, 당대 내외신의 보도와 각종 성명서, 공판기록 등을 담고 있으며 5.18민주화운동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어 왔다. 또한 교회협 자체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운동에 전면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인권위원회의 전위원장들인 박형규와 조남기를 공동의장으로 조직된 '전국기독자 민주쟁취대회'는 1985년 4월 26일 '5월광주민중항쟁기념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교회협이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발표한 유일한 성명서인 "광주의거 5주년에 즈음한 성명

252) "성명서," 「인권소식」 151호, 1985.6.13.

253) 그런데 이런 용어의 사용은 현재의 시민사회나 언론이 '사태'라는 표현을 시위대의 폭력성에 방점을 찍은 부정적 표현으로 인식하는 것과 당시의 뉘앙스가 달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사태'라는 표현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당시와 지금이 다른 것은 2000년대 들어 보수적인 정치세력이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정리가 끝난 사안에 대해 '사태', '폭동' 등의 단어를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의도로 사용하였던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마부작침] '광주사태, → '광주항쟁' → '광주 민주화운동' → !?" SBS, 2016년 5월 16일자.

서"(1985)는 당시의 재야·청년학생·유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과 교회협의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성명이 매우 뒤늦은 시점에 발표된 것에 대한 아쉬움은 크다.

어찌되었든 한국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인 5.18민주화운동에 교회협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히 2020년 5월 7일 교회협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고백과증언국민운동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오늘의 주권재민의 민주사회는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이 밑거름이 되어 만들어낸 것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이야말로 시대적 과제이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추는 치유되고 화해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교회협이 과거 오점을 되풀이하지 않고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차 사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30회 총회 자료집」(1981. 2. 27)
「교회협 제32차 총회 및 정책협의회 자료집 1-2」(1983.2.24.)
「교회협 제34차 총회 및 정책협의회 자료집」(1985.2.27.)
「교회협 제35차 총회 자료집」(1986.2.27.)
「인권위원회 회의록」
「인권소식」

연구문헌

김명배, 『해방후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사-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1960-1987』(북코리아, 2009).
조이제, 『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03).
NCCK 인권위원회, 『1980년대 민주화운동 Ⅵ-Ⅷ』(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

증언·회고

강원용, 『역사의 언덕에서 4, 미완성의 민주화』(한길사, 2003).
여해와 함께 엮음, 『사이·너머』(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김상근, "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인권민주화 운동에 나섰나?," 「내일을 여는 역사」 26호(2006.12).
김상근, "김상근 목사의 민주화·통일 운동 이야기," 「한국기독교와 역사」 52(2020.3).
"창간특집대담 인권위원회의 역사와 인권운동의 전망," 「월간 인권」 창간호(1992.3).

❒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학술심포지움 '5.18민주화운동과 기독교' 제4토론 (2020. 9. 5)

# "5·18민주화운동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논문을 읽고

**박현정**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논문요약>**

이 논문은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의 발발당시와 그 이후 1980년대 초반 진상규명투쟁의 과정을 철저히 외면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의 자기반성으로 시작해서 자기반성으로 끝낸다. 이런 기조로 이 논문의 목적은 교회협이 1980년대 생산했던 문서들을 바탕으로 첫째, 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교회협의 초기 대응이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되었는지 둘째, 교회협이 그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시기별로 구분하여 밝히고 있다.

**교회협의 초기대응 실패(1980~1983)**

1980년 1년 동안 교회협의 활동을 알 수 있는 1981.2.27.자 교회협 제30회 총회 자료집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언급이 전혀 없다. 즉 1980년 교회협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활동이 전무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교회협 인권위원회는 광주에서 항쟁이 진행중이던 1980.5.26. ① 5.28. 인권위원회와 교회와사회위원회 연석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연석회의 결과를 실행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 ② 현 시국과 구속중인 인사들에 대한 문제를 위해 당국자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것, ③ 광주사태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그 위원으로 임원진과 권성오, 오충일 위원을 포함하는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5.28로 계획된 인권위원회와 교회와사회위원회의 연석회의는 당국의 집회불허로 무산되고 광주사태 대책위원회도 공식적으로 조직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다만 7.4. 인권위원장 조남기와 사무국장 이경배가 전두환과 면담을 진행하여 연행자들의 소재 확인 및 면회 요청, 광주사태에 대한 교회의 관심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인권위원회는 오월항쟁이 진압된 이후인 1980.6.4. 오충일 목사와 이경배 사무국장을 광주로 파견하여 진상을 알아오게 한 다음 실행위원회에 보고하려 하나 교회협의 대표회장이었던 강원용 목사는 공식 안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고를 제지한다. 회의법에는 타당한 결론일지언정 광주의 외로운 죽음을 끝내 외면한 교회협의 오점이었다. 그 후 1980.11.25. 강원용 목사가 전두환의 국정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그의 진심이 무엇이었든 광주시민의 목숨을 앗아가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전두환의 집권야욕에 교회협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80년 5월 광주항쟁에 대하는 교회협의 이런 결정은 두고두고 비판받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후 교회협의 활동(1984~1987)**

1) 진상규명 사업

교회협이 5·18민주화운동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계기는 4년이나 지난 1984.7.5. 인권위원회가 광주사태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임원회에서 김상근, 오충일, 금영균으로 구성결의 한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1987년 1,000쪽이 넘는 분량으로 다양한 사료를 취합·정리한 『1980년대 민주화운동』(전3권)을 출판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이 조사보고서는 향후 출간되는 자료집 등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2)외곽단체 설립

1983년 7월 재발행되기 시작한「인권소식」148호의 기사에 따르면 1985.4.26. 박형규와 조남규를 의장으로 하는 '전국기독자 민주쟁취대회'는 '5월광주민중항쟁기념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에 조아라, 부회장에 고영근·유연창, 총무에 강신석·이해학을 선임하였다. 이 기념위원회는 1985.5.10. 광주의 피는 보상받아야한다-5월 광주민중항쟁 이어받아 민주쟁취 이룩하자는 제목으로 8가지의 주장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3) 성명서 발표

1985년 인권문제 전국협의회는 '85년도 인권선언'과 '광주의건 5주년에 즈음한 성명서' 두 개를 발표하였다. 즉 1985년에 이르러서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성명서가 발표된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을 마치면서 어찌되었든 한국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인 5·18민주화운동에 교회협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없으며 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으로 규정하고 다행히 2020.5.7. 교회협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고백과증언국민운동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결의하였으니 향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논찬>**

논찬자는 기독교인도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기독교 혹은 기독교연합단체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논문을 읽었고, 낯선 용어들에 읽어나가기가 어려웠음에도 교회협이 이렇게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무관심했었다는데 내내 놀라움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한다. 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는 나이, 직업, 성별, 종교를 떠나 많은 광주시민이 계엄군의 과잉진압에 무참히 죽고 쓰러졌다. 신군부는 '계엄의 전국확대'로 박정희의 사망이후 그동안 억눌렸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짓밟았고 이를 반대하는 광주시민을 오랫동안 계획해온 충정작전에 따라 무차별 진압했다. 단지 대학생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이 쓰러져가고 그것을 말리는 노인들에게도 역시 진압봉과 대검이 사용되었다. 급기야 5.20 광주역 시위도중 계엄군의 발포에 사망한 2구의 시신은 광주시민을 공분케 했고 5.21 도청앞으로 몰려간 광주시민을 향해 11공수는 집단발포로 대응했다.

수많은 희생자와 부상자 중에 기독교인도 있었고 이 항쟁을 수습하기 위해서 조직된 시민수습대책위원회에는 여러 개신교계 목사님들이 포함되었다.[254] 수습위원회 참여가 개인의 결단이라면 광주지역 개신교계에서도 교파연합 및 개별교단 등의 차원에서 수습이나 구호활동에 참여한 사례가 있다. 1980.5.19. 광주제일교회(예장통합)와 광주중앙교회(예장합동)에서 소속교단 광주전남 노회대표들이 대책을 논의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된 회의 끝에 5.23 광주의 15개 교파 200여 교회 62명의 목사장로들이 김신근 목사(광주제일교회, 성결)를 위원장으로 '광주시기독교수습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날 위원회는 시민수습대책위원회에 김길현 등 7명의

254) 1980년 5월 당시 광주지역 개신교인의 수습위원회 참여 현황에 대해서는 한규무, "5·18민중항쟁과 광주·전남지역 개신교계",「한국기독교와역사」37호(2012.9), 184-190.참조

목사 파견 및 구호금 1천만원의 헌금을 결의했다.[255] 한규무(2012)는 5·18당시 기독교계가 입은 피해를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국립5·18묘지에 안장된 '유공자' 670명의 묘비를 살펴본 결과 십자가나 세례명이 있는 경우가 136건인데 이들 중 21명이 5·18기간 중, 그 후 5·18기간 중 입은 부상으로 1980년대 사망한 기독교인이 25명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현 시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종교를 가리지 않고 전염되듯이 1980년 당시 계엄군도 종교를 상관하지 않고 무차별 살상을 저질렀다. 이에 광주의 개신교 목사들과 개신교계는 계엄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고 광주시민의 희생을 애도하며 수습위원회를 꾸려 수습 혹은 구호를 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희생마저도' 외면한 1980년 5월 교회협의 무관심과 전두환의 국정 자문위원 자리를 승낙했던 대표회장의 결정은 고립되어 외로운 투쟁을 해야 했던 광주와 기독교인 모두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의 아픔을 외면한 것이 과연 교회협뿐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타종교계는 1980년 5월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사실 5·18과 종교 혹은 5·18과 종교별 연합조직의 활동상황을 정리한 논문은 쉽게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나마 눈에 띄는 자료는 5·18기념재단이 2006년부터 5·18항쟁 관련자들의 구술채록사업을 진행하면서 출간한 구술자료집 중 2013년 천주교편(27명의 사제와 신도들), 2015년 개신교편(21명), 2016년 불교·원불교편(15명)이다. 그런데 종교별 명망가 혹은 신도들의 구술내용만 그대로 기재했을 뿐 5·18과 각 종교의 상관관계 등은 전혀 정리되지 않았다. 다만 항쟁 당시 개인적인 활동상황들과 종교인으로서의 고뇌, 그리고 항쟁 당시 사망한 분들에 대한 종교별 추모사업 진행과정 등은 비교적 잘 드러나 있다.

논찬자가 찾은 몇 개의 논문과 언론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80년 5월 당시 천주교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다. 윤선자[256]에 따르면 계엄군의 진압이 시작되자 5.21 광주지역에 있던 9명의 사제들 중 8명이 호남동성당 사제관에 모여 평화행진을 계획하였고, 윤공희 대주교, 김성용 신부를 비롯한 많은 신부들이 수습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개신교계 목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활동하였다.[257]

그러나 교회협이 침묵했던 것과 다르게 5.23. 한국 천주교회 주교단은 '광주의 불행한 사태에 대해' 전국 신자들에게 단식과 특별기도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5.24 이억민 군종신부를 통해 김수환 추기경의 위로메세지와 구호대책비 1,000만원이 전해졌다. 범교회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이 강구되기를 희망하였기에 김수환 추기경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유감표시가 전부였던 것은 광주의 진실을 외부로 알리고자 했던 눈물겨운 호소에 비하면 아쉬운 지점이다. 항쟁이 종료된 후인 1980.6.2.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규하 대통령에게>라는 공한을 통해 광주시민을 위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1980.6.25. 김수환 추기경은 담화문 <6·25동란 30주년을 맞이하여>를 발표하면서 "광주사태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실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255) 그런데 이 위원회는 5.26 '광주시기독교비상구호위원회'로 개칭하고 위원장과 총무를 각각 한완석과 방철호목사로 교체했다. '수습'에서 '구호'로 바뀐 것은 '구호'에 초점을 맞추어 보수·진보 교파간의 마찰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위원회는 시민수습대책위원회에 사망자의 장례비로 100만원을 전달했다. 한규무, "5·18민중항쟁과 광주·전남지역 개신교계", 「한국기독교와역사」 37호(2012.9), 196-198.

256) 윤선자,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종교계의 역할-천주교회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인권」 2(1)(2002.4),

257) 다만 개신교계 목사들이 관변성격을 띠는 도청 측 수습위원회에 주로 참여한 반면, 천주교계 신부들은 재야성격을 띠는 남동성당 측 수습위원회 활동을 하였다.

5·18과 불교의 역할 또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5·18당시 광주지역 스님들과 불자들의 개인적인 활동도 개신교나 천주교에 비해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1980.5.21 석가탄신일을 맞아 각 절에서 봉축행사를 준비 중에 도청 앞 집단발포로 수많은 시민이 죽음을 맞은 것은 살생을 금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비되는 순간이었다. 이에 5.27 도청에서 사망한 김동수 불자를 비롯한 진각스님, 성연스님 등이 항쟁에 적극 참여한 계기가 되었다.

언론보도[258]에 따르면 5·18 기간 종단차원의 대응은 조계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총무원장 취임20여일 만에 광주소식을 접한 월주스님은 5.24. 선발대격으로 '소요사태 진상조사 선무단'을 광주에 파견하고 본인도 광주에 갈 것을 결정하였다. 이 정보를 파악한 종로경찰서장이 만류에도 월주스님은 광주행 결정을 굽히지 않았고 5.30. 광주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민돕기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상자와 그 유족을 위로하고 광주시민을 돕는데 앞장서자'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6.3. 월주스님을 비롯한 6명의 방문대표단은 광주에 도착하여 오전 11시 관음사에서 천도재 입재를 봉행하고 정시채 부지사에게 사태수습과 위로금으로 사용하라며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후 1980.10.27. 새벽 계엄사 합수부는 불교계 정화라는 미명하에 월주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을 강제연행하여 고문과 폭행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법난을 일으켰다.[259]

논찬자가 기독교나 교회협에 대해 전무(全無)한 지식으로 필자의 논문을 비평하기에는 한참 모자라지만 오히려 외부자의 시각으로 타종교와 비교해보니 1980년 5월 교회협의 무관심과 냉대가 오히려 두드러지는 듯하다. 그런데 한국사회 내 종교계에서는 오랫동안 거대 권력집단으로 성장해온 기독교가 광주시민의 아픔과 진실에 대한 호소를 외면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앞으로도 내내 잊지말고 되새겨야 할 역사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이런 과거를 되짚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필자의 논문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260]

---

258) "〔5.18과불교〕5.18당시 불교계의 대응은" 「현대불교신문」 2020년5월25일자.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406, 2020.8.26. 접속.

259) 2007.10.25.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0·27법난이 신군부 세력에 비우호적인 조계종 월주 총무원장과 그 집행부에 대한 신군부와 문공부의 부정적 평가에서 시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국무총리소속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원회 백서』에서 재인용 2016. 38-46)

260) 하지만 개신교계 내부의 권력구조나 수많은 갈등구조에 대한 이해가 미천한 결과 어설픈 지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뒤늦게 엄습하기도 한다.

❒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학술심포지움 '5.18민주화운동과 기독교' 제5발제 (2020. 9. 5)

# 실천자원으로써의 5·18
# : 5·18전후 광주YWCA/YMCA의 변화

**유경남**
(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1. 머리말
2. 운동 공간으로써 Y
3. 5·18항쟁의 거점으로써 Y
4. 5·18항쟁 이후 Y의 변화
5. 맺음말

날 때부터 고아는 아니었다
내 죄 아닌 내 죄에 얽매여
낙엽 따라 떨어진 이 한목숨
가시밭길 헤치며 살았다
상처뿐인 내 청춘 피눈물 장마

배고플 땐 주먹을 깨물었고
목마를 땐 눈물을 삼켰다
의리로써 맺어진 우리사이
목숨가지 바치며 살았다
상처뿐인 내 청춘 피눈물 장마

아 누구의 잘못 인가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 누구의 잘못 인가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구전가요 '고아'
- 5월 27일 광주 YWCA에서 산화한 박용준 열사가 즐겨 불렀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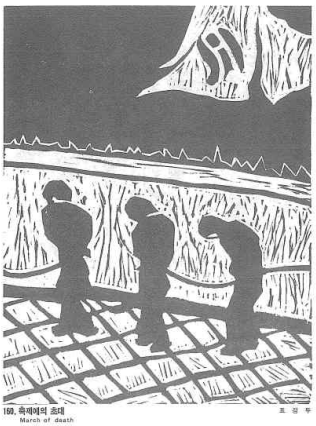
## 1. 머리말 : 항쟁 이후 항쟁으로 인한 사회적 동학

5월 27일 광주 YWCA에서 생을 마감한 박용준 열사는 고아였다. 박용준은 1956년 7월 6일 태어나 7월 15일 광주영신원에 입소하여 1964년 4월 28일(초등학교 3학년) 무등고아원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고아'라는 사회적 신분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시절 그에게 가난과 고난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했다. 다행히 그는 서경자 원장(당시 광주YWCA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조아라 광주 YWCA회장 및 신협 이사들과 관계자들의 특별한 배려로 1973년 11월 24일 교도직(조합원 방문 교육 및 수금활동)으로 YWCA신협에 입사할 수 있었다. 그는 1978년 김영철이 YWCA신협에 참사로 합류하면서 광천동 김영철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1980년 5·18항쟁이 발생하자 박용준은 YWCA에서 활동하는 선전팀과 함께 홍보물을 제작했고, 5월 27일 YWCA에서 사망했다.[261)]

고아 박용준은 왜 항쟁에 참여 했으며, 5월 27일 죽을 것을 알고도 YWCA에 남았을까? 우

261) 박용준의 생애와 관련하여 박혜강, 2010, 『5월의 불사조 박용준』, 광주YWCA를 참조하였다.

리는 5·18항쟁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질문들과 마주하게 된다. 이것은 5·18에서의 그들의 행위가 가능했던 원인과 배경(매커니즘)을 묻는 질문으로, 5·18이전 또는 5·18 당시 사건들(삶과 행위)을 살펴보고 분석하게 한다. 예컨대, 박용준이 즐겨 불렀다는 구전가요 '고아'는 5·18 당시 그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경로 중 하나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5·18항쟁의 경험은 항쟁 이후의 삶에 어떠한 원인과 배경(매커니즘)으로 자리 했을까? 1980년 광주 대동고학생이었던 표정두는 1987년 3월 서울 세종로 부근에서 "내각책임제 개헌반대, 장기집권 반대, 군사독재타도, 광주학살 원흉차단" 등을 외치며 분신했다.[262] 그에게 5·18항쟁은 무엇이었을까?



표정두 열사가 남긴 판화작품(1985년 광주시민미술학교) - 출처 :『나누어진 빵』(1986)

이렇게 박용준과 표정두의 삶과 죽음은 '5·18항쟁이 그들의 삶에서 무엇(어떤 경험)이었을까?' 묻게 한다. 이에 본 글은 5·18항쟁이 항쟁 전후 개인과 집단의 실천행위에 어떤 요소로 작용했는지 묻고 그 답을 찾고자 한다. 특히, 기독교의 사회운동에서 5·18항쟁의 역할에 대해 천착하고자 한다.[263]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5·18항쟁 및 이후 오월운동의 맥락에서 종교계의 역할과 활동을 다루었다.[264] 천주교계의 경우 역할과 활동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몇몇 있고,[265] 개신교계의 경우 그렇게 많지 않다.[266] 그런데 이들 연구는 '교계'를 중심

262) 표정두 열사(1963. 4. 1)는 광주 대동고등학교에 재학 중 5·18항쟁과 관련하여 정학을 당하였고, 83년 호남대에 입학, 군복무 후 85년 복학, 광주시 무등교회에서 야학교사로 지내며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했다. 87년 3월 8일 사망하여, 3월 10일 기노련·카노청 주최로 추모식이 치러졌다. 3월 14일 광주YMCA에서 추모식을 갖기로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무산되었다(<진실>, 한국기독노동자전남지역연맹, 1987년 4월 1일자).

263) 여기에서 사회운동은 일찍이 막스베버가 논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동일한 신념체계를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변혁을 촉발시키기 위해 함께 행동하게 된다"는 현상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논의는 '신념체계는 어떻게 발생하며, 지지자를 획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신념체계는 어떻게 그것을 믿는 신뢰자의 행위를 구속하게 되고, 도한 신념체계와 그것을 축으로 해서 형성된 집단은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고 일상화되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찰스 틸리, 진덕규 역, 1995,『동원에서 혁명으로』, 학문과 지성사, 74~70쪽)

264) 정호기는 5·18과 종교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신학적 또는 철학적 접근, 역사학적 접근, 사회·정치학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정호기, 2013, "천주교회의 5월운동과 사회참여:1980년대 전남지역의 활동을 중심으로",『신학전망』182, 10~11쪽).

265) 윤선자, 2002,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종교계의 역할: 천주교회를 중심으로",『민주주의와 인권』2-1, 전남대5·18연구소.

으로 항쟁과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그 내부의 동학을 설명하는데 성과가 있지만, 교계에서 파생되거나, 항쟁이 교계에 끼친 영향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한 사례로써 광주지역의 YWCA/YMCA을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 5·18항쟁시기 YWCA와 YMCA는 항쟁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였다. 이에 5월 27일 계엄군의 진압작전의 주요 대상지 중 YWCA가 포함되었고, YMCA의 경우 항쟁시기 25~26일 사이 '시민군의 무장훈련'이 이루어진 장소이기도 하였다. 항쟁사[史]의 전개과정에서 이렇게 YWCA와 YMCA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5·18항쟁 시기 이 기관들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5·18항쟁 이후의 항쟁의 영향에 대한 연구 역시 없다.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앞서 소개한 박용준, 표정두의 사례에서처럼, 개인의 행위가 가능했던 요소로써, 광주의 Y-단체가 5·18항쟁을 전후하여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 변화는 이후 어떤 행위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천착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항쟁사[史]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항쟁 이후, 항쟁으로 인한 사회적 동학'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은 찰스 틸리의 집합행위 이론을 통해 당대의 사회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어떠한 집단/집합의 행위는 이해(interest), 조직(organization), 동원(mobilization), 기회(opportunity) 및 집합행위로 구성된다. 이해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의 상호행위관계에서 보게 되는 이익과 손실을, 조직은 집단이 이해를 얻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집단의 구조적 양상(특징), 동원은 집단행동에 필요로 하는 자원(노동력, 재산, 무기, 선거원 또는 공유된 이해의 추진에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 집합적 통제력을 획득해가는 과정과 그것을 집합행위에 이용하는 방법, 기회는 특정 집단과 그 집단의 주변 세계와의 관계변화를 말한다(찰스 틸리, 1995; 25).

이와 같은 집합행위는 공유된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연대된 행동으로 이해, 조직, 동원, 기회가 서로 조합된 결과이다. 특히 사람들은 집합행위가 일어난 바로 그 시점에서 집단이 현실적으로 이용했던 그 기회를 다시 재현해서 생각한다. 따라서 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정의 목적의식과 권리의식은 그 집단의 행동 방향을 규정하게 되며 참가자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찰스 틸리, 1995; 26~80). 그렇다면 5·18항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전후하여 사람들의 집합행위는 항쟁을 어떻게 구성(이해)했으며, 항쟁이후의 집합행동을 구성하는데 동원자원으로써 어떻게 기여했을까? 다시 말해, 항쟁 시기 YWCA와 YMCA가 항쟁의 집합행동을 구성하는 조직과 자원으로 그 역할을 했다면, 항쟁이후 "항쟁의 경험은 YWCA와 YMCA의 집합행동에 어떠한 이해, 조직, 동원, 기회"가 될 수 있었을까?

이와 같은 사회학적 질문을 가지고 본 논문은 1980년 5·18항쟁을 전후하여 YWCA와 YMCA의 사회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자료를 검토·분석하였다.[267]

---

윤선자, 2012, "한국천주교회의 5·18광주민중항쟁 기억·증언·기념", 『민주주의와 인권』 12-2, 전남대 5·18연구소.

서중석, 2012, "광주항쟁과 천주교회의 진실 알리기", 『神學展望』 178, 광주카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정호기, 2013, "천주교회의 5월운동과 사회참여:1980년대 전남지역의 활동을 중심으로", 『신학전망』 182, 광주카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66) 한규무, 2012a, "5·18민중항쟁과 광주·전남지역의 개신교계", 『한국기독교와 역사』 3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규무, 2012b, "5·18민중항쟁과 1980년대 광주·전남 개신교계의 동향", 『역사학연구』 47, 호남사학회.

267) 처음 본 연구를 시작함에 있어 광주 YWCA와 YMCA에 대한 구술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대면 몇 현지 조사가 불가능하여 기존의 자료를 검토하는데 그치는 문제점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즈 : 광주 YWCA/YMCA 관련 자료
· 전남대5·18연구소 소장자료 : 광주 YWCA/YMCA 관련 자료
· 5·18기념재단, 2015,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7 - 개신교 편』, 5·18기념재단[268]
· 국사편찬위원회, 2006, "5·18을 경험한 여성들의 정치활동과 삶의 변화", 2006년도 구술자료수집사업 - 이윤정, 정현애, 안성례
· 광주YWCA 70년사 편찬위원회, 1992, 『광주YWCA 70년사』, 광주YWCA
· 광주YMCA, 2010, 『광주YMCA 90년사 1920~2010』, 광주YMCA 역사편찬위원회

## 2. 운동 공간으로써 Y

1970년대 한국의 기독교는 운동의 공간이었고 훌륭한 지원자였다.[269] 광주지역 민주화운동의 경우에도 개신교계의 민주화운동은 1970년 이후 긴급조치 상황에서도 계속되었다. 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광주에서는 1976년 8·10사건, 1977년 1월 12일 부활절사건, 1979년 광주YWCA사건 등이 주요 사건이었다.

먼저 8·10사건은 1976년 8월 10일 광주 양림교회에서 열린 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 임시노회에서 3.1민주구국선언(일명 명동사건)을 지지하며, 유신헌법 철폐 등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발표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조홍래, 강신석 목사 등 10여명이 연행되었고, 조홍래, 강신석, 임기준, 윤기석 목사가 구속되었다.[270] 1977년 1월 12일에는 광주에서 기독청년, 기장청년대회가 있었는데, 광주양림교회에서 앞서 8·10사건으로 구속된 목사들의 석방을 위한 신앙 강좌를 열었다가 목포의 이철우, 안철 등이 연행되었다.[271] 동년 4월 4일 전남지구 기독청년협의회는 광주 YMCA소강당에서 '사회정의'와 '자유', '평화' 그리고 '해방'의 메시지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 및 자유민주주의, 선교의 자유, 구속 인사 석방 문제 등이 언급되었으며, 결의문을 낭독한 조봉훈(전남지구 기독청년협의회 총무)은 배호정과 함께 연행되었다.[272]

조봉훈은 1978년 6월 말 전남대학교 교수 11인의 의해 발표된 '우리의 교육지표'를 지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에도 참여했는데, 유인물의 복사를 광주YMCA에 부탁하여 당시 김경천 간사가 긴급조차 9호 위반으로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273] 이렇게 교계의 민주화운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 모임 및 기독교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이루어 졌다. 1979년 11월 24일 YWCA 위장 결혼식 또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은 10·26 이후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

268) 본 논문에서 별도의 각주가 없는 증언자료는 5·18기념재단의 증언집을 인용한 것이다.
269) 조배원, 2003, "기독교 사회참여운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기독교 사회참여운동관련 문헌해제』(연구총서 최종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70) 강신석의 증언(5·18기념재단 편, 2015, 『5·18의 기억과 역사7 - 개신교 편』, 5·18기념재단)
271) 이철우의 증언(5·18기념재단 편, 2015, 『5·18의 기억과 역사7 - 개신교 편』, 5·18기념재단)
272) 5·18기념재단 편, 2015, 『5·18의 기억과 역사7 - 개신교 편』, 516쪽.
273) 1978년 6월 27일 발표된 '우리의 교육지표'는 박정희 정권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서였다. 본래 전국의 대학교수들의 연대 서명을 계획했으나, 사전에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성내운 교수가 전남대 교수 11명의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송기숙, 명노근(YMCA 이사) 등 11명의 교수들을 연행되었고 해직되었다. 광주지역 대학생들은 교수들의 연행에 항의하는 지지시위를 7월 1일까지 벌이며 많은 학생들이 구속·징계를 받았다.

출하려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발표에 반발하여 윤보선, 함석헌 등의 주도하에 서울 YMCA 회관에서 개최되었던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였다. 민주화운동 세력은 군부와 경찰의 감시를 피하고자 결혼식으로 가장하여 모임과 시위를 준비하였고,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행·구속되었다. 광주에서는 11월 28일 이 시위를 지지하는 시위를 지역 개신교계 인사들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광주YWCA연합기도회, 광주기독교연합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남해직교수협의회, 자유실천 문인 협의회전남지부, 민청협 전남지부 등 공동명의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거반대와 민주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명노근 등 12명이 연행되었다. 애초에 YWCA에서 발표하고자 했던 성명서는 경찰의 감시와 방해에 의해 YMCA 로비에서 이루어졌다.

> 운동 중심지였고, 그야말로 공회당이고 사랑방이었어요. 민중논단이라든지 민주화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Y에서 다 했어요. (김경천의 증언)

> 공식적인 것들은 기도회 정도, 화요기도 수요기도회 이런 거를 했고. 당시에는 대중 집회가 아니고는 어떤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없었어요. 민중논단이라는 프로그램이 2개월에 한번씩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라성 같은 강사들을 모셨는데 YWCA가 뭔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실비만 받고 오셨는데 돌아가신 서남동 교수님, 문익환 목사님, 김동길 교수라든지 고영근 목사님, 조화순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강사로 연설을 모셨는데. (양현숙의 증언)

> 고등학교 3학년 78년 77년 이 때 유신 말기 군사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대학교 해직교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해직 교수들이 광주에 강연하러 많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문익환 목사님을 비롯해서 함석헌 선생님, 김동길 교수, 한완상 교수 그런 해직 교수님들 광주에 와서 YWCA나 YMCA에서 민중논단하고 강연회 한다고 하면 학교 공부보다는 그런 강연을 좋아했어요. (장헌권의 증언)

> 72년부터 YMCA 최연소 이사. 76년 '광주양서협동조합'이란 것을 만들었어요. 이사가 이일영 선생, 문병란, 나, 박석무, 장두석. 책을 한 천여 권 모아다가 YWCA 2층에 사무실을 정해놓고 젊은 사람들 책을 읽히는 작업을 했어요. 비밀리에 후원회원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중고등학교 교사, 대학교수들 또는 의식 있는 기업인들 참여. 장두석 상임이사. 적게는 10개 많게는 20여 개의 독서클럽을 계속 지도했습니다. (중략) YWCA총무실은 언제나 개방이 돼있기 때문에 가장 거리낌 없게 들어 다닐 수 있었죠. 우리 또래들로서는 나, 나보다 좀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박석무군 이런 친구들이 매일 들락거리면서 정보도 줍고 그기를 가야 서울 소식도 알 수가 있었고, 이쪽 소식을 서울로 옮길 수도 있었고. (윤영규의 증언)

당시 광주YMCA/YWCA가 지리적으로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한 시내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계 민주화운동 인사들이 출입하고, 활동하는 주요 무대로, 민주화운동의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도 했다. 증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970년대 유신과 긴급조치 상황 속에서 Y는 사회 참여 프로그램들을 신설하였다. YMCA의 경우 한국YMCA의 민주적 비판의식의 함양과 방향을 같이 하며, 1971년 '시민논단'을 개설하였다. 광주YMCA의 시민논단은 군사독재시대, 통제된 언론이 담아내지 못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소통하였고,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사회정의의 물꼬를 튼 프로그램이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신학강좌'와 함께, 금기시 되었던 '새마을 운동의 문제점', '남북회담', '역사참여', '사회참여', '역사의식', '평화문제' 등의 용어들을 화두로 제시하였다.[274]

광주YWCA는 1970년대 중반부터 <어머니 대학>, <수요강좌>, 청년을 위한 <화요강좌>, <근로여성교육> 등 사회교육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1978년 12월에는 <YWCA동계대학>을 개설하여 명노근, 문병란, 이홍길 등 해직교수들을 초빙하여, 회원들의 의식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강연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였다. 증언에 나오는 YWCA의 민중논단의 경우 1978년 6월 19일 서남동 교수의 "성령과 민중"이라는 강연을 시작으로 5·18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완상(민중의 의미와 역사발전에의 참여; 1978. 9. 29), 문동환(기독교의 의식화; 1979. 3. 15), 현영학(기독교와 민중문화; 1979. 6. 26), 송기숙(민중문학과 문학의 보편성; 1979. 9. 27), 문익환(민중의 하나님; 1980. 4. 14) 등 6차례의 강연이 있었다.[275]

이렇게 광주YWCA/YMCA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 의한 지배정책이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배에 균열을 일으키는 '틈'이 되어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원으로써 공적 공간이 되어 주었다. 특히 1974년 11월 5일 Y연합회는 전국 15개 지방Y별로 '구속자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여 기독교인의 사회적 참여를 강조하였는데, 광주 YMCA, YMCA, NCC, 전남자유수호위원회의 4개 단체가 주관하여 그해 10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YWCA 강단에서 '목요기도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계기를 구속자를 지원하는 여성들의 모임인 '송백회'가 만들어지기도 했다.[276] 또한 위의 증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광주양조협동조합'이 YWCA 회관 2층에서 운영되어, 김상윤이 운영하는 녹두서점과 함께 지식운동의 거점으로 서울(중앙)과 광주(지역)를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1980년 5·18항쟁 당시 선전활동을 벌였던 '광대'라는 연극반이다. 유신과 긴급조치의 상황에서 대학 내 서클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았다. 이에 광주YMCA와 YWCA가 대학생들의 서클활동의 '보증인'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다. 1977년 '광주YMCA 가면극회'는 YMCA의 연습장소를 사용하다가 '전남대 민속문화연구회'로 소속이 변경되었다가,[277] 1979년 1월 광주YWCA의 탈춤공연을 위한 연극반 '광대'가 되었다. 광대 창립 일원이었던 김태종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광대는 광주YWCA 소속이었고 고정희, 이윤정 간사가 일종의 서클의 보증인 역할을 해주었다고 한다.[278] '광대'는 1980년 3월 광주YMCA 무진관에서 "돼지풀이"를 공연하였다. '돼지풀이'는 양림동에 거주했던 작가 황석영과 단원들이 공동작업하여 '돼지가 많이 사육되고 있으나 사회적 여건상 손해를 본 농민의 심정'을 풍자한 마당극으로 지역민들의 폭넓은 호응을 받았다. 이후 '광대'는 황석영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한씨연대기"의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광주YWCA 2층에 모여 있다가 5·18항쟁을 맞는다.

---

274) 『광주YMCA 90년사』, 343~346쪽. 1978년 5월 16일에는 성내운 교수가 "청소년시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275) 『광주YWCA 70년사』, 157~164쪽.

276) 이윤정의 증언에 의하면 송백회는 광주YWCA 조아라 회장과 이애신 총무 그리고 문병란 교수와의 협의를 통해 출발하였고, 민청학련 구속자의 부인, 기장 계열 목사님의 사모님이 주로 참여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2006, "5·18을 경험한 여성들의 정치활동과 삶의 변화", 2006년도 구술자료수집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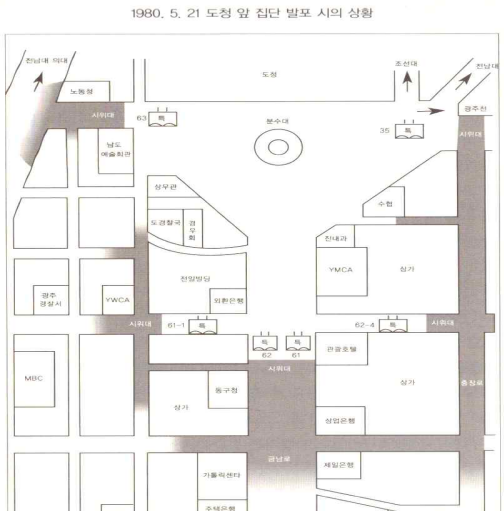
277) 『광주YMCA 90년사』, 362쪽.

278) 1979년 겨울, 수배 해제된 김선출, 김윤기가 대학으로 돌아오면서 마당극 운동의 발전을 위한 본격적 논의가 진행된다. 그리하여 1980년 1월 전남대 '민속문화연구회'와 '전대극회'가 중심이 되고 조선대 '탈춤반'과 전남대 '국악반'의 일부 회원이 결합하여 극회 '광대'를 결성하였다.

## 3. 5·18항쟁의 거점으로써 Y

> 광주의 YMCA와 YWCA는 대표적 기독교 사회단체이며, 시민수습대책위원회에 참여한 김천배·명노근·이성학·이영생은 광주YMCA 이사였고, 강신석·윤영규도 그 임원이었다. 그 때문에 이들은 5·18 이후 체포·수배·투옥·고문 등의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 또 조아라와 이애신은 광주YWCA의 회장과 총무였으며, 그 간사인 김경천도 5·18로 수배되었고, 회원인 김선옥(전남대 음대)은 학생수습위원회에 참여했다. 특히 광주YMCA는 전남도청과 함께 수습과 항쟁의 근거지 역할을 했다. 수습 및 항쟁을 위한 각종 회의와 집회가 여기서 열렸으며, 민주시민투쟁위원회도 여기서 조직되었다. 광주YWCA는 "송백회원과 광천동의 들불야학팀, 극단 광대팀, JOC 여성노동자들이 합류하여 항쟁지도부가 상주하였던 전남도청과 더불어 '또 하나의 항쟁부'로 자리잡았"으며, 여기에 모인 이들은 "가두홍보조·모금조·리본조·대자보조·궐기대회준비조·취사조 등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벌였다.[279]

1980년 5월 17일 24:00 계엄포고령 10호를 계기로 시작된 전국비상계엄령은 계엄군이 전국의 대학을 장악하고, 민주인사 및 학생운동 인사들에 대한 예비검속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전북대 이세종 학생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에 시달려야만 했다. 광주에서는 전남대 정문에서 계엄군과 학생들의 충돌을 계기로 5·18민중항쟁이 발생하였다. 계엄군은 광주시민들의 항쟁을 폭력으로 진압하며 165명의 사망자와 수백(천)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이 시기 개신교계의 활동은 위의 제시문과 같이 기존의 연구를 통해 그 사실관계들이 밝혀지고 정리되었다. 그러나 시민들이 왜 광주YWCA를 항쟁의 거점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이후 광주YWCA가 항쟁의 거점으로 인식되는 반면에 광주YMCA는 비교적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그림> 1980. 5. 21 도청 앞 집단 발포 시의 상황
(출처 :『기억하는 자의 광주』(2010), 290쪽)

279) 한규무, 2012a, 5·18민중항쟁과 광주·전남지역 개신교계",『한국기독교회와 역사』37, 199쪽.

그러나 위의 <그림>을 참고하여 계엄군의 진압과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지는 '금남로'의 현장성을 고려하면, "금남로"라는 큰 길 가에 위치했던 광주YMCA의 경우 '문을 열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280] 반대로 광주YWCA의 경우 금남로에서 안쪽으로 조금 들어간 곳에 위치하였고, 항쟁의 중심 거점이었던 전남도청과 가까웠기 때문에 아래 양현숙의 증언처럼, 회관 내 강당과 식당을 항쟁의 자원으로 사용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김경천의 증언처럼 광주YWCA를 운영했던 조아라, 이애신 등이 '암묵적'으로 그들의 활동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개신교계의 윗세대들이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한 '수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반면에, Y-단체를 매개로 관계를 맺고 있던 김영철, 박용준(이상 광주YWCA 직원), 윤상원과 '광대'·'송백회'와 같은 비교적 젊은 세대들은 선전·홍보활동 및 적극적인 저항활동을 YWCA를 중심으로 벌였다.

> 5월 16일경에 YWCA 총무실에서 홍남순 변호사님하고 이기흥 변호사, 이성학 장로님하고 언성을 높이면서 막 서로 좀 부딪히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전선조직을, 국민연합인가 띄우자고 했는데. 윤한봉 선배가 나를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연합을 하게 되면 기독교 쪽에서 네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위원장은 우리 윤상원이가 맡는다. 홍남순 변호사님은 '시기를 두고 보자'며 신중론을 펴셨고, 이성학 장로님은 '이럴 때일수록 싸워야지 보고, 지켜보고만 있냐' 그러다가 다툼이 있었죠. (이철우의 증언)

> 청년대학생들이 항거를 했고 YWCA에서는 대자보, 홍보지, 전단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식사를 해결하고, YWCA가 적격이었던 것이 식당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백 명씩 결혼하는 사람들의 식사도 제공할 만큼 식당 체계가 유지가 됐었죠. (양현숙의 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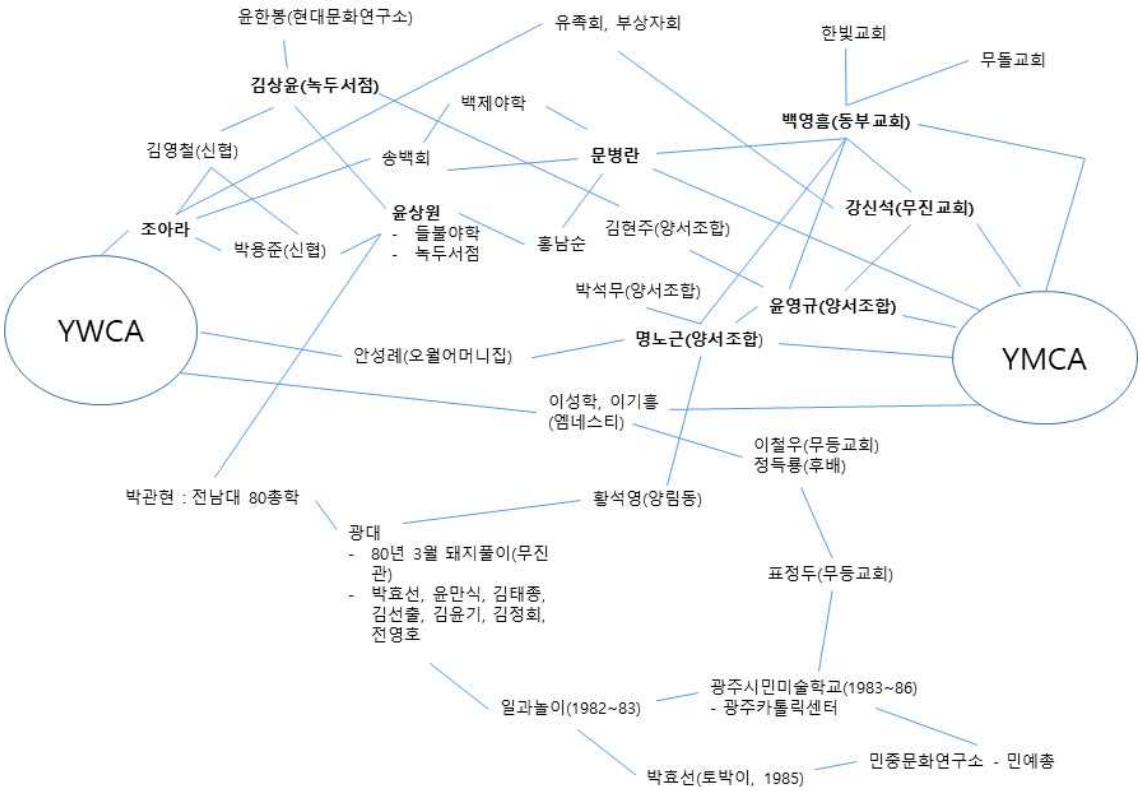
>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 일은 없어요. 그때 하도 살벌하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허락을 받고 하지 않아. 자기들 마음대로 와서 요것도[등사판] 긁어버리고 시민군 훈련도 시 카고, 밥도 하고 그라는데. 조아라 회장님은 마음으로 그걸 허용을 했어요. 우리가 직접 밥을 한다든지 시민군 훈련을 시킨다든지, 등사판을 긁는다든지 한건 아니고 출퇴근하는 식으로 와서 여기 저기 돌아다니고. 암묵적으로 그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일을 할 수 있었지. (김경천의 증언)

이렇게 항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에서, 사람들은 개인의 활동과 이해관계에 따라 우발적인 계기를 통해 항쟁에 참여하였다. 예컨대 5월 18일 카톨릭 노동 청년회와 광주YWCA가 준관하는 여성 노동자 교육이 광주 사례지오 고등학교와 광주YWCA 강당에서 열렸고, 5월 19일 함평고구마사건 2주년을 기념하여 전농대회가 광주카톨릭센터에서 예정되어 있었다. 서강대학생 김의기를 이 행사에 참석하러 광주에 왔다가 항쟁을 목격하고 서울에 돌아가 5·18항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사망하였다. 위의 이철우의 증언에서처럼 홍남순, 윤한봉, 윤상원 등은 1980년 '민주화의 봄'의 맞이하여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준비하는 각자의 위치에서 항쟁을 마주하였다. 홍남순은 수습대책위원회에 참여하였고, 윤한봉은 도피하여 미국으로 망명하였고, 윤상원은 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27일 전남도청에서 산화하였다. 특히 윤상원의

280) 그러나 5월 21일 계엄군의 발포 이후 계엄군이 광주 외곽으로 퇴각한 이후 광주YMCA의 공간이 사용되지 않았던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5월 25~26일에는 계엄군의 진압을 앞두고 대학생들이 광주YMCA 1층에서 무기훈련이 받기도 하였다.

경우 새롭게 결성된 “전국민주노동자연맹”과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에 참여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5·18항쟁 당시 광주YMCA/YWCA를 중심으로 항쟁에 참여했던 인사들에 집합(행위)을 이룰 수 있었던 인적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그림은 지금까지 정리된 5·18관련 개신교계의 증언 자료와 기타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이를 통해 5·18항쟁 시기 개신교계의 항쟁참여와 사회운동 세력 간의 관계를 이해 할 있다. 먼저 광주YMCA 이사로 활동했던 강신석, 윤영규, 명노근, 이성학, 이기흥 등은 광주YWCA에서 양서조합과 엠네스트 활동을 하며 박석무(대동고 교사), 이철우(1980년 1월 1일부터 광주활동) 등과 어울렸다. 흥미로운 것은 증언자들이 강신석, 윤영규, 명노근, 문병란 등이 동부교회 백영흠 목사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이다. 백영흠 목사는 1946년부터 광주YMCA에서 활동했다. 1978년대 3월 12일 개척한 무진교회(강신석)은 백영흠 목사의 사동 사택에서 시작한 교회였고, 항쟁이후 5·18유족회와 부상자회가 만들어지는데 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백영흠의 동부교회는 광주카톨릭센터 뒤편의 무돌교회와 한빛교회로 분립되는데, 한빛교회는 1984부터 매년 5·18추모예배를 이어 온 교회이다.

윤영규, 명노근, 이성학, 박석무, 문병란 등이 운영했던 양서조합은 그 자체로 지역사회와 교우하는 공간이기도 했지만, 당시 녹두서점을 운영하는 김상윤의 여동생 김현주가 양서조합의 서무를 맡고 있기도 했다. 또한 1970년대 송백회는 YWCA와 문병란 등이 연계되었으며, 이들은 계림동에서 활동했던 백제야학과도 교우하였다. 이철우의 증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성학, 이기흥 등은 홍남순, 윤한봉, 김상윤, 윤상원 등과 ‘국민연합’을 준비하고 있었고, 윤상원은 광천동에서 들불야학 활동을 하며 김영철, 박용준 등과 교우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1969년 광주YMCA가 지역사업의 하나로 시작된 광천동 시민아파트 개발사업을 시작하여, 광천삼화 신용협동조합이 1972년 설립되었는데,[281] 이를 김영철이 이어받아 활동한 것이다(김영철은 김상윤과 광주일고 동기이다). 이를 계기로 1978년 김영철은 광주YWCA 신용협동조합의 참사(상무)로 근무했고, 1975년부터 YWCA신협 교도원으로 일하던 박용준을 만날 수 있었다.

YWCA신협 사무실에서 잠을 자던 박용준은 김영철을 만나, 그의 집에서 함께 살며 윤상원, 박관현 등과 교우할 수 있었고, 항쟁에 참여했다. 박관현은 전남대학교 80년 총학생회장이 되기 전 들불야학을 통해 윤상원, 김상윤, 윤한봉 등과 같은 70년대 전남대학교 운동권 선배들과 교우하고 있었다.

## 4. 5·18항쟁 이후 Y의 변화

5·18항쟁을 전후하여 형성되었던 이러한 개신교계와 사회운동 세력 간의 인적 네트워크는 5월 27일 항쟁이 진압되면서 붕괴되기 시작한다. 윤상원과 박용준은 목숨을 잃었고, 김상윤, 김영철, 박관현, 윤한봉은 구속되거나 구속을 피해 도피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주로 광주YWCA에서 홍보활동을 했던 송백회, 연극반 '광대'는 자연스럽게 해체되며, 비교적 젊은 층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YWCA에서 항쟁에 참여했던 이윤정은 이후 도피하였다가 검거되어 불구속·집행유예로 출소했는데 자신이 간사로 일했던 광주YWCA에서 해고되었다고 한다. 이윤정은 YWCA로 복직하려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역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윤정은 자신의 해고가 청년들의 활동으로 YWCA가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것, 직원이었던 박용준, 김영철이 큰 피해를 입었던 것에 대한 원망 때문이었던 것으로 회고했다.[282]

> 80년 10월에 강신석 목사님이 좀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새롭게 또 다음의 투쟁을 하기 위한, 목표를 위한 어떤 베이스캠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노동교회를 하나 해야 되겠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노동교회를 시작하자. 적임자가 니(너)다'. 산업선교 제안을 하더라고요. '아 그럼 내가 하지' 무등교회를 그해에 11월 첫 주에 시작한 거예요. 다섯 사람인가 모여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오정묵, 오창규(무진교회 출신), 서한성(박용준 친구), 광천 공단에서. 무등교회를 시작하니까 대게 어떤 그룹들이 중심이 되냐면, 전용호로 해서 들불야학에 강학을 했던 친구들이 중심이에요. 사회선교, 노동, 농민 이런 활동가들 많이 교육을 시켰거든요. 학출들 야학, 강학했던 친구들하고 모여서 무등교회가 시작이 됐죠. (이철우의 증언)

위 이철우의 증언은 항쟁의 피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움직임들이 계속되었던 사회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철우가 개척한 무등교회는 윤상원, 김영철, 박용준 등이 활동했던 광천동 일대를 배경으로 그곳의 노동자들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연극반 '광대'에 참여했던 전용호 등 들불야학 대학생들이 함께했다. 또한 '광대'는 항쟁으로 해체되었지만, '문화패' 영역의 사람들은 이후 전남여고 앞 지하 1층에 소극장 '일과 놀이'를 통해 사회적 실천을 계속했으며, 이 실천

281) 『광주YMCA 90년사, 348~352쪽. 『광주YMCA90년사』에는 "김영철이 광주YMCA신협의 일원으로서 활동하였고, 광천동 어린이 축구단을 지도하였다"고 나와 있다.

282) 이윤정의 증언(국사편찬위원회, 2006, "5·18을 경험한 여성들의 정치활동과 삶의 변화", 2006년도 구술자료수집사업)

은 1983년 광주카톨릭센터에서 운영되었던 광주시민미술학교(홍성담)으로 이어지면서 교계와의 연계활동이 계속되었다. 무등교회에서 노동자들과 야학활동을 했던 표정두는 1985년 이 광주시민미술학교에 참여했었고는데, 표정두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미술학교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판화 작품은 5·18항쟁의 기억을 재현한 것이었다.

힘(力) - 표정두

친구야
오월의 화려한 계절의 자유도 잠시 뿐,
오월의 화려한 계절의 해방도 잠시 뿐,
지금은 모두 다 비싼 눈물로 잠들어 버리고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여러 천년의 기억 속으로 달음질 친다.
생명의 시작과 끝이 같다고 믿는 모든 이들을
너와 나의 축제에 초대하자.[283)]

목요기도회라는 것이 우리는 바로 구속자들을 위한 그거여. 주일날이고 언제고 다른 날 못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목요기도회가 주로 YWCA서 모이는데 못 모이게 될 때 어디서 했냐면 저기 주월동 교회 밑에, 경찰들이 (YWCA)를 집회 장소로 허용을 안 하니까 가로등 밑에서 우리가 예배도 보고 그랬어. 이명자씨랑 가로등 밑에서 예배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같이 고생 지독하게 했어. 중앙성결교회 문정식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도 5.18 겪으면서 관계되는 학생들, 청년들 누구보다도 관심 갖고 지원하고 여기를 떠난 류연창 목사님. (윤용상의 증언)

5.18 구속자들 석방 운동을 암암리에 했는데 명단을 위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명단을 내가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조아라 회장님이 제일 명단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구속자들을 위해서 영치금을 전주 교도소에, 광주에, 서울에, 안양에 해가지고 영치금을 성의껏 내십시오. 그 구속자들 이름을 문익환 목사하고 고영근 목사님 성인들 중에서는 그런데 젊은 학생들을, 몇 사람들을 우리가 내의 사고 영치금 넣어주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내가 알기로 고인이 되신 이애신, 김경천, 안성례, 윤영규, 일반 교인들 중에는 공개적으로는 못하고 우리가 몇 사람들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숫자는 아니었어. (윤용상의 증언)

정동년씨 부인, 이명자씨를 YWCA 건축회계로 채용을 했어요. 오랫동안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했고. 기형도씨라고 광주시 청소부를 하셨어요. 5.18 때 시신을 갖다가 매장한 장소를 퍼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고문인지 뭘로 해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새로 회관 옮긴 식당에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갖고 그 분은 정년까지 근무를 하셨어요. (양현숙의 증언)

5·18 1주기 때 호남신학대학에서 추모예배를 드린다. 그런 정보가 들어왔어. 어디서 드리냐, 그렇께 YWCA 강당 소심당이라고 있어요. 갔더니, 조아라 장로님이 예배를 정식으로 드린 것도 아니고 앉아서 설교를 한 거여. 30여 명이 앉았어. 조아라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뭐라고 하시냐면 신협 다니다가 죽은 고아 출신 직원이 있어요. 들불야학도 하고 YWCA 신협 직원이야. 그 이름을 부르면서 “늙은 내가 죽이야 쓸 것인디.”

283) 광주시민미술학교, 1985, <제5기 시민미술학교 판화전시회>(유인물), 7쪽.

김영철[박용준]인가? “영철이 니가 죽었냐.” 설교가 울음이여. 넋두리여. 우시는 거야. 그 내용이 설교예요. 비통한 거지. 광주가 1년 후에 비통을 겪은 거야. (김병균의 증언)

위의 증언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광주YWCA의 조아라 간사는 항쟁의 피해를 수습하고 재건하는 일을 도맡아 추진했다. 항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구속자’로써 이전의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유가족과 부상자를 지원하는 일을 당국의 감시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추진하였다. 특히, 광주YWCA의 경우 5월 27일 항쟁의 진압으로 대의동 회관의 공간적 피해가 극심하였다. 인적·공간적 피해로 대학생 및 여성교육프로그램은 축소되거나 통합되었고,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기금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 할 수밖에 없었다. 광주YWCA 2층에 자리했던 양서조합은 1982년 문을 닫았지만, 1981년 한국YMCA중등교육자협의회가 창립되면서, 양서조합을 운영하던 윤영규는 1982년부터 광주YMCA 중등교육자협의회를 꾸리고, 광주전남교사협의회를 결성하였다.[284]

그러면서도 1980년 전부터 운영되었던 YWCA의 민중논단과 YMCA의 시민논단은 계속되었고, YMCA의 경우 시민학당을 신설하여 사회교육강좌를 계속하였다. 1981~84년 17회 운영되었던 YMCA의 시민학당은 문병란, 송기숙, 한승원, 문순태, 황석영, 김준태, 이상식, 명노근 등 1980년을 전후하여 해직되었던 지역의 인사들이 강사로 활동하였고,[285] YMCA 시민논단은 송건호(1981, 1982, 1984), 함석헌(1984, 1986) 등이 강사로 오면서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286] 광주YWCA 민중논단의 경우 1992년까지 계속되었는데, 서남동(1981, 예수와 민중), 김동길(1982, 역사와 민중), 성내운(1982, 민중적인 삶의 지표; 1985, 창조적 교육-청소년 해방의 길), 문동환(1985, 한의 민족과 인류사), 박현채(1986, 경제자립을 위한 길), 한완상(1986, 이 시대를 사는 창조적 지식인의 사명) 등이 강사로 초빙되었다.[287] 이러한 강연회는 1970년대 유신의 억압 속에서 Y가 만들어냈던 사회적 공간으로써의 역할이 계속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오래된 건물이고 회원들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좁고 그래서 옮겨가도 좋지 않을가 하는 논의가 있었어요. 5.18로 인해 서 쓸 수가 없게 되니까 양론이 있었죠. 역사적인 건물을 옮길 수는 없다. 지어도 여기다 짓자. 그래도 회원들의 요구나 프로그램이나 할려면 좀 더 넓은 데로 가야 되지 않겠냐. 주차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러니까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기수로 결정을 했는데, 유동으로 가게 됐어요. 유동으로 옮겨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단체들을 6층 한 층을 추는 걸로 하고 싶으신 거예요. CBS가 건물이 없어어요. 7층에다가 기독교방송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양현숙의 증언)

그러나 거기에 보이지 않는 방해가 끼어들었다. 누구의 방해였다고 말하는 것도 이제와서는 다 소용 없는 것이지만 끊임없이 민주화운동을 위한 대회나 행사가 있으면 시내 한복판에 있는 우리 회관은 그 장소가 되어 있었다. 우리 회관만 옮기면 광주 시내가 조용해질거라고 생각 했을까? (조아라 회장 회고록 456쪽)[288]

---

284) 1985년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Y교사회 회원이 해직되는 등 탄압을 받았지만, 1986년 1월 Y교사회장에 윤영규 이사가 선출되면서, 5월 10일 광주YMCA 백제실에서 200여명의 교사가 ‘교육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교육민주화 투쟁이 계속되었고, Y교사회가 발전적으로 해체를 한 후 전국교직원협의회로 개편, 다시 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광주YMCA 90년사, 390~394쪽).

285) 『광주YMCA 90년사』, 406~407쪽.

286) 『광주YMCA 90년사』, 345~246쪽.

287) 『광주YWCA 70년사』, 163~164쪽.

그런데 1984년 광주YWCA의 유동 이전은 지역의 사회적 공간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위의 증언을 참고하면, 본래 YWCA는 대의동 회관을 허물고 신축하였으나, '보이지'는 방해에 의해 이것이 무산되고, 현재의 유동회관으로 신축 이전하게 되었다. 조아라 회장은 회관을 신축하면서 6층에는 민주화 운동 단체, 7층에는 기독교 방송 등이 자리할 수 있게 해, 대의동 회관처럼 시민사회에 문을 열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1980년 5·18 항쟁 이후 광주 지역의 민주화운동이 망월동 5·18묘지, 금남로와 전남도청 앞 광장이라는 항쟁의 역사적 장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자연스레 광주YMCA가 보다 사회적인 공간이 되기 시작했다.

## 5. 맺음말 : 실천자원으로서 5·18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이 5·18항쟁을 전후로 한 광주YWCA/YMCA의 변화상을 고찰해 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이 항쟁의 발생과 이후 5월운동의 영역 안에서 '교계'가 어떠한 역할과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이었다면, 본 논문은 계신교계와 사회 영역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몇 가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1970년대 광주지역의 개신교계 민주화운동은 사회 참여운동으로써, 광주YMCA/YWCA는 기독교 사회단체로서 좀 더 사회운동 진영과 밀접하게 연계되었다. 특히 광주YWCA는 사회운동 진영에 활동 공간을 제공해 주었고, 사회운동 진영은 이 공간을 지배권력으로부터의 피난처, '틈'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5월 18일 항쟁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시민들의 시위와 계엄군의 진압 사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Y계열의 인사들 역시 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세대별로 또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항쟁을 이해(interest)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었고, 실천행위 조직(organization)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계엄군의 폭력 진압과 항쟁 이후 신군부의 집권은 항쟁에 참여했던 개인들에게 다른 기회(opportunity)들로 작용하여, 보다 다양한 방식의 교회(운동), Y운동, 문화운동으로 이어졌다.

둘째, Y를 중심으로 살펴본 이들의 인적네트워크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교회, 야학, 조합, 학연 및 개인적 친분 등 1980년 초반 다양한 영역의 실천들이 조합된 결과였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의 조합성은 같은 시기 천주교계가 '교구'를 축으로 한 보다 위계적 관계망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비교적 개신교는 목사나 개인의 인적 관계망이 보다 주요했고, 교회와 Y단체는 이들이 교우하고 활동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개신교계의 이러한 개방성은 비(非)교계와의 다양한 연계와 연대를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향후 천주교계와 개신교계의 비교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항쟁 이후 사람들은 5·18의 경험을 각각의 영역에서 실천자원으로 동원(mobilization)하였다. Y의 경우, YWCA의 인적·공간적 피해로 인해 그에 따른 사업의 변화가 뒤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유가족과 부상자 계층과의 연대를 계속하였고 "민주화 운동 단체"들과 연대를 보다 공식화하기도 했다. YMCA의 경우 교사계층과의 새로운 연대는 지역뿐만 아

288) 『광주YWCA 70년사』, 222쪽.

니라 한국 사회의 지적 흐름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목요기도회와 매년 5·18연합예배 등과 같이 비물질적/비정형적 자원으로써 5·18은 개신교계에 '슬픔', '부끄러움' 등 지속적인 실천과 사회참여의 자원으로 기능하였다.

■ 참고문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즈 : 광주 YWCA/YMCA 관련 자료
· 전남대5·18연구소 소장자료 : 광주 YWCA/YMCA 관련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2006, "5·18을 경험한 여성들의 정치활동과 삶의 변화", 2006년도 구술자료수집사업 - 이윤정, 정현애, 안성례

광주YWCA 70년사 편찬위원회, 1992,『광주YWCA 70년사』, 광주YWCA.
광주YMCA, 2010,『광주YMCA 90년사 1920~2010』, 광주YMCA 역사편찬위원회.
5·18기념재단 편, 2015,『5·18의 기억과 역사 7: 개신교 편』, 5·18기념재단.
이해찬, 유시민 외, 2010,『기억하는 자의 광주』, 돌베개.
김영택, 2010,『5월 18일, 광주』, 돌베개.
박혜강, 2010,『5월의 불사조 박용준』, 광주YWCA
올릭, 제프리 K. 강경이 역, 2011,『기억의 지도』, 옥당.
스 틸리, 진덕규 역, 1995,『동원에서 혁명으로』, 학문과 지성사.

김흥수, 1996, "5월 광주항쟁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반응",『한국기독교와 역사』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서중석, 2012, "광주항쟁과 천주교회의 진실 알리기",『신학전망』178, 광주카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윤선자, 2002,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종교계의 역할: 천주교회를 중심으로",『민주주의와 인권』2권 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윤선자, 2012, "한국천주교회의 5·18광주민중항쟁 기억·증언·기념",『민주주의와 인권』12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은우근, 2012, "부끄러움 또는 질문하는 역사의식: 5월민중항쟁과 광주·전남 가톨릭교회",『신학전망』179, 광주카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정호기, 2013, "천주교회의 5월운동과 사회참여:1980년대 전남지역의 활동을 중심으로",『신학전망』182, 광주카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조배원, 2003, "기독교 사회참여운동 연구의 현황과 과제",『한국기독교 사회참여운동관련 문헌해제』(연구총서 최종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규무, 2012a, "5·18민중항쟁과 광주·전남지역 개신교계",『한국기독교회와 역사』3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규무, 2012b, "5·18민중항쟁과 1980년대 광주·전남 개신교계의 동향",『역사학연구』47, 호남사학회.

❒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학술심포지움 '5.18민주화운동과 기독교' 제5토론 (2020. 9. 5)

# 「실천자원으로써의 5·18: 5·18 전후 광주YWCA/YMCA의 변화」에 대한 토론

**한규무**(광주대)

유선생님의 오늘 발표는 5.18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광주YMCA/YWCA에 대한 연구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동안 5.18 연구에서 광주YMCA/YWCA가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이 아쉬웠는데, 오늘 발표를 들으며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토론자로서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실천자원'의 개념입니다. 사회학적 용어인지는 모르나, 과문한 제게는 생소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발표자는 머리말에서 "박용준과 표정두의 삶과 죽음은 5.18항쟁이 그들의 삶에서 무엇이었을까를 묻게 한다. 이에 본 글은 5.18항쟁이 항쟁 전후 개인과 집단의 실천행위에 어떤 요소로 작용했는지 묻고 그 답을 찾고자 한다"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맺음말에서 그 '답'이 무엇인지 선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어떤 기관이 어떤 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토론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물적 지원, 둘째는 인적 지원입니다. 물적 지원은 YMCA와 YWCA 모두 회의나 집회를 위한 장소로 활용되었기에 의문이 없습니다. 인적 지원의 경우, 임원진의 동향이 중요합니다. YWCA의 경우, 회장 조아라와 총무 이애신 등의 참여가 확인됩니다만, YMCA의 경우는 어떠했는지요(5.18과 관련된 YMCA 인사들의 대부분은 5.18 당시 이사 또는 분과위원장이었습니다).

광주YMCA 임원진(1979~1980)

| 직책 | 1979년 | 1980년 |
|---|---|---|
| 회장 | 구○○ | 구○○ |
| 총무 | 이○○ | 이○○ |
| 재단이사장 | 홍○○ | 홍○○ |
| 이사회 | [임원진] 회장 구창환, 부회장 박홍배, 서기 김록현, 재무 문영한<br>[이 사] 강요한, 고진형, 권병래, 김종현, **명노근**, **이기홍**, **이영생**, 윤용상, 최희천, 김오봉, 허진득, **김천배**, 노희관, 정화영, 김용일 | [임원진] 회장 구창환, 부회장 박홍배, 서기 김록현, 재무 문영한<br>[이 사] **이기홍**, **이영생**, 윤용상, 강신석, 노희관, 권병래, 강요한, 김종현, 고진형, 윤영규, 김영식, 김용일, 김도수, 김용식, 진성인, **명노근**, **김천배** |
| 재단이사회 | [이사장] 홍승민<br>[이 사] 권병래, 문천식, 강요한, 이남주<br>[감 사] 이종열, **명노근** | [이사장] 홍승민<br>[이 사] 권병래, 문천식, 강요한, 이남주<br>[감 사] 이종열 |
| 위원회(위원장) | 회우위원회 박홍배, 논단위원회 **명노근**, 청소년위원회 노희관, 농촌사업위원회 **이기홍**, 재정위원회 문영한, 회원연수위원회 **김천배**, 일반사업위원회 김록현, 성서연구위원회 ?, 체육교육위원회 김용일 | 회원활동위원회 김용일, 논단사업위원회 **명노근**, 청소년사업위원회 김도수, 농촌사업위원회 강신석, 재정위원회 문영한, 회원연수위원회 **이기홍**, 일반사업위원회 김록현, 성서연구위원회 **김천배**, 체육교육위원회 박홍배 |
| 직원 | [간 사] 이남주, 김대환, 김호준, 김재호 | [간 사] 이남주, 김대한, 김호준, 김재호 |

* 『광주YMCA 90년사』, 598~599쪽 참조

❒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학술심포지움 '5.18민주화운동과 기독교' 제6발제 (2020. 9. 5)

#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한국기독교 연구」를 위한 試論
## - 사회변동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한 역사해석학

**이치만**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한국교회사)

여는 말 - 문제의 소재와 연구방법론
1. 근대한국의 사회변동과 초기 기독교
2. 일제하 기독교 사회운동에 관한 역사해석학
3. 문용동 전도사의 죽음에 대한 역사해석학
닫는 말

## 여는 말 - 문제의 소재와 연구방법론

'사회가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참여는 신앙의 발로(發露)로 볼 수 있는가.' 이 질문은 한국기독교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기독교사는 한국근대사와 거의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기독교는 한국근대사에서 내적으로는 유교적 사회질서가 붕괴하고, 외적으로는 민족사회가 외세의 침략에 직면했던 시기에 전래·수용되었다.[289]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의 나라들이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그런데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기독교를 신봉하는 구미열강에 의해 식민지화 되었지만, 한국은 비기독교국가인 일본에 의해 식민지화 되었다. 이러한 점은 한국기독교가 민족운동과 결합되는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한국기독교는 한편으로는 유교이념을 대체하는 근대정신으로서, 한편으로는 외세의 위협에 대항하는 사회집단으로서 인식되었다. 예를 들면 상해임시정부의 국가 주석이었던 김구는, "…신교육의 풍조는 예수교로부터 계발되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만 지키던(閉關自守) 자들이 예수교에 투신함으로써 겨우 서양 선교사들의 혀끝으로 바깥 사정을 알게 되어 신문화 발전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선교사의 숙달치 못한 반벙어리 말을 들은 자는 신앙심 이외에 애국사상도 가지게 되었다. 당시, 애국사상을 지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교 신봉자임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술회하고 있다.[290]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 종래의 연구는, 민족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공헌이라고 보는 관점, 혹은 기독교적 아이덴티티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는 관점 등이 있다. 전자의 입장은 주로 일반역사학계의 연구경향을 드러내는 입장이다. 이를 요약하면 민족운동에서의 기독교인

289) 본고에서의 '한국근대사'란 구한말과 일제하를 포괄하는 시기의 역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근대한국' 혹은 '한국근대'는 이 시기의 한국사회를 의미한다. 또 '한국기독교'란 한국에서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또는 프로테스탄티즘에 근거한 기독교인의 諸 조직을 의미한다.

290) 김구, 『백범일지』, 돌베개, 2002, 185~186.

의 역할은 민족사회의 일원으로서 행한 것이고, 또한 기독교를 하나의 외피로서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아이덴티티는 민족운동 혹은 사회운동의 본질적 동기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한국근대사에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 거의 주목하지 않고 있다. 반면 후자는 그 역할을 기독교적 정체성에 의한 것으로서 파악하는 견해이다. 즉 한국기독교는 선교 초기부터 민족의 당면과제, 즉 '반봉건'과 '항일구국'이라는 민족사회의 가치를 외면하고서 존립할 수가 없었던 선교 상황에 놓여 있었고, 실제로 시대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한국기독교를 민족운동의 한 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견해이다.[291]

이러한 견해는 이른바 '민족교회론'이나 '기독교 민족운동론' 혹은 '기독교민족주의'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민족교회론은 반봉건과 반외세의 시대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기독교 내의 주체를 교회일반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화는 한국기독교회의 '정교분리'에 의한 정치색배제, 또한 1930년대 이후에 나타난 한국기독교의 친일 및 전쟁협력 행위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한편 민족교회론과는 별도로 한국근대 민족운동사에서 기독교의 역사적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자 하는 시도가 일반역사학계의 기독교관련 연구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른바 '기독교 민족운동론' 혹은 '기독교민족주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292] 이 연구들은 종래의 한국근대사연구가 기독교의 역할을 주목하지 않았던 상황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또한 기독교인이 한국근대 민족운동사에서 적잖은 공헌을 한 역사적 사실에서 타당한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민족운동론' 혹은 '기독교민족주의'는 그 개념을 둘러싸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기독교민족운동의 개념화를 시도한 한규무의 연구는 좋은 참고가 된다.[293] 종래의 기독교민족운동의 개념은 개략적으로 '기독교인이 행한 민족운동'으로서 이해되어왔으나, 이에 한규무는 '기독교인이 행한 민족운동이라면 모두 '기독교민족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던지면서, 기독교민족운동 개념화의 난점을 지적했다.[294] 즉 기독교인이 민족운동사에서 적잖은 공헌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발현이 아니라, '민족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공헌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 소지를 지적하면서, 기독교민족운동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민족운동에서의 기독교인의 참가가 '기독교인으로서의' 또는 '기독교적 신념'에 기초한 민족운동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295]

이와 같은 한규무의 지적은 종래의 연구에서 나타난 '기독교민족운동' 또는 '기독교민족주의' 개념의 애매함을 지적하고, 기독교민족운동의 개념화를 위해 기독교적 아이덴티티를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 제안은 보다 엄밀하게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기독교민족운동의 개념화를 위해 기독교적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기독교적 아이덴티티를 '기독교인으로서' 또는 '기독교적 신념'에

---

291) 민경배.「한국기독교와 그 민족교회의 成立」,『한국 근대화와 기독교』, 숭전대학교출판부, 1983, 246~251.

292) 이에 관한 주요 논저는 다음과 같다.
노치준,『일제하 한국기독교 민족운동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박정신,『한국기독교사 인식』, 혜안출판, 2004.
윤경노,『한국근대사의 기독교적 이해』, 역민사, 2003.
이만열,『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지식산업사, 2000.
_____,『한국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장규식,『일제하 한국기독교민족주의 연구』, 혜안출판, 2001.

293) 한규무는 '민족주의'의 개념에 대해 기존 학계의 개념적 혼란이 있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용어에 중점을 둔다고 말하고 있다. 한규무,「한국기독교 민족운동사연구의 현황과 과제」,『한국기독교와 역사』12호, 2000, 81~82.

294) 위의 글, 85~86.

295) 위의 글.

기초한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기독교적 아이덴티티를 개인의 신앙적 차원으로 한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독교적 아이덴티티가 갖는 다양한 차원을 제한한다는 약점이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독교민족운동의 개념화는 민족운동사에서 기독교의 독자성 및 고유성을 규명하는 시도이며, 그것은 '한국에서의 기독교적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민족운동은 기본적으로 민족사회의 집합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므로, 개별 기독교인은 민족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개별 기독교인의 민족운동은 민족사회의 운동으로서 수렴되어 버린다. 따라서 기독교적 아이덴티티를 개인의 신앙적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결국 민족운동사에서 기독교의 독자성 및 고유성에 대한 논거가 위축되어 버린다.

또한 기독교적 아이덴티티를 '기독교인으로서' 또는 '기독교적 신념'에 기초한 것으로 접근하면, 결과적으로 기독교민족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상(事象)을 규명하려고 하는 본래의 성격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다. 즉 '기독교인으로서' 또한 '기독교적 신념'의 개념은 궁극적으로 '기독교인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또는 '기독교적 신념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라는 기독교 본질에 대한 물음을 야기함으로써 연구본래의 목적에서 일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근대사에서 기독교의 역사적 사상(事象)을 규명함에 있어, 개인의 신앙적 차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에서 지적한 것처럼 개인의 신앙적 차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적 아이덴티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아이덴티티의 사회적 측면까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근대한국에서 기독교의 사회적 양상-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적 양상인가 아닌가 차치하더라도-은 전통사회의 그것과 현저하게 다른 것이었고, 또한 기독교의 사회적 양상은 종교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근대한국에서 사회변동의 상징체계 및 지향점으로서 작용했다. 다시 말해 근대한국의 사회적 변동과 기독교의 사회적 상징체계 및 지향점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 한국근대사에서 기독교의 역사적 사상(事象)을 규명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근대사에서의 기독교적 아이덴티티를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종교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로버트 벨라(R. N. Bellah)의 이론은 근대한국에서 기독교의 사회적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종교적 상징체계가 사회변동-진보, 혹은 근대화를 포함하여-을 촉진하는 양상에 주목한 벨라에 의하면, 종교가 사회변동을 촉진하는 정도에 준하여, '융합'(融合: fusion), '소격'(疏隔: disjunction), '창조적 긴장'(creative tension)이라는 패턴이 있다.[296] '융합'이란 종교적 지향이 현실사회와 뒤섞여 있는 구조이다. 가까운 예로 조선사회에서의 유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소격'이란, 종교적 상징체계 및 가치가 현실사회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구조이다. 이와 같은 패턴은 역사상 어떤 종교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두 패턴은 어느 쪽이든 종교에 의한 사회변동의 가능성이 낮다. 한편, '창조적 긴장'은 종교가 그 상징체계 및 가치를 현실사회의 영역에서도 실현하려고 하면서도, 현실사회의 문화에 융합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둠으로써 현실사회와 상호긴장하는 구조이다. '창조적 긴장'의 패턴은 역사상 소수밖에 없었지만, 종교에 의한 사회변동의 기능이 가장 활발한 패턴이다. 특히 벨라는 '창조적 긴장'의 패턴으로서 프로테스탄티즘에 주목하고 있다.[297] 본고는 종교와 사회변동에 관한 벨라의 이론을 빌어서 한국기독교가 한국사회의 변동적 상황 안에서 어떤 역사적 존재양상이었는지 논하고자 한다.

---

296) R. N. ベラー, 河合秀和訳, 「近代アジアにおける宗教と進歩(근대 아시아에서의 종교와 진보)」, 『社会変革と宗教倫理』, 未来社, 1973, 240~313.

297) 위의 책, 262~271.

## 1. 근대한국의 사회변동과 초기 기독교

근대 한국사회는 두 가지 큰 변화를 맞고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통적 유교 사회의 붕괴, 그것과 동시에 일어난 일본의 식민지 강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한 한국기독교의 사회적 양상은 현실사회와 '창조적 긴장'을 형성하며 각각의 사회운동을 전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기독교는 전통적 유교사회와의 긴장관계 속에서 개화 운동에, 또한 일제와의 긴장관계 속에서 항일애국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이와는 다른 맥락이지만, 1920년대이후부터 사회주의와의 긴장관계를 형성하며, 기독교 사회담론 및 기독교 농촌운동 등을 전개했다고 말할 수 있다.

1) 기독교 사회운동은 전통적 유교사회와의 긴장관계 속에서, 근대적 개화운동으로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된 시기는 유교적 양반관료사회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절실히 필요로 한 시기였다. 이즈음 전래되기 시작한 한국기독교는 유교 이념를 대체하는 근대 정신으로서 인식되면서, 유교적 질서의 전통사회와 긴장관계를 형성했다. 여기에 독립협회운동에서의 기독교인의 주도적 역할, 이와 맥을 같이하는 이른바 '기독교 문명개화론'이 나타났다.

갑신정변(1884)의 실패이후, 미국에 망명한 서재필(미국명: Philip Jaisohn)은 1895년 12월에 귀국한 뒤, 1896년 4월에 최초의 한글 전용의 신문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이어 개혁지향적인 세력을 결집하여 1896년 7월에 「독립협회」를 창립했다. 독립협회의 최초의 목적은 독립문 등의 기념물 건립을 위한 것이었으나, 시설물의 건립과정에서 대중으로부터의 큰 반향을 얻으면서, 단체의 성격을 대중적 정치결사단체로서 탈바꿈하였다.

정치결사로서 성격이 바뀐 독립협회는 열강의 이권침탈 반대운동,[298] 국명개칭과 황제 옹립운동 등의 정치운동을 전개했다.[299] 게다가 독립협회는 1898년 3월에 서울종로에서 1만명이 운집한 최초의 근대적 민중정치집회인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또 수만명이 운집한 제2차 만민공동회도 성공리에 개최되면서 일반 대중의 민권 의식도 크게 고양되었다.[300] 이에 따라, 독립협회는 수구적인 집권관료의 파면, 악법의 개정, 민권의 신장, 그리고 의회설립운동과 같은 구체적인 정치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수구파 세력이 정부의 실권을 완전하게 장악하게 되면서, 독립협회는 집권수구세력의 집중적인 탄압을 받아 해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독립협회의 근대적 개혁운동은 중단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독립협회 운동은 몇 가지 점에서 기독교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우선, 독립협회의 리더들이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독립협회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서재필과 윤치호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서재필은 도미 후, 미국에서 세례를 받고

---

298) 러시아는 아관파천이후, 조선 정부로부터 많은 이권을 침탈 했다. 뿐만 아니라,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산 영도에 러시아 해군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국권 침탈을 규탄할 목적으로, 이상재가 작성하고 독립협회 회원 135명이 서명한 「구국선언상소문」을 고종황제에게 올렸다.

299) 1897년 8월 독립협회의 간부와 자주적 지식인의 주청에 의해, 연호를 「建陽」에서 「光武」로 고치고, 같은 해 10월에는 국호를 「大朝鮮國」에서 「大韓帝國」으로 고치며 고종은 황제에 즉위했다.

300) 만민공동회의 규모와 그 강경한 주장에 당황한 정부는 러시아의 부산 영도 조차요구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러시아는 조선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한편, 조선 정부의 군사 및 재정고문을 철수하고, 한로은행(韓露銀行)도 폐쇄하게 되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일본 역시 월미도 석탄기지를 철수하게 되었다.

열렬한 YMCA 회원이 되었다. 또 윤치호는 남감리교가 운영하는 중국의 中西學院(Anglo-Chinese College)에 입학한 후, 도미하여 에모리 대학에서 신학수업을 받은 적도 있었다. 독립협회운동은 이들 기독교 지식인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직간접으로 기독교를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통로가 되었다.

또한 기독교와 독립협회의 관계에서, 協成會의 활약은 주목할 만 하다. 協成會는 배재학당의 교사로서도 근무한 서재필의 주도에 의해, 1896년 11월에 창립한 배재학당의 학생회였다. 協成會는 기독교단체는 아니었지만, 주요멤버는 기독청년이었는데, 독립협회가 설립되자 독립협회의 행동대로서 활동했다.[301] 또 독립협회가 지방지회를 설립하려고 했을 때, 거의가 교회를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특히, 평양지방의 경우, 교회신도를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독립협회의 활동이 이루어졌다.[302] 황해 해주의 경우, "今之協會 卽前日之耶蘇敎人也",[303] 즉 독립협회가 기독교의 단체로서 이해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독립협회의 대립세력인 황국협회는 교회와 기독교계 학교를 반대파로 간주하여, "敎友를 指目하여 獨立協會의 逆黨의 長鬼가 되었다 하며, 又曰 負商等이 장차 學堂을 毁破하여 敎徒로 屠戮하겠다 하였으니"라고 협박했다.[304]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면, 기독교인이 독립협회운동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던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면 독립협회운동에 기독교인이 참가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기독교인의 자주의식과 사회변혁 의식을 태동시켰다는 데에 있다. 즉 독립협회운동이 자주적 독립의식, 민주적 시민의식, 그리고 대중정치의 가능성을 실현시켰다고 한다면,[305]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의식을 공유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의미는 기독교인이 독립협회운동에 참가함으로 인해, 일반대중이 기독교에 친밀하게 접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그 때까지 '無君無父'의 邪敎로만 인식되어 온 기독교에 상당한 호감을 불러일으켰다.

기독교와 독립협회와의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점은 독립협회의 인적 계보가 기독교에 그대로 이어졌다고 하는 점이다. 독립협회가 해산되면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한 수구세력은 일련의 개혁당사건으로 개혁적 관료나 지식인을 대거 투옥했다. 그런데 이에 연루되어 투옥된 많은 관료 및 지식인들이 옥중에서 기독교에 입문했는데, 그것이 이른바 '관신사회신교지시(官紳社會信敎之始)'이다.[306] 이 시기에 기독교에 입문한 이원긍(李源兢)은 "문명의 본래 의미가 교육에 있고, 교육의 본래의 의미는 기독교에 있기 때문에, 관료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구약의 진리를 규명해야 한다."라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307] 이들의 기독교입문은 일반 지식인층의 기독교 인식에 변화를 일으켰고, 다른 지식인의 입문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독립협회운동 및 '관신사회신교지시'는 소위 '기독교문명개화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

301)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 범우사, 1994, 53~59.

30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I, 기독교문사, 1989, 259~266.

303)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76.

304) 이만열, 「한말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형성과정」, 『韓國史論』I, 1973,,364.

305) 신용하, 『갑오개혁과 독립협회운동의 사회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335~353.

306) 이능화, 『朝鮮基督敎及外交史』, 朝鮮基督敎彰文社, 1928, 204. 이 시기에 입문한 사람은 李商在, 李源兢, 兪星濬, 洪在箕, 安國善, 金貞植, 李儁, 申興雨, 梁義宗, 朴用萬, 鄭淳萬, 李東寧, 李承仁, 柳東根, 李鍾一 등 이다. J. S. Gale, 신복룡 역, 『전환기의 조선』, 집문당, 1999, 138~140; 『한국기독교의 역사』 I, 263. 등에서 참조.

307) 기사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文明之原義首在敎育, 敎育原義在於基督敎, 試觀今日各國, 皆以上帝極世效靈, 愛人如己, 體認宗敎・・・(中略)・・・普願我, 官諸公以及平民, 凡我同胞, 基督敎新舊約眞理必究明",『大韓每日申報』, 1905年 10月 3日字.

‘기독교문명개화론’은 한국사회의 문명개화를 위해 1)물질문명의 개화, 2)정치사회의 개화, 3)정신문화의 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308] 그런데 이러한 문명개화에 이르기 위해서 진정한 종교인 기독교의 윤리의식을 사회변동의 원리로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유명 각국은 다 하나님께 개도하여 덕을 닦는 근본을 삼는 고로 교당을 세워 사람의 덕행을 일우고 학당을 세워 사람의 재주를 성취케 하여, 근본과 나중이 겸비한 후에 정치가 개정되어 문명이 아름다운 지경에 나아가고, 부강함이 방법이 있어 위엄을 지구상에 떨치니…(중략)…세계가 이같이 문명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시대를 당하여, 우리나라도 예수의 진리대도로 백성의 마음을 개량하여, 남과 같이 나아간다면, 우리 이천만 동포의 행복일까 하노이다.[309]

> 지금 세계 각국에 문명개화한 나라들은 다 구교나 야소교를 밋는 나라인직 이걸 보거드면 그리스도교가 문명개화하는 데는 긴요한 것이라 그리스도교하는 백성은 언제든지 옳고 공번되고 의리있는 일을 하거드면 하나님이 보아 주시는 것을 믿는 연고요…[310]

다시 말해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문명개화한 나라일수록 기독교를 숭상하고 있으며, 기독교를 믿으면 백성이 단결하고 부지런해져 자연히 문명하고 부강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 기독교문명개화론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311]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인가 아닌가하는 논의는 제쳐두더라도 당시의 이러한 의식이 독립협회운동 또는 지식인의 입교에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독교문명개화론’은 한편으로 사회진화론의 기독교적 변형이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이에 대해 상술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초기의 기독교 사회운동은 교파교회의 조직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기독교 사회운동은 기독교인이 중심이 된 사회단체나 비밀결사, 또는 YMCA·YWCA 등의 교회외곽의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행해진 것이다. 기독교 사회운동 진영이 교파교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된 이유는 한국기독교의 정치색 배제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한국기독교의 정치색 배제가 구체화된 것은 초기대부흥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기독교의 초기 대부흥운동은 몇 가지 역사적 특징을 낳았다. 먼저 교회의 양적 성장과 기독교 신앙의 대중적 정착을 꼽을 수 있다. 이 점은 일본기독교가 일본사회에서의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오랜 세월동안 부단하게 노력한 것과는 좋은 비교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1905년과 1907년의 기독교 교세비교[312]**

---

308) 이에 관해 다음의 논문은 참고할 만하다. 류대영, 「한말 기독교신문의 문명개화론」, 『한국기독교와 역사』 22호, 2005.
309) 「논설: 정치를 개량함이 인심을 개량하는데 있음」, 『그리스도신문』, 1906년 6월 7일자.
310) 「논설」, 『독립신문』, 1897년 12월 23일자.
311) 「우리교회가 흥왕하면 나라이 문명함」, 『죠션크리스도인회보』, 1898년 6월 1일자.
312) 민경배, 『韓国基督教会史』, 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281.

| 년도 | 교회 | 전도소 | 세례교인 | 학습교인 | 헌금(원) |
|---|---|---|---|---|---|
| 1905 | 321 | 470 | 9,761 | 30,136 | 1,352,867 |
| 1907 | 642 | 1,045 | 18,964 | 99,300 | 5,319,785 |
| 증가률(%) | 200% | 222.3% | 194.2% | 329.5% | 393.2% |

다음으로 초기 대부흥운동은 개인의 내면적 체험신앙이라고 하는 한국기독교의 새로운 신앙양태를 형성했다. 예를 들면, "마루에 엎드려 손과 머리로 마루를 치면서, 울부짖는(penitents beating the floor with hands and with heads, and their screams and outcries)" 참가자의 열기로 가득한,[313] 사경회, 통성기도, 새벽기도회, 한밤중의 산상기도회 등의 새로운 신앙집회의 양태를 낳은 것이다. 이러한 부흥집회의 초점은 엄격한 죄의식에 기초한 개인적인 죄의 고백에 맞추어져 있었다.

> 부흥운동은 신도들에게 죄와 의에 대한 의식을 한층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인에게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낯선 것이었다. 한국인에게도 죄와 의에 대한 의식이 그 나름대로 있었지만, 우리의 기준과 다른 것이었다. 부흥운동에 의해 신도들은 마음 깊게 죄를 깨달았고 의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314]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내면적 체험신앙은 복음적 영성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독교회의 비정치화를 촉진하기도 하였다. 즉 한국이 일본의 지배하에 놓인 것도 한국민족의 죄의 결과였음이 암시되었다. 나아가 한국민족의 시련은 차라리 "한국인이 하나님에게 굴복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었다.[315] 부흥운동을 주도한 선교사들의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한국인 신도는 스스로의 개인적인 죄가 국가적 시련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서서히 식민지 지배하의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했다.

> 가장 주목해야할 장면은 일본인을 미워한 죄에 대한 고백이었다. …(중략)… 일본인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빈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상당한 한국인이 일본화 되고 있다.[316]

바꾸어 말하면 대부흥운동은 주 예수와의 개인적인 관계라는 순수한 복음적 신앙을 강조했다고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 기독교인에게 사회적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여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제모순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부흥운동은 국가적으로 매우 혼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1907년, 한국에서는 국왕폐위로 인한 소요(小搖)가 눈 깜짝할 사이에 전국으로 번져갔다. 이 기간 교회가 보인 행위는 칭찬할 만한 것이었다. 소요의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서울과 평양에서 기독교인은 영향력을 발휘하여,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억누르므로 써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중략)…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주민을 위무(慰撫)하면서 회유한 결과, 피의 살륙을 피할 수가 있게 되었고 질서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앞서 부흥운동이 일어나, 교회가 법과 질서를

313) "The Awakening of the Students," *The Korea Mission Field*, Vol. 4, No. 6, 1908, p.84. 이하 *The Korea Mission Field*는 KMF로 줄인다.
314) "The Direct Effect of The Revival," *KMF*, Vol. 4, No. 5, 1908, p.70.
315) J. S. Gale, 申福龍訳『転換期의 朝鮮』, p.44.
316) G. T. Ladd, *In Korea with Marquis Ito*, Longmans, Green & Co., 1908, p.93.

유지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317]

물론 일제하 한국기독교의 비정치화는 대부흥운동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정치화의 움직임은 그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1901년 9월 장로교 주한선교사들의 선교협의기관인 장로회공의회에서, 「교회와 정부사이의 교제할 몇 조건」이라는 제하의 이른바 '정교분리(政教分離)'의 원칙이 결의되었다.[318] 이 결의안은 성서본문을 근거로 해,[319] 성직자의 정치불개입, 현 세속권력에 대한 순종, 교회시설의 정치적 목적의 이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정교분리는 미국에서의 그 본의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에서의 정교분리원칙은 교회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확보하는 목적이었다.[320] 그런데, 한국기독교에서의 정교분리의 문제는 종교의 정치관여에 대한 배제의 성격이 강했으며, 나아가 정부의 의지에 대한 교회의 순종에 더 가까웠다.

부연하면 「교회와 정부사이의 교제할 몇 조건」의 정치배제적 성격은 그 근거를 성서에 두었지만, "외지에 체재하고 있는 미국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는 주재국의 국내 문제에 완전히 개입하지 않는 것이 본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의무이다. …(중략)… 타국에 체재하고 있는 미국시민의 올바른 자세는 체재의 기간 동안 선교사업·교육사업·의료사업 혹은 다른 사업에서 합법적 활동에만 종사해야 하며, 그것이 또한 본국에 충성하는 것이다"[321] 라고 하는 미국정부의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에 대한 불간섭 정책과 같은 맥락이었다.[322] 그래서 정교분리의 논리는 일본에 의한 한국지배가 구체화되면서,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에 대한 적극적 방조, 또한 세속권력인 일본에 대한 복종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어디까지나 당시의 결의에 그쳤고 한국 기독교에서의 파급효과는 미미한 것이었다. 그런데 대부흥운동 이후 개인의 내면적 체험신앙의 정착은 정교분리에 포함되어 있던 사회 현실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한국기독교의 비정치화를 강화했던 것이다.

## 2. 일제하 기독교 사회운동에 관한 역사해석학

---

317) G. H. Jones & W. A. Noble, *The Korea Revial*, New york,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Methodist Eposcopal Church, 1910, pp.41~42.

318) 5원칙으로 발표된 결의안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우리 목사들은 나라 일과 정부 일과 관원 일에 대하여 전혀 간섭하지 않기로 작정한다. ② 大韓國과 우리들의 나라(선교사의 본국: 필자주)에는 조약이 있으므로 그것에 따라야 한다. 교회의 일은 나라의 일과 다르므로, 교회는 나라의 일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③ 예수교에 들어와서도 大韓 백성이기에 황제에 충성하고 관원에 복종하며 나라 법에 순종해야 할 것이다. ④ 교회는 교인의 정치적 행동을 지시하지도 지원하지도 않고, 교인이 나라에 실수하거나 잘못하더라도 교회가 책임을 지지 않으며 감추지도 않는다. ⑤ 교회는 성령의 집이오, 나라 일을 하는 곳이 아니다. 예배당이나 회당사랑이나 교회학당에서 나라 일을 의논해서는 안된다. 다른 데서 공론하지 못한 일을 목사의 사랑에서는 더욱 해서는 안된다. 『그리스도신문』, 1901년 10월 3일자.

319) 『그리스도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성서본문을 근거로 들고 있다. 즉 롬 13 : 1~17, 딤전 2 : 1~2, 벧전 2 : 13~17, 마 17 : 24~27, 22 : 15~21, 요 18 : 36.

320) 「政教分離」를 영어로 표현하면,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교회와 국가의 분리」이다. 이것은 Separation of Politics and Religion, 「정치와 종교의 분리」와 다르다. 森 孝一, 『宗教からよむ「アメリカ」(종교로서 읽는 「아메리카」)』, 講談社, 1996, 34~37.

321) 이만열編, 『아펜젤러, 한국에 온 첫 선교사』, 延世大学校出版部, 1985, 382~383.

322) 김승태, 「한말 일제침략기 일제와 선교사의 관계<1894~1910>」, 『한국기독교와 역사』 6호, 1997; 유대영, 『개화기 조선과미국선교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413~426; 민강배, 「근대한일관계에 있어서의 미국과 선교사의 위치」, 『基督教思想』 12月号, 1970;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 한국기독교력사연구소, 2001, 96~104; 조영렬, 「재한선교사와 한국독립운동」,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식』 29호, 1990.

1907년 대부흥운동을 기점으로 한국기독교의 교파교회는 비정치화 나아가서 비사회화의 양상을 띠게 되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멀지 않은 1919년 삼일운동에서 한국기독교가 보여준 역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인이 기독교인이었다' 라는 식의 대답은 너무도 피상적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일운동에 관한 조선총독부의 통계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3월의 통계만 봐도 848회의 만세 시위에, 총 60만 명(추정)을 웃도는 사람들이 참가했다.[323] 한편 다른 자료에 의하면, 3월부터 5월까지 시위회수 1천 5백여 회, 참가인수 총 2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324] 그 중에서 기독교인의 참가도를 3월의 통계를 중심으로 측정해 보면, 330개소(487회)의 시위지역에서 기독교인에 의한 시위 주도는 78개 지역, 천도교 주도는 66개 지역, 기독교와 천도교의 연합이 42개 지역이다.[325] 따라서 기독교인에 의한 시위는 시위발생 지역의30%로 육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삼일운동이 한창이었던 1919년 5월말에 조선충독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만세소요사건」을 전국적으로 집계한 통계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여기서는 재판에 기소된 형사피고인 및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형무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종교별로 정리한 것이다. 즉 이들은 경찰에서 체포되었다가 훈방된 경우보다도 훨씬 참가 정도나 주도적 위치 등의 사람들로서 일제의 입장에서 볼 때 죄가 중하여 기소 이상으로 형벌을 가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전체 9,080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1,979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29만 명 정도로 파악되는데, 총인구 1,600만 명에 비하면 약 1.8%에 해당한다.[326] 반면 당시의 천도교 교주 손병희의 증언에 의하면 등록교인 약 300만 명, 열심교인 약 100만 명 정도이다.[327] 이를 토대로 추산해 보면 천도교는 기독교의 약 5배~10배에 달하고, 동학혁명이래로 조직적인 면에서나 민족주의적인 면에서 국내최대의 조직이었다. 그런데 1.8%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시위주도 30%, 피체·투옥 20%를 차지하였다. 1919년 장로교 8차 총회에 보고된 피해만 보더라도, 교회당 파괴가 12동, 장로파 경영학교 파괴가 8곳, 사살된 자 41명, 매맞아 죽은 자 6명, 체포된 신도 3,804 명, 그 중에 목사·장로 등 지도자는 134명(당시 목사·장로의 13%)에 달한다.[328]

만세시위 적극가담자 종교별 분류(1919년 5월 말 현재)[329]

---

323)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작성한 기간별 혹은 도별보고서를 토대로 집계한 수치이다. 그러나 총독부 산하기관의 통계는 과잉 혹은 축소의 의혹이 짙다. 예를 들면, 집회인원이 수천명을 넘어설 경우 보고서에는 '군중다수' 혹은 '불명'이라고 집계한다. 金正明編, 『朝鮮独立運動』I·I(分冊), 原書房, 1967: 朝鮮憲兵隊司令部編, 『朝鮮三一·獨立騷擾事件』, 巖南堂書店, 1969을 참조할 것.

324) 朴殷植, 남만성訳, 『韓国獨立運動之血史』 上, 서문당, 1996, 204.

325) 朴慶植, 『朝鮮三·一獨立運動』, 平凡社, 1976, 186~188.

326) 半井清, 『朝鮮の統治と基督教』, 朝鮮総督府学務局, 1921, 22-23.

327) 近藤釼一編, 『万歳騒擾事件(三·一運動)』(2), 友邦協會, 1969, 45.

328)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8회 회록』(1919년); 민경배 역, "삼일운동 秘史8(원제 : The Korea Situation)", 『기독교사상』1966년 8·9합본호.

329) 近藤釼一편, 『萬歳騒擾事件(三·一運動)』(1), 友邦協會, 1964, 213-215.

<table>
<tr><td colspan="2">종교별</td><td>형사피고인</td><td>수형자</td><td colspan="2">합계</td></tr>
<tr><td colspan="2">불교</td><td>106</td><td>4</td><td colspan="2">110</td></tr>
<tr><td colspan="2">유교</td><td>55</td><td></td><td colspan="2">55</td></tr>
<tr><td colspan="2">대종교</td><td>4</td><td></td><td colspan="2">4</td></tr>
<tr><td colspan="2">천리교</td><td>3</td><td></td><td colspan="2">3</td></tr>
<tr><td colspan="2">천도교</td><td>1,289</td><td>74</td><td colspan="2">1,363</td></tr>
<tr><td colspan="2">천주교</td><td>53</td><td></td><td colspan="2">53</td></tr>
<tr><td rowspan="5">예<br>수<br>교</td><td>구세군</td><td>10</td><td></td><td>10</td><td rowspan="5">1,979</td></tr>
<tr><td>성공회</td><td>4</td><td></td><td>4</td></tr>
<tr><td>장로회</td><td>1,377</td><td>63</td><td>1,440</td></tr>
<tr><td>감리회</td><td>432</td><td>6</td><td>438</td></tr>
<tr><td>기타</td><td>86</td><td>1</td><td>87</td></tr>
<tr><td colspan="2">안식교</td><td>3</td><td></td><td colspan="2">3</td></tr>
<tr><td colspan="2">기타 종교</td><td>5</td><td></td><td colspan="2">5</td></tr>
<tr><td colspan="2">종교 미상</td><td>1</td><td></td><td colspan="2">1</td></tr>
<tr><td colspan="2">무종교</td><td>5,102</td><td>402</td><td colspan="2">5,504</td></tr>
<tr><td colspan="2">총 계</td><td>8,530</td><td>550</td><td colspan="2">9,080</td></tr>
</table>

이러한 통계는 기독교가 종교계에서 가장 왕성하게 삼일운동에 참가한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삼일운동에서 시위 주도 30%, 피체·투옥 20%에 이르는 기독교인의 참가율은 불과 1.8%의 기독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삼일 운동탄압의 제일선에 섰던 조선헌병대사령부는 평안도보고서에서, “騷擾와 耶蘇敎와의 關係濃密하여 管內에서 실로 耶蘇敎를 빼면 騷擾가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라고 결론짓고 있다.[330] 그 이외에도 상해 임시정부에서의 기독교인의 주도적 역할, 필라델피아 제2 독립운동에서의 주도적 역할, 국제사회에서의 기독교인의 외교적 지원, 기독여성의 활약 등 기독교인은 삼일 운동에서 혁혁한 공헌을 했다.

이러한 기독교회의 항일민족운동에의 참가는 기본적으로 식민지 통치하에서 민족의식의 고양에 근거한 것이면서도, 한편으로 기독교와 일제와의 사이의 긴장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총독부는 한일합방 이후 황민화정책을 실시하면서 이에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기독교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견제와 탄압을 펼쳤다. 특히 삼일 운동 직전에 실시한「개정사립학교규칙」(1915.3),[331]「포교규칙」(1915.10)[332] 등은 총독부의 견제대상이 기독교에 맞춰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05 인사건’을 전후로 총독부는 기독교에 대해 노골적이고 극단적인 탄압정책을 취하였다. 일련의 기독교 탄압정책에 대한 기독교인의 반감이 높아져, 기독교인의 항일애국운동의 참가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기독교 사회운동은 사회주의와의 긴장관계 속에서 기독교 사회담론 및 기독교 농촌운동 등으로 나타났다. 1920년대 전후, 사회주의가 유입되어 지식인·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갔다.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의 논리가 그들을 흡수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그 때까지 근대적 개화를 이끌어온 한국기독교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회변화를 주도할 추동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지도자들은 여전히 교

330) 朝鮮憲兵隊,『朝鮮騷擾事件狀況』, 1919: 復刻板, 市川正明編,『三·一獨立運動』第三卷, 303.

331) 「개정사립학교규칙」은 교과의 제한(특히, 종교교육금지), 종교의식 금지, 일본인 교원의 의무채용,교원의 제한(일본어능통자로 제한) 등이 주요골자이다. 이로 인해 많은 기독교계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결과를 맞았다.

332) 포교자는 총독부가 규정한 자격증을 요하고, 예배당 및 전도소의 건물은 총독부의 허가를 요하고,전도집회 및 사경회 등 대규모 종교집회는 사전에 신고하며, 종교집회에 경찰이 파견되어 집회양상을 검속받아야 하는 것이 「포교규칙」의 주요내용이다.

회지상주의·권위주의를 고수함으로써, 일반대중의 반감을 사고 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회주의자는 기독교를 '제국주의자의 앞잡이' · '인민의 아편'이라고 해 규정해 반기독교운동을 전개했다.

사회주의의 기독교비판에 대한 당초의 기독교의 반응은 사회주의의 비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기독교와 사회주의의 사회적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진영의 기독교 비판이 점차 격렬해지자, 교회지도층과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사회주의진영의 기독교비판을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규정하고, 사회주의자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다. 한편, 사회운동이나 민족운동에 참가한 기독교인 그룹은 사회주의자의 기독교 반대운동을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 농촌운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한편으로 '기독교사회주의', '사회복음' 등을 제창하면서 기독교 사회담론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이상으로 한국기독교가 사회변동에 대응한 역사적 특징을 개괄해 보았다. 벨라(R. N. Bellah)의 개념으로 바꾸어 말하면, 종교와 사회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창조적 긴장'은 현실사회의 존재양상이 종교의 신념체계 및 가치와 괴리가 있을 때 종종 나타난다. 근대한국에서 기독교는 처음에는 전통사회와 '창조적 긴장'의 관계였고,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는 일제와 '창조적 긴장'의 관계이었음을 살필 수 있었다. 그에 따라 기독교는 당시의 사회에 대해서 '창조적 긴장'이 있었다. 이러한 '긴장'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사회변동에 앞장서도록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전래초기 한국기독교 또는 초기 한국 그리스도인이 전통 사회에 대해와 의 '근대 지향' 및 '사회 개혁'의 성격은 당시의 개화적 지식인이나 청년들이 기독교에 입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맥락을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일제하에 있어서의 민족운동에 대한 기독교의 공헌은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인하여 발현된 것이고, 그로인해 한국기독교는 근대한국의 사회변동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요약하면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들 수가 있다. 1) 기독교에 의한 사회운동은 기독교의 사회적 존재 양상과 현실 사회와의 사이에 '창조적 긴장'이 생겼을 때에 형성·전개되었다. 2) 기독교에 의한 사회운동은 특정의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념적 지향의 연속성·동일성을 수반하면서 전개되었다. 3) 기독교에 의한 사회운동은 교파교회와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상으로 살펴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기독교의 '창조적 긴장'은 한국기독교가 소속한 공동체의 궁극적 가치가 위협받을 때 또는 궁극적 가치가 변동할 때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한국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적 긴장'이 발현되는 상황 안에서는 교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공동체의 궁극적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궁극적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궁극적 가치인 생명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현하신 분이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의 궁극적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 3. 문용동 전도사의 죽음에 대한 역사해석학

문용동 전도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의 101회기(2016년) 총회에서 총회 순직자 제5호로 추서되었다. 순직한 경위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용동은 1952년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리촌길 30(도장리 86번지)에서 아버지 문순봉과 어머니 김봉남의 3남 5녀 가운데 차람으로 출생했다. 1973년 장로회호남신학교(현 호남신학대학

교) 신학과에 입학하였다. 군 복무를 마치고 1977년에 복학한 후, 3학년생으로 재학중인 1979년 7월에 전남노회 여전도회연합회 파송으로 상무대교회 전도사로 부임하였다. 1980년 5월 18일부터 광주시에서 시민항쟁이 일어났다. 그날 상무대교회에서 교회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금남로에서 한 분의 노인이 특전사 부대원들에게 붙들려 구타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말리려고 나섰다. 이후 부상자 구호 및 헌혈활동 등에 가담하게 되었다.[333]

5월 22일 이후에는 수습활동으로 도철 지하실에 있는 무기고를 관리하게 되었다. 도청 지하의 무기고 안에는 다이너마이트와 수류탄이 쌓여있었다. 문용동과 함께 무기고 관리를 맡은 김영복은 군복무 시절 전투공병대 하사관 출신으로 폭약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다.[334] 당시 도청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었으므로 도청 지하 무기고의 관리도 허술하였다. 만약 이 폭약들이 실수로 한꺼번에 폭발하면 엄청난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문용동은 무기고 관리의 연장자였고 폭약에 관한 전문가인 김영복은 둘이서 의논한 결과, 계엄군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5월 24일 계엄군이 장악하고 있는 상무대에 가서 도청 지하 무기고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25일 밤에 수류탄 뇌관 해체 작업을 할 문관(군무원)이 문용동과 김영복의 도움으로 지하 무기고에 들어와서 수류탄의 뇌관을 모두 제거하고 도청을 빠져나갔다.[335] 이것으로 폭약이 한꺼번에 폭발할 위험은 사라졌다. 즉 문용동은 언제든지 도청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다. 26일에 누나와 형수가 도청으로 찾아와서 문용동을 만났다. 누나와 형수는 문용동에게 계엄군이 도청에 들이닥칠 것이니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했다. 26일 시민군과 계엄군이 협상이 결렬되고 시민군에게 다시 총기가 지급되었다. 27일 새벽 계엄군의 도청 진압작전이 시작되었다. 도청 건물 안으로 무수히 날아드는 총알을 피해 숨어있던 문용동과 김영복은 헬기에서 나오는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는 방송을 들었고 총소리도 멈추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나갔다. 그 순간에 총탄이 날아들어 앞장서서 가던 문용동은 가슴에 3발의 총탄을 맞고 즉사하였고, 김영복은 머리에 파편을 맞고 쓰러졌다.[336]

문용동의 죽음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먼저 문용동의 삶과 죽음을 신앙사적으로 조명한 호남신대 최상도 교수는 문용동의 역사참여 의식에 주목하였다. 문용동의 역사참여를 인간애와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서 4·19학생혁명으로 이어지는 역사의식으로 조명하고 있다.[337] 최상도 교수의 연구는 문용동의 일기와 설교노트를 면밀히 검토해서 나온 것이므로 매우 설득력을 가진다.

문용동 자신의 글에서도 위의 주장은 입증된다. 아래는 1977년 11월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용동의 설교노트이다.

> 요즘 세상은 모두들 잘나고 큰사람이라 남을 도와주고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기에 세상은 어지럽고 사랑이 식고 인정이 메마른 것입니다. (중략)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고 나중에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했습니다. 새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셨읍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십니다.[338]

---

333) 문용동 전도사 기념사업회, 『새벽길을 간 이』, 한들출판사, 2018, 410.
334) 김영복, 「5·18 당시 도청 지하 무기고의 진실」, 위의 책, 323-328.
335) 위의 책.
336) 위의 책.
337) 최상도, 「문용동 전도사의 삶과 죽음의 신상사적 의의」, 『새벽길을 간 이』, 한들출판사, 2018, 244-266..

「한 알의 밀알」이라는 제목의 설교노트에서도 문용동의 신앙내면을 엿볼 수 있다.

>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 목숨을 보전한다고 이순신 장군보다 15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복이나, 재산이나, 목숨만을 사랑하던 원균은 비참하게 죽을 수 밖에 없었지만 자길 버리고 자길 희생하여 싸운 이순신 장군 때문에 조국은 지킬 수 있었고 수많은 백성의 목숨을 건졌고 자신도 영원히 역사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339]

문용동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에게로 한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었다.[340]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이며 그 분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 자신 한 사람의 목숨을 내놓으심으로써 온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의 내연(內燃)은 역사인식에서의 외연(外延)으로 확장되었다. 예를 들면 4·19학생혁명에 대해서 문용동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 무언가를 위해 우리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작은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겠습니다. 조그맣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위해 우린 하나의 밀알이 됩니다.

즉 문용동에게 역사의 참여는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묵묵히 해내는 작은 하나의 밀알이 되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성립한다. 즉 문용동의 역사참여 의식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문용동의 역사참여 의식을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즉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한국기독교의 역사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위협이 있을 때 혹은 우리 공동체의 궁극적 가치에 변동이 발생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궁극적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 공동체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문용동은 바로 그 사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용동이 항쟁에 가담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기 된 상황, 즉 노인 한 분이 특전사 부대원들에게 구타당하는 모습은 단지 개인 대 개인이 저지르는 폭력을 넘어서는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궁극적 무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어떤 법적 절차나 정치적 정당성도 없이 나아가 그 무력에 저항할 힘도 없는 노인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궁극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상징적 상황이라고 여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궁극적 가치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교회의 결의나 교회의 권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개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가치인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본받는 것이다.

> X의 고난에 同參 / 그의 이름으로 아픔을 당하는 것 / 그의 것으로 인해 / 길, 진리, 생명, 빛 / 그 속에서 진실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 어쩜 그의 수난에 함께 한 것 / 아픔을 피해서 편하게만 살려는 마음 /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Θ / 아픔의 것을 찾아서 / 미련한 길을 찾아서 / 고난과 비천한 곳을 그분이 자취하시고 찾아가셨듯히 /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341]

---

338) 문용동, 「예수님의 오심」, 새벽길을 간 이』, 33.
339) 문용동, 「한알의 밀알」, 『새벽길을 간 이』, 89.
340) 문용동, 「새해를 맞으며', 『새벽길을 간 이』, 25.
341) 문용동의 시, 1979년 12월 5일.

그래서 문용동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을 하였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을 때 평소에 자신이 믿고 있던 기독교 신앙의 내면이 외연으로 발현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용동의 죽음은 단지 시민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다. 국가 안에서 궁극적 무력을 갖고 있는 군대가 무고한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죽임을 자행하면서 우리 사회의 궁극적 가치를 짓뭉개는 상황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가치인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을 본받아 자신을 내던짐으로써 항거한 그리스도인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닫는 말

한국기독교는 역사적 궤적에 따라 우리 사회와 몇 번의 '창조적 긴장'있었다. 이를 요약하면 '창조적 긴장'은 한국기독교가 소속한 공동체의 궁극적 가치가 위협받을 때 또는 궁극적 가치가 변동할 때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한국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적 긴장'이 발현되는 상황 안에서는 교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공동체의 궁극적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궁극적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궁극적 가치인 생명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현하신 분이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의 궁극적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제로 볼 때, 문용동 전도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닥뜨린 그리스도인이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는 신학적 질문에 대한 하나의 선택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아가 그의 삶과 죽음은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역사의 변동 상황에서, 즉 사회의 궁극적 가치가 위협 받거나 궁극적 가치가 변동 될 때 그리스도인이 취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끝으로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역사로부터 볼 때, 당대 사회의 궁극적 가치문제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마땅하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운동가가 될 필요는 없다. 모든 사회문제에 사사건건 나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도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문제를 배제하고 회피하니까 사회 영역에서 형성된 이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좌우하게 된 게 아닌가. 그 이념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로 잡혀있는 것은 아닌가 반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궁극적 가치가 위협 받을 때 또는 우리 사회의 궁극적 가치가 변화하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가치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사회에 표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끝)

**<참고문헌>**


(도서)

-. 김 구,『백범일지』, 돌베개, 2002.
-. 노치준,『일제하 한국기독교 민족운동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 류대영,『개화기 조선과미국선교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 문용동 전도사 기념사업회,『새벽길을 간 이』, 한들출판사, 2018.
-. 민경배,『韓国基督教会史』, 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 朴殷植, 남만성 역,『韓国獨立運動之血史』上, 서문당, 1996.
-. 박정신,『한국기독교사 인식』, 혜안출판, 2004.
-. 신용하,『갑오개혁과 독립협회운동의 사회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윤경노,『한국근대사의 기독교적 이해』, 역민사, 2003.
-. 이능화,『朝鮮基督教及外交史』, 朝鮮基督教彰文社, 1928.
-. 이만열,『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지식산업사, 2000.
-. _____,『한국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 장규식,『일제하 한국기독교민족주의 연구』, 혜안출판, 2001.
-. 전택부,『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 범우사, 1994.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한국기독교의 역사』I, 기독교문사, 1989.
-. Bellah, R. N., 河合秀和訳, 「近代アジアにおける宗教と進歩(근대 아시아에서의 종교와 진보)」,『社会変革と宗教倫理』, 東京:未来社, 1973.
-. Gale, J. S., 신복룡 역,『전환기의 조선』, 집문당, 1999.
-. Jones, G. H. & Nobble, W. A., *The Korea Revial*, New york,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Methodist Eposcopal Church, 1910.
-. 近藤釼一編,『万歳騒擾事件(三·一運動)』(1)~(2), 友邦協會, 1964(1), 1969(2).
-. Ladd, G. T., *In Korea with Marquis Ito*, Longmans, Green & Co., 1908.
-. 金正明編,『朝鮮独立運動』I·I(分冊), 東京: 原書房, 1967.
-. 朴慶植,『朝鮮三·一獨立運動』, 東京: 平凡社, 1976.
-. 半井清,『朝鮮の統治と基督教』, 京城: 朝鮮総督府学務局, 1921.
-. 森 孝一,『宗教からよむ「アメリカ」(종교로서 읽는 「아메리카」)』, 東京: 講談社, 1996.
-. 朝鮮憲兵隊司令部編,『朝鮮三一·獨立騒擾事件』, 東京: 巌南堂, 1969.
-. 朝鮮憲兵隊,『朝鮮騒擾事件狀況』, 1919: 復刻板, 市川正明編,『三·一獨立運動』第一~三卷. 東京: 巌南堂, 1969.

(논문)

-. 김승태, 「한말 일제침략기 일제와 선교사의 관계<1894~1910>」,『한국기독교와 역사』6호, 1997.
-. 류대영, 「한말 기독교신문의 문명개화론」,『한국기독교와 역사』22호, 2005.
-. 민경배, 「근대한일관계에 있어서의 미국과 선교사의 위치」,『基督教思想』12月号, 1970.
-. _____, 「한국기독교와 그 민족교회의 成立」,『한국근대화와 기독교』, 숭전대학교출판부, 1983.
-. 이만열, 「한말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형성과정」,『韓國史論』I, 1973.

-. 조영렬, 「재한선교사와 한국독립운동」,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식』 29호, 1990.
-. 한규무, 「한국기독교 민족운동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기독교와 역사』12호, 2000.

(신문 및 정기간행물)
-. 『그리스도신문』, 1901년 10월 3일자.
-. 『그리스도신문』, 1906년 6월 7일자.
-. 『大韓每日申報』, 1905年 10月 3日字.
-. 『독립신문』, 1897년 12월 23일자.
-. 『죠션크리스도인회보』, 1898년 6월 1일자.
-. "The Direct Effect of The Revival," *The Korea Mission Field*, Vol. 4, No. 5, 1908, p.70.
-. "The Awakening of the Students," *The Korea Mission Field*, Vol. 4, No. 6, 1908, p.84.

❒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학술심포지움 '5.18민주화운동과 기독교' 제6토론 (2020. 9. 5)

# 논찬:
# 이치만 교수의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한국기독교 연구」를 위한 試論

박태식 신부
(성공회대)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는 어디까지인가? 교회의 가르침과 현실의 정치적 상황 사이에 어떤 연계성이 있는가? 이런 질문은 아마 그리스도교가 태동하던 시절부터 꾸준히 이어져 내려왔을 것이다. 말하자면 기독교의 유구한 역사와 맥을 같이하는 질문들인 셈이다. 특히, 요즘 한국사회에서는 이 질문이 매우 예민하게 다가온다. 바로 전광훈 목사에게서 빚어진 일련의 사태 때문이다. 전 목사 덕분에 죄 없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 욕을 먹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 때문이지는 몰라도 이치만 교수가 발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한국기독교 연구」를 위한 試論**'이라는 제목이 눈에 금세 들어왔다. 과연 오늘의 한국 상황에서 어떤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 발표문을 간단히 요약하고, 이 글이 갖는 의미를 찾아본 후에 몇 가지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한국기독교 연구」를 위한 試論**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본 이유는 '**여는 말 - 문제의 소재와 연구방법론**'에서 이치만 교수의 중요한 입장이 도출되기에 단순히 '여는 말'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단락에서 이치만 교수는 근대 이후 우리나라 기독교의 현실 참여 역사를 요약했고, 결국 한국기독교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종교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로버트 벨라(R. N. Bellah)의 이론에서 '창조적 긴장'이라는 개념에 주목한다. '**1. 근대한국의 사회변동과 초기 기독교**'에서는 한국기독교의 근대사를 살펴볼 때 전체적으로 정치참여에 대한 경계와 배제 경향이 지배적이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정책에 대한 순종의 역사에 가깝다고 한다. '대부흥 운동'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며 '대부흥 운동'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었던 내면적 성찰이 현실에 대한 무관심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2. 일제하 기독교 사회운동에 관한 역사해석학**'에서는 벨라가 제시한 개념인 "'창조적 긴장'은 현실사회의 존재양상이 종교의 신념체계 및 가치와 괴리가 있을 때 종종 나타난다."(12쪽)고 하여, 일제강점기의 기독교운동이 바로 '창조적 긴장'을 통해 잘 이해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다시 말해 한국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신념체계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사회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지키려 했고 이것인 기독교운동으로 드러났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종파를 가리지 않고 33인에 참여한 것이 그 훌륭한 증거다. (11쪽 도표를 주목하기 바란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기독교의 현대사에서 '창조적 긴장'이 발현된 예가 있을까? '**3. 문용동 전도사의 죽음에 대한 역사해석학**'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치만 교수는 먼저 문

용동 전도사의 일생을 간단히 정리한 뒤 그의 항거와 죽음을 통한 역사참여의식이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은 공동체의 가치가 위협을 받을 때, 문 전도사는 그 가치를 지키고자 용감하게 투신을 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이 발표문이 갖는 의미를 몇 가지 언급해 보겠다.

1. 이제까지 논평자는 개인적으로, 한국기독교 역사에 대해 여기저기서 얻어들은 단편적이고 산만한 지식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치만 교수의 글을 통해 맥을 찾아 정리할 수 있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2. 한국기독교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눈에 띄었다. 역사는 결코 친절하지 않다. 그래서 언제나 시대에 맞는 다양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만일 누군가 힘을 써서 한 가지 해석만 허용한다면 역사의 숨을 끊어놓는 잔인한 조치일 것이다. 독재정권 시절에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 문용동 전도사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재발견한 것은 그만큼 다양한 차원에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해석의 다양성은 역사에 생명을 부여한다.

3. 글을 통해 과거의 역사가 현실을 바라보는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다. 말하자면 오늘날 한국기독교에 나타난 극단적 양극화의 뿌리가 이미 한국기독교 역사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다. “한국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적 긴장’이 발현되는 상황 안에서는 교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공동체의 궁극적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부에 나오는 말이다. 과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가 보이는 뜻이다.

글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한두 가지 말해보겠다.

이치만 교수는 **여는 말**에서 ‘창조적 긴장’이 종교에 의한 사회변동의 기능이 가장 활발한 패턴이기는 하지만 역사상 소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논평자의 소견으로는 오히려 기독교 역사 전체가 ‘창조적 긴장’의 역사가 아닌가 싶은데 왜 소수밖에 없었다고 했는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만일 그것이 벨라의 견해라면 왜 그렇게 정의 내렸는지 알고 싶다.

다음으로 궁금한 점은, 보기에 따라서는 전광훈 목사의 사례도 ‘창조적 긴장’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기가 그려놓은 한국기독교 공동체의 가치가 현 정권에 의해 위협을 받았기에,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다는 식으로 자평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창조적 긴장’이라는 개념이 오용되지 않으려면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적합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편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란다.

좋은 글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례들을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학술심포지움 '5.18민주화운동과 기독교' 종합토론 (2020. 9. 5)

# 5.18민주화운동과 기독교

## 종합토론

**좌장 박용수**
(전남대5.18연구소 전임연구원
한신대학교 초빙교수)